

2021. 11. 09

사회대변혁 특별포럼 2021

■ 특별 포럼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2021년 11월 9일(화)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0:00 - 17:0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YouTube 생중계

경향신문

■ 머리말

11/9(화), “2022 새로운 대한민국 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특별 포럼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사회대변혁 특별포럼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가 오는 11/9(화)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교육격차 문제는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진단의 요구뿐 아니라, 직업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반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쟁의 과정과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자칫 기회의 격차는 외면한 채 형식적 공정과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능력주의’는 특히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2014년 부산의 한 학교에서 중간고사 만점자에게 일주일 동안 먼저 점심 급식을 먹도록 한 일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일이 놀라웠던 것은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시기 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도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워 급식을 먹게 한 일이 알려져 이런 비교육적인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가 ‘오징어 게임’이 가리키는 불평등 문제에 공감하며 열광한 것은, 1등만이 살아남는 드라마 속 풍경이 우리 삶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른들의 삶보다 학생들의 삶에서 더 폭력적인 풍경을 목

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력·소득·자산의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불평등 사회에서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절차적 공정성은 담보한다 하더라도 결과적 공정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능력주의의 배신’,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메시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자신의 성취가 운에 따른 것이라는 겸손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지만, 신분제를 대체하는 능력주의는 공정의 신화가 되어 시험만능주의 사회를 야기하고 오히려 계층간 차별을 심화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의 다차원성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사회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meritocracy)’ 이데올로기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합니다. 교육격차로 상징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현실 속에서 능력주의가 낳은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상상해보는 일은 매우 시급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연 능력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각 영역의 전문가와 학생, 청년, 학부모 주체가 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포럼은 발제자와 토론자 등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2, 능력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 11. 0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 이탄희입니다.

오늘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 능력주의를 넘어서> 포럼 개최에 힘써주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대표님과 경향신문 김석종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능력주의의 다른 말은 ‘시험 만능주의’입니다. 시험 만능주의가 공정의 동의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개개인이 처한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단편적 지표로만 사람을 서열화하기 때문입니다. 승자독식을 당연시하고, 낙오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시험 만능주의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정 담론은 ‘기회의 평등’ 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스스로 노력만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에 내몰려 있습니다.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얼마 전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청소년기 공부방의 유무와 환경 차이가 성인이 된 이후 사회·경제적 계급으로 이어지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같이 선택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경쟁의 출발선이 달라지고,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것을 두고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 담론은 모두를 위한 공정 담론이어야 합니다. 시험 만능주의에 매몰된 그들의 공정이 아닌 울타리 밖에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모두의 공정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계고나 전문대를 졸업해 비정규직 일자리에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까지 담론의 장으로 포섭해야 합니다. 소외도 없고, 결과도 정의로운 모두의 공정 담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포럼이 시험 만능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능력주의의 실체를 분석하고, 모두를 위한 공정 담론의 방향을 찾아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모인 지혜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공정을 논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주의를 넘어서는 협력주의, 서열주의가 아닌 평등주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평범한 시민들이 차별도 좌절도 없는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경기 용인정)

■ 축사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능력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특별포럼인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마련해주신 이탄희 의원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향신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의와 공정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교육격차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우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한 명의 아이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과 고민들은 오늘 포럼의 주요한 논의들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공정이 없는 신뢰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찾으며 좀더 깊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숙과 도약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9일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이 시의적절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지현·홍민정 대표님과 이탄희 의원님, 연합뉴스 성기홍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진 여러분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주의가 공정으로 대표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능력주의는 시험만이 공정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과 능력주의가 사실상 동의어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되며, 능력에 따른 차별이 정당화되고 문제의식 또한 얼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양극화 문제 해결과 진정한 공정 가치의 정착을 위해, 공정의 기준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형식적 공정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실질적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중요하게 살펴 봐야 합니다. 주병기 교수님의 기회 불평등 수준을 수치화한 ‘개천용지수’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부모 소득이 하위 20%에 속한다면 소위 명문대(서울대 등 5개 대학과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능력주의 현상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진단하고 올바른 공정을 확립할 대

안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위해, 이제 새로운 공정담론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과 2022년 새 정부가 새로운 공정 담론의 판을 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 축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하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탄희 의원님, 경향신문 등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인류의 진보는 차별을 없애온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지향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또, 보통의 성실함 정도면 충분히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믿음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차별은 어느새 공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끝없는 무한 경쟁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의 능력주의는 보이지 않는 구조화된 차별일 뿐입니다. 위기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삶의 끝자락에 서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은 공정이 아닌 인간성의 파괴일 뿐입니다.

경쟁은 자기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제의 자신과 경쟁하며,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공공선을 위한 정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구어 온 현재는 늘 누군가의 꿈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포럼은 이런 정의로운 공정을 꿈꾸는 포럼입니다.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나누고 함께 방안을 찾을 때, 우리는 보다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한발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대표)

■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경향신문이 같이 준비하신 이번 포럼(“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포럼 주제인 ‘능력주의 극복’이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신분제 사회를 극복했던 능력주의의 긍정성은, 오늘날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다른 격차와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영역은 다른 영역보다도 ‘능력주의’ 폐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우연히도 이번 포럼의 계기가 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의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적 기반 능력주의’의 인식과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책이 능력주의 신화에 균열을 내는 좋은 시도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럼 개최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니, 바로 저의 소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 시대적 키워드인 ‘공정’의 의미가 절차적 공정의 한계를 벗어나고, ‘성적기반 능력주의’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우리 ‘교육’ 영역에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서울시교육청도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

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과 대안 제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 축사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감 민병희입니다.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포럼에 함께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을 대표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고, 이미 살아온 삶을 극적으로 솔직하게 보여줄 뿐이지만 우리 사회가 철저히 능력주의에 지배되어온 세상임을 은유합니다.

경쟁이란 게 참으로 잔인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내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를 짓밟고 서게 됩니다. 세상 어떤 평가 시스템보다 시험 점수로 가리는 경쟁만이 그 어떤 것보다 불법이나 편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공평한 평가 시스템이라고들 주장하고 믿고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시험 만능주의가 정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 수행 역량이나 성과, 기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시험 점수로 자격을 부여하고 이익을 인정하며 공평함을 말하고 정당화하지만, 불평등한 출발점이나 제한된 기회에서 오는 격차는 슬그머니 감추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특목고에 진학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연히 수도권 대학에 들어갈 확률도 저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얼마 전 가난한 지역에 사는 어린이

일수록 교통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집값이 싸니까 주거 공간과 도로 사이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도 넉넉하지 않은 곳이 많겠지요. 누구라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더 잦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세상은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공평한 룰이라고 믿게 하고 그 폐해를 깨닫게 하는 힘이나 감수성을 무디게 합니다. 미국 미식축구 코치인 베리 스위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3루 타를 친 줄 안다!”

이제 우리는 능력주의 폐해를 분명히 깨닫고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낼 논의를 깊이 있게 나누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시험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또 다른 능력을 떠벌리는 양의 탈을 쓴 능력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설령 능력을 썰 수 있다고 한들 무엇을 능력으로 썰 것인지, 능력만큼만 대우하는 게 과연 옳은지, 우리 사회의 공공재는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 고민이 앞서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성의 실현에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교육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저마다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아이 하나 하나가 소중하게 빛나도록 하는 교육이 펼쳐져야 합니다. 시험 점수가 전 생애에 걸친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을 열어가는데 강원도교육청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이 ‘능력주의를 넘어서’ 라는 주제에 걸맞게 다가오는 2022년 우리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왁자지껄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9일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 목 차

제1세션

- 좌 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발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1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 제1토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 및 정책학과 교수) 23
“불평등 및 능력주의에 대한 소고”
- 제2토론: 박은선 (변호사) 35
“우리들의 불공정한 공정, 우리들의 가짜 능력주의”
- 제3토론: 김춘희 (학부모) 49
“성적으로 줄 세워진 좌표가 너는 아니란다”

제2세션

- 좌 장: 곽노현(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 주제발제: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7
“능력주의 산실이 된 학교와 시험”
- 제1토론: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75
“큰 시험 한 판, 작은 시험 여러 판”
- 제2토론: 엄수정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77
“N수 권하는 사회”

- 제3토론: 전경원 (경기도청 교육정책자문관) 85
“능력주의의 산실이 된 학교와 시험에 대한 토론문”
- 제4토론: 권하경 (고등학생) 99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

제3세션

- 좌 장: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 주제발제: 구분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103
“능력주의를 넘어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을 상상한다.”
- 제1토론: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 123
“능력주의를 넘어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을 상상한다.” 에 대한 토론문
- 제2토론: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127
“왜곡된 능력주의를 넘어 진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 제3토론: 이서연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활동가) 137
“ ‘공정’ 이 아닌 ‘정의’ 로, 능력주의 넘어 경쟁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 제1세션 발제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1. 공정한 사회와 한국경제 재도약

1.1. 공정한 사회와 경제발전

지금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바로 공정한 사회가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정과 정의 그 자체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제발전과 관련해 공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공정한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한 분배다. 두 가지 모두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공정한 시장은 소비자 혹은 기업 등 어떤 경제주체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거래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거래의 총이익을 기여한 만큼 나눠 갖는 시장이다. 불공정한 시장의 대표적인 예로 독과점이 있다. 독점기업은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의 편익, 노동자 혹은 협력 하청업체의 성과를 빼앗아 갈 수 있다. 독과점의 횡포는 다른 경쟁기업이나 협력업체의 혁신을 가로막는다. 진입장벽,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의 방식으로 혁신의 기회를 차단하거나 이익을 편취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배달노동자, 임차인 등의 협상력은 고용주, 프랜차이즈사, 플랫폼사업자나 택배사, 임대인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독과점의 횡포가 여기서도 발생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의 지위를 높여 수평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공정한 시장이 형성된다. 공정한 시장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이론이다. 이런 공정한 시장질서가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공정한 분배 역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들도 이 점을 강조한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커질수록 계층 간 장벽은 높아지고 교육, 역량개발, 창업, 혁신을 위한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도 기업도 줄어든다. 경제적 약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 복지제도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삶을 지켜줄 때 약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다수의 약자들이 참여할 때 혁신이 촉진되고 경제 발전의 동력도 생긴다. 한국경제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키우는 복지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복지제도는 공정과 정의 그 자체의 도덕적 목적도 의미가 있지만, 이처럼 경제발전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불평등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능력을 키우고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니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이 있다. 바로 인종이나 성 차별 혹은 출신 지역이나 가구환경이 열악한 사람에게 불리한 기회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이것을 기회불평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불평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정도로 계층 장벽이 높은 사회에서 약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다수의 약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특권층의 기득권 생태계 속에서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으로 장벽을 낮추면 다수의 약자들도 역량을 키우고 이것이 밑받침이 돼 혁신이 활성화된다. 앞에서 말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재벌, 독과점 등 강자들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을 독점하게 되면 대다수의 약자들이 나눠가질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를 근절해야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도 커진다. 따라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하지만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1.2. 한국 사회의 공정성 진단 : 불공정 시장, 구조적 담합과 양극화

우리 경제는 빠르게 성장을 거듭했지만 사회, 제도 그리고 문화의 성숙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국가권력과 행정의 말단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부패들은 많이 줄어

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와 중대 부패다. 아직도 개발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관행과 부조리가 기업과 사회에 뿌리박혀있다. 세습경영과 친인척의 먹이사슬이 뒤엎힌 재벌 대기업집단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각 부문에서 권력집단의 엘리트들이 민간부문의 이권과 밀착된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만들어져 있다. 최근의 가짜 수산업자 사건,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횡령과 대기업 뇌물수수, 부산의 엘시티 사건 같은 토건사업비리 등 권력과 민간부문이 유착되어 벌어지는 부패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들어난 범죄만 이런데 들어나지 않은 범죄와 범망을 피해 일어나는 부패는 말할 것도 없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검찰 권 남용, 재벌과 권력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에 대해 관대한 사법 관행 등 권력 기구, 관료, 언론이 거대한 구조적 담합을 형성하여 지대추구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소수의 강자가 국가 공동체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으니 다수의 국민들이 나눌 수 있는 몫은 줄어들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정부의 여력도 시장에서 약자를 대변할 협상의 여력도 부족하다. 결국 힘 없는 다수 국민들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층 간 장벽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약자들이 기회를 상실한 기회불평등한 사회는 불공정, 부패 그리고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불평등 함정과 경제발전의 함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실제로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높다. 근로환경, 건강 그리고 삶의 질 격차는 더 심하다. 최상위와 최하위 임금격차, 저임금 근로자 비율 같은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오래 전부터 OECD 회원국 최상위권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수와 평균노동시간도 최상위권으로 악명 높다. 과거 희망의 계층사다리로 여겨지던 교육도 계층사다리를 걷어차는 계층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부패와 불공정을 청산하지 않고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고통을 감수하고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던 모방·추격형 경제였지만 더 이상 이렇게 발전하기 어려운 단계다.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적 역량과 창의성이 필요한 단계다. 국민 개개인, 조직과 기관, 사회 등 각 단위의 혁신역량을 키워야 발전하는 단계다. 강자가 기회를 독점하고 약탈하는 불공정 속에서 그리고 국민 다수가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협 놓인 사회에서 교육도 역량개발도 힘들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 보다는 현실 안주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사회에서 도전적 사업가도, 창의적 혁신가도 만들어지기 어렵다.

1.3. 한국 사회에 필요한 공정은?

공정에 대한 많은 어려운 사상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관점에서든 앞에서 말한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패는 바로 잡아야 한다. 재력과 권력을 가진 강자들이 약자들의 성과를 편취하는 약탈적 자본주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분배와 관련된 사회기본구조는 아래 세 가지 공정의 원칙에 지배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누구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기회평등의 원칙이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보육, 교육과 의료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 이유다. 둘째는 사회적 협력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공정한 성과배분의 원칙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공정한 격차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의 불공정을 규율하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교정한다. 셋째는 가혹한 불운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보호받는 안전한 삶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원칙이다. 건강, 고용, 연금, 산재보험 등이 이런 원칙에 기반한 제도다. 기초생활보호제도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사회는 이 세 가지 공정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충의를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시장의 소득격차는 너무 높고 이를 교정해야 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다.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허술하여 일하다 다치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난과 사고 등 가혹한 불운으로부터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하지도 못한다.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차별이 선진국 최상위 수준이고 사회계층 이동도 갈수록 어려워 기회불평등도 큰 문제가 됐다. 우리 사회는 세 가지 공정의 원칙 어느 하나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능력주의를 불공정한 한국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능력주의는 능력을 심사하는 절차를 정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능력에 따라 취업 여부, 직위 승진 여부 혹은 다른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능력주의가 그럴 듯해 보이는 이유는 절차적 공정성 때문이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

다. 절차적 공정성은 실질적 공정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능력주의는 앞에서 말한 공정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 어느 하나에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허한 생각이다.

더 큰 문제는 능력주의가 불공정의 온상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만큼 능력주의로 작동하는 제도도 없을 것 같다.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은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과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가 초래한 불공정의 사회적 비용을 직접 혹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경험해왔다. 능력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시장에서 능력주의는 양육강식의 정글을 용인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든다. 공정한 분배에 대한 원칙도 없고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는 강자만 갖는 사회, 다수에게 위험한 사회가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관한 권리,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한 것이다.

능력주의란 안일한 기준은 구조적 차별과 기회불평등이란 가장 나쁜 불평등 문제에 무기력한 사회를 만든다.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의 지속은 차별받는 집단과 기득권 집단의 뚜렷한 구분을 만든다. 계층화된 사회에서 능력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소속된 집단의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으로 만들어진다. 차별받는 집단에서는 능력을 키울 기회가 제한되고 능력주의 사회에서 그 차별에서 벗어날 자유도 박탈당한다. 능력주의는 이런 구조화된 차별과 기회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하게 된다. 미국이 오랫동안 실시해 온 적극적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능력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소수집단, 이민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우대조치를 도입한다. 공정에 대한 첫 번째 기본원칙, 기회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다. 부문 간, 기업 규모 간, 고용형태 간 소득과 삶의 질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이 또한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라는 안이한 자세로 노동시장을 규율하여 만들어진 문제다. 그 해법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강수를 택했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가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세밀한 추진 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점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능력주의에 반한다는 한심한 주장도 많았다. 능력주의가 만든 불공정한 사회가 능력주의로 풀리겠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구현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

제도 없을 것이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기회평등과 분배정의가 실현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대다수가 과감한 혁신에 도전할 수 있다. 그것이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기술 선도국이 되는 길이다.

2. 공정한 사회 만들기 : 교육, 취업, 기업 활동의 성공사다리

2.1.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 강화

과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우수한 인적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계층 간 장벽이 높지 않았고 공교육이 빠르게 확산되어 국민 개개인이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을 꿈 꿀 수 있었다. 빠른 경제성장이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고 기술과 역량도 같이 성장하게 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도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실패했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지속되지 못했고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과거 한국경제가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교육이 계층사다리로서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교육을 통해 성공할 기회를 많이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많은 기회가 다시 교육과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비록 시장에서는 노동착취가 일상적이었고 정부는 복지를 희생하며 성장만 강조했지만, 교육과 인적자본 축적은 지속됐고 그래서 성장도 지속됐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기적은 저개발 단계의 모방·추격형 경제에서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고도의 기술, 전문성, 창의력이 필요한 단계에서 복지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같다. 특히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장점,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고도화함에 있어서 복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복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면 다수의 국민들이 인적자본을 개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경제를 좌초하게 만드는 암초가 된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혁신 인재가 제대로 양성, 배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과학기술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진출해야 지금의 기술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직업 선호도 조사 등을 살펴보면 특히 학업성취도가 높고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이러한 혁신 분야에 대한 선호보다는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이다. 열악한 노동시장과 낮은 삶의 질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더 많은 인재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분야에 진출하도록 하려면 국민 전체적으로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 분야의 전망이 밝아져야 한다. 교육, 취업 그리고 창업의 계층사다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과거 계층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은 이제는 계층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이용하여 명문대(최상위 5개 대학과 전국 대학 의약학 전공분야) 진학률을 비교해보면 가구환경이 열악한 학생은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10명 중 7명은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얻어진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대학가는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대학가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다. 2020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보면 소위 SKY라 불리는 3대 명문대의 신입생 중 소득상위 20% 가구에 속하는 학생이 55%라고 한다.

이렇게 사회계층 간 대학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되면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은 일찍부터 포기하고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있는 집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고등교육은 다수의 없는 집 인재들의 잠재력을 놓친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는 부자 집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미래 한국을 이끌 혁신적 리더들을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발굴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 모두의 손해로 돌아온다. 이것이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세계는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수시전형같이 고등학교를 차등화해서 평가하거나 수능점수로 줄 세우는 방식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이 들어났다. 대학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위 소득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는 것이다. 법전문대학원과 의약학계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입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계층차별 대학으로 구분해 재정지원 및 연구지원을 제한해야 한

다. 이런 특단의 조치없이 정시비율과 수시비율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2.2. 취업, 창업 그리고 기업의 성공사다리와 ESG 경영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 그리고 기업활동을 통한 성공사다리도 충분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변에서 보는 파트타임 알바생도 성공해서 유명인사가 되는 시대다. 기업도 전통적인 학력이나 학벌로 유능한 인재를 뽑는, 판에 박힌 채용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졸 인재 채용을 늘리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취업에서 발생하는 계층간, 지역 간 기회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업의 성공사다리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공정한 노동시장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휴일도 없이 주당 50시간, 60시간 일하고 최저생계수준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다.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경우도 많다. 나라는 선진국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남성-여성 간 근로소득 격차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너무 크다.

우리 경제에도 이제 성공적인 IT 기업들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수출 주력 산업에서는 여전히 성공적인 기업성장 사례는 드물다. 아직도 기업생태계가 극소수의 대기업을 정점으로 소수의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절대 다수의 소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창업과 중소기업 단계를 거쳐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기업성장의 성공사다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수익을 총수 일가가 빼돌리는 나쁜 경영행태, 우리 경제 각 부문의 정실주의 관행과 정관계 권력이 동원된 부패한 카르텔도 건설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창업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 경제의 최대 피해자는 다수의 힘없는 서민과 노동자들이다. 불공정한 시장경제의 강자들이 경제적 지대를 독점하면 다수의 약자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왔다. 사회적 책임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와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글로벌 거버넌스 때문에 이제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은 장기적 위험관리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투자유치, 수익창출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탄소배출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유발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도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으로 촉발된 ESG를 강조하는 자본주의는 기업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공급망에서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는 'RE100' 선언을 앞 다퉈하고 있다.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여기 합류했다. 이런 대전환이 한국 자본주의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ESG성과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불공정한 자본주의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성과와 합리적 지배구조가 만드는 성과의 잠재력이 크다. 지금까지 무시됐던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와 역량을 중심에 두는 기업경영이 필요하다.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요시하는 기업경영이 확산돼야 한다. 소수의 대기업에 특권과 투자를 집중해서 발전하던 시대는 지났다. 개별 기업의 역량만이 아니라 공급망과 기업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의 혁신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성숙한 국민 의식이 있어야 불공정한 거래와 부당한 사익 편취와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엄중히 보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수십 년을 거둬들여 선진국 단계에 진입했지만, 공공부문의 감독기구, 권력기관, 관료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은 갈아입어야 할 때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이 중대한 기업 범죄에 관대한 처벌은 근절돼야 한다. 경제규모와 발전단계에 걸맞는 엄격한 감독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경제는 지난 100년 동안 꾸준히 2% 수준의 성장을 지속했다.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기업생태계가 형성됐다. 반독점과 공정거래에 대한 공적

감시와 사법적 처벌이 엄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력이 있는 강자들이 혁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독해야, 창업, 신규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우리도 약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공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 참고자료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지속발전 과제¹⁾

성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는 한국, 대만, 일본, 동아시아 3국을 포함한 성공적 경제개발 사례에서 보이는 중요한 조건으로 불평등 완화, 기회평등, 그리고 교육과 인적자본에 대한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포용적 국가, 대외무역, 기술이전 그리고 혁신적 시장경제로의 구조개혁도 강조하였다.²⁾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선진국 단계에 진입한 한국, 대만, 일본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에 있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과도한 불평등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선진국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³⁾ 선진국들의 불평등과 경제발전에 대해 1990년대 이후로 쏟아진 많은 연구들이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이른바 포용적 성장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이라는 국제기구들의 제안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다. 포용적 성장전략은 정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과 건강에 대한 공공의 투자를 확충해야 양질의 인적자본 축적이 지속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

개발도상국 모방-추격형 경제발전 단계를 지나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든 한국경제가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과거와 같은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에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런 조건들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한국경제의 과제이다.

1) 이 장은 단행본 <지속가능한 공정경제>(이한주 외 지음, 2021년 시공사)의 제15장(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일부를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2)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2008), “The Growth Report: Strategies for Sustained Growth and Inclusive Development”, IBRD/World Bank.

3) OECD (2014, 2015)

4) OECD(2014). OECD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OECD(2015). Is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1. 삶의 질과 부패

(정부이전지출 포함) 가계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57.2%로 OECD 평균인 69%와 큰 격차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있다. 양적인 경제성장에 비해 가계지출의 성장은 더디었던 것이다. 그만큼 삶의 질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OECD는 2017년 건강, 교육, 주거, 노동시간, 직무부담, 여가, 안전, 환경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집계하여 삶의 질을 기준으로 회원국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⁵⁾ 한국은 국내총생산은 OECD 회원국 평균에 근접했지만 가계의 물질적 조건(가구소득, 부, 주거 등)과 삶의 질(일-여가 균형,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삶의 만족도 등)은 중위 값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삶의 질은 중위 값에 크게 못 미쳐 동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민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소득, 높은 가계부채, 그리고 장시간 근로(평균 노동시간 OECD 회원국 중 2위)와 높은 직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산업안전도(산업재해 사망률 1위) 등이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인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부패인식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최근 발간된 OECD 자료에서 한국 국민 중 30%만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는 OECD 평균 43%와 큰 격차가 있고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자료에서 우리 국민 다섯 중 네 명에 가까운 79%가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4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부패인식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2017년 부패인식도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전체 180개 조사국 중 51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남미 국가들과 비견될 만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최근 3년 간 부패인식도는 꾸준히 개선되어 2020년 평가에서 39위로 올라섰다.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낮은 사회적 신뢰와 높은 부패인식의 배경에는 공공부문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력형 부패와 재벌 중심의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있다. 고위관료들이 피감기관 혹은 관련 민

5) OECD, 2017, How's life in 2017.

6) OECD, 2019a,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간부문에 재취업하고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서는 전관예우를 통해 권력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권력형 부패로 공공부문의 감시·감독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공정거래, 금융감독, 산업안전, 노동감독 등 각 부문에서 허술한 감시 체계의 문제가 끊임없이 들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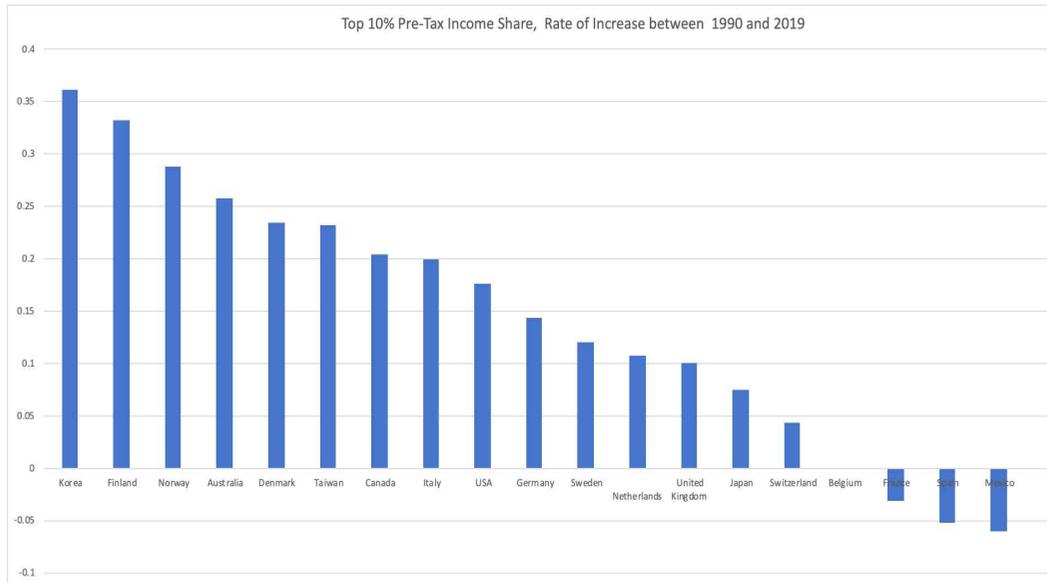
이처럼 부패한 관행을 근절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공공부문이 정상화되어야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재벌과 대기업의 친족 경영과 구시대적 경영권 세습 풍토에 최적화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상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질서가 만들어지고 한국경제의 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

2. 불평등과 양극화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경제성장 만큼이나 빠르게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World Income Database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상위 10% 부유층의 (세전 개인)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34%에서 2019년 46%로 증가하여,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평등도의 변화율이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처분)소득불평등도를 기준으로 1990년대 중반에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평등한 사회에서 2017년에는 여섯 번째로 높은 0.355의 지니계수 값을 기록한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된 것이다.⁷⁾ [그림2]은 이러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가처분가구소득의 지니계수와 백분위율(P90/P10), 두 가지 지표로 나타낸 자료이다. 이 그림의 화살표의 길이는 소득불평등의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데,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소득불평등도가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7) OECD(2019b). Income inequality(indicator). doi: 10.1787/459aa7f1-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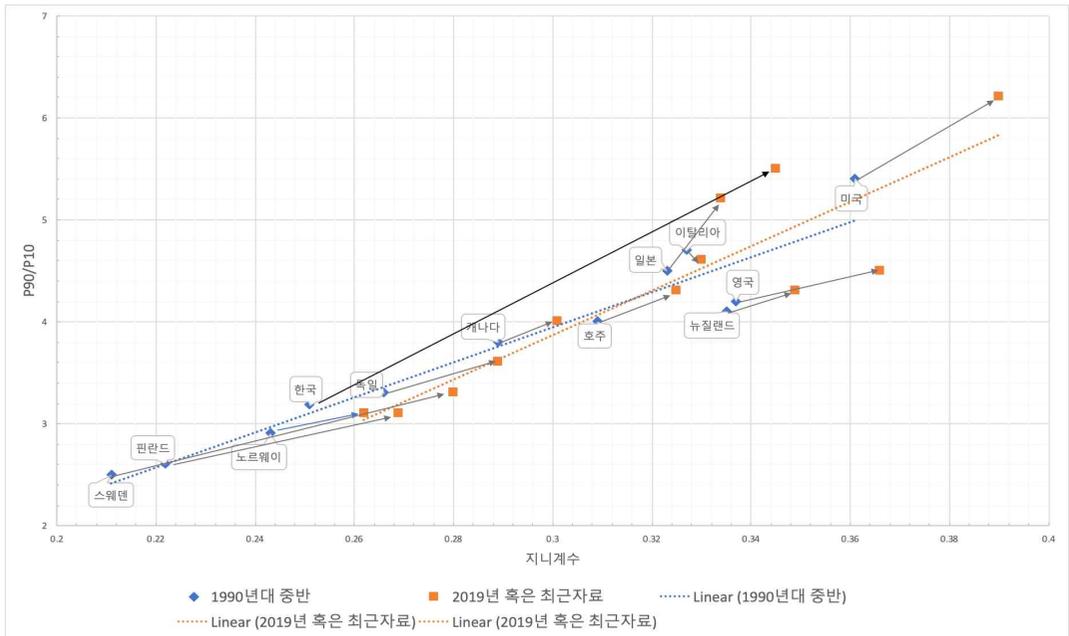
[그림 1] (세전소득)상위10%집중도의 변화: 1990년-2019년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도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중위소득과 최하위 10% 소득 간의 비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다. 소득 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은 17.4%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고, 특히 노인 빈곤율은 43.8%로 가장 높다. 임금 격차 역시 과거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나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저임금(중위임금 2/3 미만) 노동자 비율과 상위임금(P90)과 하위임금(P10)의 비율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이용하면 둘다 OECD 회원국 최상위 권으로 나타난다.

[그림10] 소득불평등의 변화: 1990년대 중반에서 2019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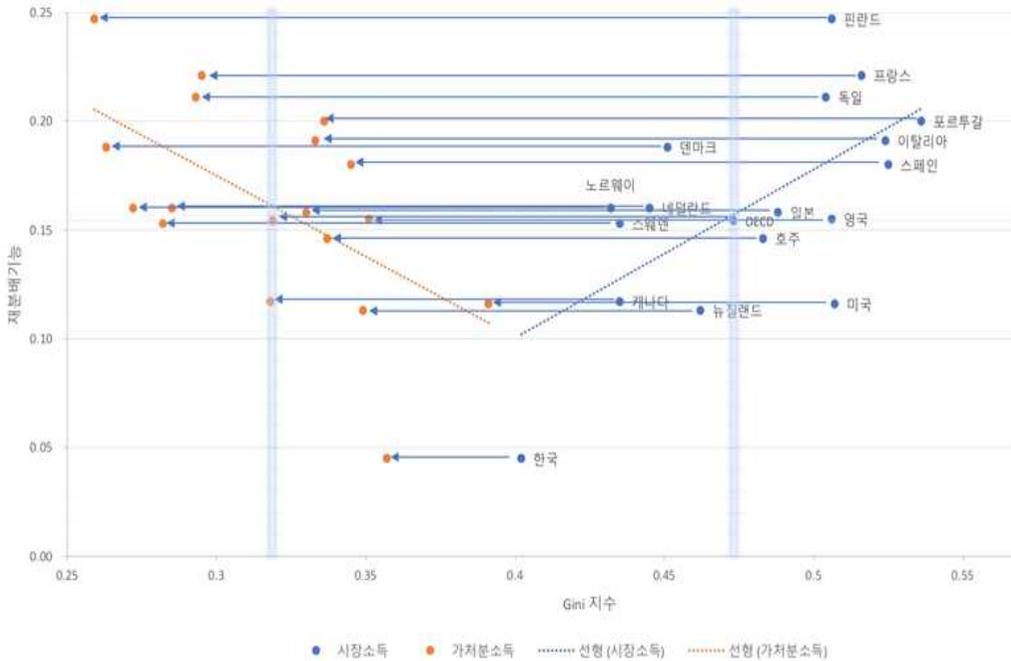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최신년. 한국은 통계청(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처럼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된 것은 경제성장과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높아졌지만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시장소득불평등도와 가처분소득불평등도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림3]의 수직축이 이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의 화살표는 국가 별로 시장소득불평등도가, 정부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가처분소득불평등도로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북유럽 선진국들의 긴 화살표는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한국의 짧은 화살표는 정반대로 정부의 역할이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면 아직도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조세부담율을 높이고, 정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조세와 재정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11] 시장소득 Gini 계수와 가처분소득 Gini 계수, 국가 간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 비교



자료: OECD Statistics 최신년. 한국은 통계청(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고 낮은 서비스부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저임금근로자 비율과 임금격차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청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와 사익편취가 높은 임금격차를 만든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공정한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의 버팀목으로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관련 법과 제도도 실질적인 효력을 점진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지원 등을 통한 개입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3. 소득과 교육의 기회불평등

가구환경, 인종, 성, 지역 등 출신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때 기회평등이 이루어진다.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이처럼 교육과 인적자본 축적이 가능했던 것은 누구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출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과 농지개혁으로 자산 불평등은 낮았고 사회계층의 장벽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평등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다.

경제발전이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고 있는 현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교육과 인적자본의 축적이 여전히 중대한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기술발전은 교육과 인적자본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교육의 계층사다리가 작동할 수 있는 기회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평등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급격한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경험했다. 노동소득 양극화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부동산과 금융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의 불평등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세대 간 계층이동은 어려워져 기회불평등한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통계청 「사회조사」이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1999년 10% 가량이 부정적으로 응답했지만 2015년 이후 50%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남짓한 기간에 계층상승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5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1) 소득 기회불평등

기회평등아무리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좋은 가정환경과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기회평등은 어서 완전한 기회평등을 달성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다. 유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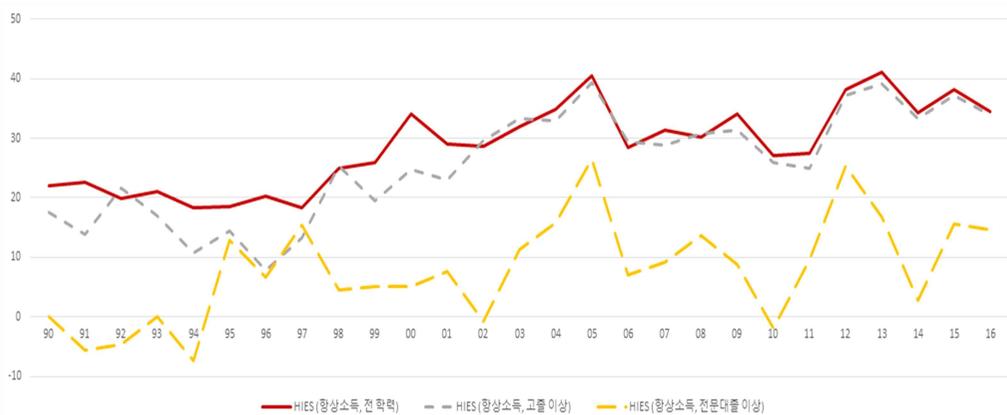
미국의 가구소득 자료를 이용한 연구(Le Franc et al. 2008)에서 놀랍게도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는 이런 이상적인 기회평등이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독일과 같이 기회불평등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미국, 이탈리아와 같이 기회불평등도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이탈리아 등과 같이 출신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회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신지섭·주병기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와 가계동향조사자료(HIES)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항상(가구)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기회불평등의 장기추이를 분석했다.⁹⁾ [그림4]의 붉은색 실선은 1990년 이후 항상(가구)소득의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 값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개천용지수란 충분한 능력과 노력이 있더라도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나타낸다. 개천용기회불평등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4년 평균 17.96%에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4년 평균 39.52%로 약 2배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¹⁰⁾ 앞서 언급했던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계층상승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응답이 늘어난 것을 실제 소득자료로 설명해주는 결과이다.

고졸 혹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여 기회불평등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5]의 두 점선이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경우 (그림의 윗 쪽 회색 점선) 기회불평등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경우 (아래쪽 노란색 점선) 기회불평등도가 크게는 50%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을 통하여 기회불평등을 상당 수준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육격차 해소가 경제적 기회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¹¹⁾

8) 오성재·주병기(2017). “한국의 소득 기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3집, pp.1-30.; 신지섭·주병기(2021).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9) 신지섭·주병기(2021).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10) 신지섭·주병기(2021).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표 11> 참조.
 11) 신지섭·주병기(2021).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그림12] 부친의 학력환경 하 개천용기회불평등 지수 장기추이



자료: 신지섭 · 주병기(2021).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성별 기회불평등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불평등 보다 절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병기의 연구에 따르면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나타내는 성별 개천용기회불평등지수 값이 노동소득과 (시간당)임금에서 각각 66%와 50%에 가까운 높은 값이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최근까지 지속되었다.¹²⁾ 이러한 성별 기회불평등도의 경우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고등교육이 성별 기회불평등을 극복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해준다.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 출산과 혼인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이런 차별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성별 기회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교육 기회불평등

교육의 세대 간 계층사다리 기능도 최근 크게 쇠퇴하였다. 교육부의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9%가 계층 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응답하였고, 87%가 과거에 비해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러한 교육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67.7%가 교육비 투자 차이를 들고 있는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600만

12) 주병기(2019).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2호, pp.1-12. 그림 14 참조

13) 교육부(2017).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원 이상 가정과 100만원 미만 가정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2016년 10.2배에 이르고 사교육비의 경우 그 격차가 1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업성취도와 대학입학 수학능력평가에서 이런 기회불평등의 실태가 확인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교육적 성취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¹⁴⁾ 김영철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출신배경이 직·간접적으로 성적에 50%이상의 영향력을 가진다.¹⁵⁾ 개천용기회불평등도는 타고난 능력과 노력이 동일하더라도 출신배경이 열악하여 최상위 성취에 실패할 확률을 말하는데, 2005년과 2011년 대입수학능력평가자료를 이용한 오성재 외의 분석에서, 과목성적의 개천용기회불평등도가 외국어(영어)영역에서 70%, 언어(국어)영역에서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처럼 높은 기회불평등도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시간의 절대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가구환경이 좋은 학생들일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자기주도학습 시간도 더 길기 때문이다.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가장 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기회불평등도가 현저하게 하락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이용한 오성재·주병기의 분석에서도 최상위 5개 대학과 의약학계 전공으로 명문대를 정의하고 이런 명문대 진학의 개천용기회불평등도가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가구환경이 열악한 학생은 타고난 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문대 진학에 70% 실패한다는 것이다.

4. 지속가능한 포용국가 전략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높은 교육열과 고도의 인적자본 축적에 있었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졌고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가능

14) 김영철(2011), 김희삼(2012) 등

김영철(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06.

김희삼(2012).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초, 중등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KDI 연구보고서 2012-09.

15) 김영철(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06, p.43.

16) 오성재·강창희·정혜원·주병기(2016). “가구환경과 교육성취의 기회: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이용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9집 제4호, pp.1-32.

17) 오성재·주병기(2021),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DP202105.

한 일이었다. 그러나 높아진 불평등, 기회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로 이런 성장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그리고 탈화석연료와 에너지 전환 등 앞으로 펼쳐질 기술전환이란 전망 속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더욱 커지고 있다.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과 인적역량을 강화해야만 할 때이다.

우선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 적어도 중위권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로 인한 소득격차와 양극화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민 삶의 질은 사회복지와 안전망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의 낮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복지시스템도 개선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고용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가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재벌과 대기업의 부당한 지대추구 행위를 엄격히 감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이들이 고용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임금격차와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을 관리하는 감시체제와 감독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관료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한 관행의 청산과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포용적 교육투자와 고도의 혁신적 인적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한국경제가 지속발전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효율화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과 초기 아동기 교육 투자는 기회 형평성 개선,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인적자본 투자 등 주요 정책목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조기개입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확충해야 하고 서비스 지원의 질 역시 높여야 한다.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제도 역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기회형평성과 청소년 삶의 질의 관점에서 상당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소모적인 고등학교 입시경쟁을 최소화하고 대학입시에서도 기회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은 학부 교육과 한국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중심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 첫 번째 역할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이들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상위권 대학들이 부유층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수인재는 모든 계층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이 아닌 우수 인재들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우수대학의 학부입학생의 계층별 다양성이 훨씬 더 확대되도록 정부의 대학지원예산을 이용한 당근과 채찍을 만들어야 한다. 부처별로 쪼개지고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으로 쪼개진 예산을 통폐합하고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학의 두 번째 역할은 대학원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지원이 확충되어야 가능하다. 우수 대학들의 학부생 선발 다양성을 평가하고 이를 연구지원 확충의 조건 혹은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우수 대학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학부생 선발의 기회불평등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채용을 확대하고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고등교육의 기회형평성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거점대학이 기술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 역시 해소될 수 있다.

포용적 국가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장의 결론이다. 포용적 국가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정부의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포용적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공급확대로 이어지고, 공정한 시장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적인 시장질서의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 제1세션 토론1

불평등 및 능력주의에 대한 소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 및 정책학과 교수)

주병기 교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논의해 주셨습니다. 불평등의 현황과 해결책을 소득 및 교육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계층사다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논의점을 좀 더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능력주의 사회가 주는 보상의 핵심 요인: 능력이 아닌 출신과 성장배경¹⁸⁾

먼저 능력주의입니다. 저는 능력주의가 여러 한계가 있지만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가족의 배경, 학벌, 출신 고등학교, 성별 등에 의해서 적극적 차별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능력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수 채용에 기부채납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사회에 능력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실적평가가 대폭 강화되고 이에 의해 대학이 평가되는 시절이 도래하자, 이러한 부작용을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능력주의는 신분을 대물림하던 세습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이념입니다. 능력주의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0대의 대학 졸업 시절은 운이 좋았습니다. 학점이 낮아도, 자격증 하나 없어도 평생 직장 정규직에 안착했습니다. 반면 20-30대는 시대를 잘못 만난 탓에 치열한 입시 및 학점 경쟁과 끝없는 자기 계발 뒤에도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50대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건 어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에 더욱 민감한 것이겠지요.

18) 대부분이 “인생 성취의 8 할은 운, 감사하고 겸손할 이유, 김현철, 한겨레 21, 2021.7.3” 에서 재인용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의 보상이 전적으로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임금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출신과 성장배경입니다. 즉 ‘운’입니다. 태어나면서 첫번째로 만나는 운은 ‘어디서 태어났는지’입니다. 세계은행 출신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빅(Branko Milanovic)은 태어난 나라가 평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Milanovic,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015). 태어난 나라의 평균 소득과 지니계수(불평등 지수)만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의 최소 50%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태어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성공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자본도 부족하지만, 부패와 법집행의 자의성, 불합리한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운은 ‘부모’입니다. 사람의 성취 및 행동에서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성과 양육’ 논쟁이라고 합니다. 유전 요소가 중요하다면 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고, 환경 요소가 중요하다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유전과 환경을 모두 제공하므로 이 둘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입양된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브루스 세서도트(Bruce Sacerdote)가 홀트 아동복지 재단을 통해 미국에 입양된 대한민국 출신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유명합니다(Sacerdote,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2007). 양부모가 입양할 아이를 고를수 없으므로 아이들은 사실상 무작위로 입양 가정에 배정되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부모에게 환경만을 제공 받고, 친자녀들은 유전과 환경을 모두 받게 되므로 이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친자녀들 간의 사이의 상관관계는 교육수준이 0.378, 소득이 0.277인 반면, 입양된 아이와 친자녀의 상관관계는 이보다 낮은 0.157(교육), 0.110(소득)입니다 (아래 표). 이것은 환경이 동일하더라도 유전적 요인이 교육과 소득에 상당히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자녀의 경우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가 0,443, 0,273입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상관관계가

훨씬 작습니다. 특히 키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0.014), 몸무게는 이보다는 살짝 큰 0.044입니다. 당연하게 들리지만, 신체적인 부분은 유전적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문은 유전이 교육연한의 44.3%를, 소득의 32.4%를 설명한다고 결론짓습니다.

표 부모와 입양자녀/친자녀의 상관관계

	입양자녀	친자녀
교육수준	0.157	0.378
소득	0.110	0.277
키	0.014	0.443
몸무게	0.044	0.273

자료: Sacerdot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7

또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고, 부모가 어린시절 환경도 상당 부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도 명백히 운입니다. 그렇기에 “인생 성취의 팔할이 운이다”는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도 상당부분 유전으로 설명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상의 성취는 대부분 타고난 운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셨나요? 만일 그 성취를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다음은 능력주의 사회가 정말 능력만큼 보상하는지 다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칠레는 중위소득이 넘는 OECD국가입니다. 칠레대학(Universidad de Chile)과 칠레가톨릭대학(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은 칠레 최고의 명문 대학인데, 인문계의 경우 경영학과 법학 전공이 특별히 인기가 많습니다. 입학은 철저히 시험 성적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그림은 X축에 ‘대입 수학/칠레어 시험 성적’을, Y축에는 ‘소득과 기업 임원’의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명문 대학 경영학/법학 전공자의 소득이 제일 높고, 임원의 비율 또한 월등히 높습니다. 이곳을 졸업한 1.8%의 사람들이 주요 기업 요직의 41%를, 0.1% 상위 소득자의 39%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임원의 25%가 소위 SKY대학 출신(서울대 10.8%, 고려대 7.4%, 연세대 6.8%)입니다. 여기까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이 틀린거 같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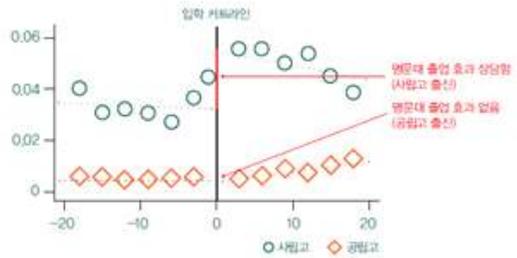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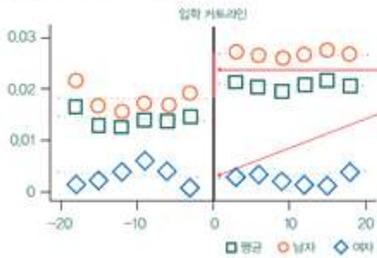
보입니다.

예일대학의 세스 짐머만의 연구는 명문대 진학의 과실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Zimmerman, <American Economic Review>, 2019). 아래 그림 칠레 명문 대학에 아슬아슬한 점수차이로 입학한 학생과 간발의 차리로 탈락한 학생의 졸업 후 상위 0.1%의 고소득자 혹은 기업 임원이 될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특성들은 매우 비슷하나 특정 사건(입학 커트라인)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을 회귀 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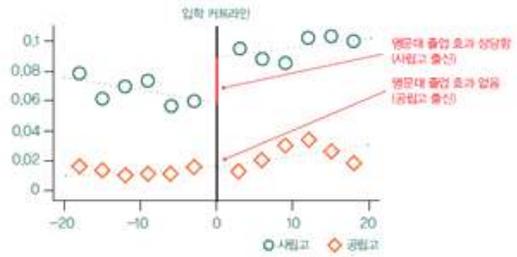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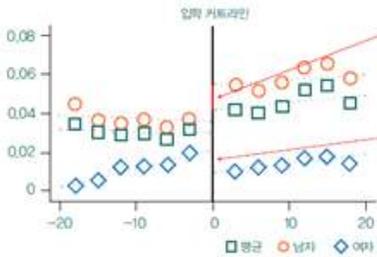
그림 . 명문대에 아슬아슬하게 입학한 학생과 간발의 차이로 탈락한 학생 비교

자료: Zimmerman, (American Economic Review), 2019

졸업 뒤 상위 0.1% 고소득자가 될 확률



기업 임원이 될 확률



윗줄 왼쪽 그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점들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입시점수별로 본 것입니다. 가운데 붉은 선이 명문대 입학 커트라인입니다. 아깝게 탈락한 학생들은 붉은 선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제가 1996년 대입시험에서 그랬던 것처럼 운 좋게 간발의 차이로 합격한 학생은 붉은선 바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붉은선 바로 양옆에 있는 학생들은 대입 시험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 능력은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커트라인으로 인한 명문대학의 합격 여부입니다. 그래서 명문대 합격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지요.

왼쪽 그림에서 초록색 네모는 전체 평균 효과이고, 붉은색 동그라미는 남학생, 푸른색 마름모는 여학생의 경우입니다. 명문대 입학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50%가량 상승시킵니다(1.4%에서 2.1%로 증가). 그런데 이 효과는 남자에게서만 발견됩니다. 여성이 고소득자가 될 확률은 남자에 비해 낮고, 명문대학을 진학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출신 고등학교별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는 비싼 학비를 지불하는 사립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고, 붉은 마름모는 일반 공립학교를 나온 학생들입니다. 놀랍게도 명문대 진학효과는 사립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게만 발견됩니다. 아랫줄의 두 그림은 기업 임원이 될 확률을 분석한 것입니다. 고소득자가 될 확률과 마찬가지로 명문 사립 고등학교 출신의 남자만이 명문 대학에 진학한 효과를 독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칠레의 연구는 인생의 성공에는 운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대입 시험 1점 차이로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50%나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사회에서의 보상이 결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칠레만의 일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석을 할 자료를 정부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서울대 진학의 효과가 인생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일부 명문고 출신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넬대학의 로버트 프랑크(Robert Frank) 교수는 2016년 출판한 그의 책 <성공과 운(Success and Luck)>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큼니다. 자기 성취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 믿을수록 세금 납부에 더 적대적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도와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므로 세금을 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운이 나쁘기 보다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므로, 이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부모가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팔할 이상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 덕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신이 성공했다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에서 제시한 제비 뽑기에 의한 대학 입시 방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명문대 지원 학생 중 합격자 대비 세 배수 정도는 우열을 쉽게 가리기 어려울 만큼 모두 훌륭합니다. 이들을 더욱 촘촘히 줄세우기보다는 제비뽑기로 입학시킴으로써 본인의 인생에 얼마나 운이 크게 작용하는지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공이 스스로 얻은 게 아님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문대생의 태도와 인식을 바꾸는 건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교육 및 소득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명문대 졸업장의 노동 및 결혼 시장에서의 초과 가치(Premium)입니다. 명문대를 나오면 취직, 승진, 창업 과정에서 학교의 명성과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얻게되는 보상이 사교육 투자비용보다 훨씬 큼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 시장에서 주는 가치분도 큼니다. 남학생의 입장에서 부유하고, 능력있고, 지능이 뛰어나고, 심지어 더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훨씬 큰 것은 덤이죠. 미국 사례이지만, 여학생의 경우 명문대 진학을 통해 크게 증가하는 가구소득은 대부분 배우자를 통해 발생함을 보인 연구도 있습니다. 명문대를 가게되면 평생 얻게될 유무형의 이익이 사교육에 쓰는 돈을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과생의 경우 의과대학에만 진학할 수 있다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것에 비해 초과 수익이 4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사는 정년이 없어 전문의 취득후 일하는 기간이 35년 쯤입니다 (35세-70세). 평균 소득은 낮게 잡아도 연 2억쯤 됩니다 (개원의 포함 수치. 취직한 의사의 평균 연봉 1억 5천).¹⁹⁾ 즉, 의사가 되면 평생 70억원 (35년*2억원)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평생소득이 25억원 정도입니다 (= 노동기간25년 (30세-55세) * 평균소득 1억원). 의사들의 평균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의 5배이고, 직장인 상위 1%에 해당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것은 부모의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평등, 아파트 가격 폭등, 사교육 과열 등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문대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군별로 지나치게 차이나는 보상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3146296f>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대 가지 않아도 명문대 가지 않아도 괜찮은 직장을 가질수 있는 방안,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강제로 임금을 바꾸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기업가가 큰 보상을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3.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는 “초중고” 보다는 “영유아 조기교육”에 집중해야²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는 5세미만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중고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최근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임신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 어린 시절 환경의 지대한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경제학이 이런 것도 연구하냐며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환경의 장기 효과』는 최근 경제학 연구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불우한 어린시절은 “불평등의 씨앗” 인셈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양질의 영유아 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헤크만 (James Heckman) 교수입니다. 헤크만 교수는 다양한 정책 평가에 사용되는 계량경제학의 방법을 발전시킨 공로로 2000년, 56세의 나이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죠. 구직자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 효과와 같은 노동 시장 정책을 주로 분석하던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 연구 분야를 바꾸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영유아 및 아동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난 20년의 성과는 조만간 헤크만 교수가 두번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1964년 존슨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인 “빈곤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교육비로 조기 유아교육 (3-5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따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유아기에 저소득층 (대부분 만 3-4세의 저소득층 혹은 가정)을 대상으로 영양/보건/보육의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가정방문도 자주 합니다. 헤드스타트는 학업 성취도에

20) 대부분이 “개천에서 용나는 비결, 김현철, 한겨레 21, 2021.5.16”에서 재인용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범죄에 가담할 확률을 낮추었습니다 (Garces, Currie, and Thomas, 2002, American Economic Review). 또한 비만 및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를 크게 줄였습니다 (Carneiro and Ginja, 2014,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960년대 미시간 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페리 프리스쿨 프로그램 (Perry Preschool Program)과 이와 유사한 North Carolina 주의 ABC/CARE 프로그램(The Carolina Abecedarian Project (ABC) and the Carolina Approach to Responsive Education (CARE))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무작위 통제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즉 지원한 사람들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후, 이들을 40년 이상 추적 조사 했습니다.

페리 스쿨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수혜자는 학업성취, 취업여부, 소득, 결혼 여부, 건강, 범죄 모든 영역에서 훨씬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Heckman et al., 2010, Quantitative Economics; Conti et al., 2013, Economic Journal). 그런데 이는 놀랍게도 IQ와 같은 인지 능력보다는 자존감, 참을성, 정서적 안정과 같은 비인지 능력 (Non-cognitive skill)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Heckman et al., 2013, American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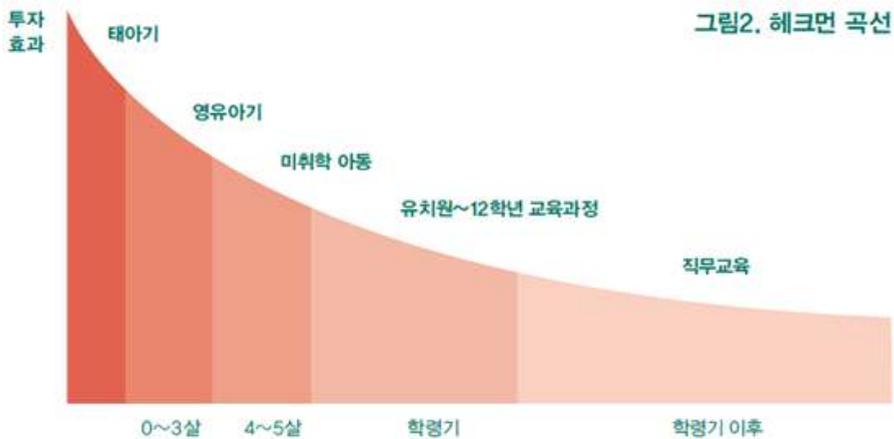
표 ABC/CARE 프로그램 효과

	여성		남성	
	대조군 평균	참여자 평균 효과	대조군 평균	참여자 평균 효과
PIAT 점수	95.63	+4.92	93.46	+7.7
고등학교 졸업률	0.51	+0.25	0.61	+0.07
대학교 졸업률	0.08	+0.13	0.12	+0.17
30살 기준 소득(달러)	23,443.42	+2,547.50	29,340.31	+19,809.74

ABC/CARE프로그램도 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표1에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즈음에 실시한 PIAT (Peabody Individual Achievement Test)에서 여학생은 점수가 95.6점에서 4.9점 상승했고, 남학생은 93.5점에서 7.7점 상승했습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할 확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30세의 소득은 특히 남자에게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조군의 평균소득은 2014년 기준 \$29,340 (약 3000만원)인데 반하여 처치군의 평균 소득은 이

보다 \$19,809 많았습니다. 임금이 무려 68% (=19,809/29,340)나 증가한 것입니다 (García et al, 2020,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건강도 크게 좋아져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직업교육까지 평생 인적자본을 연구한 헤크만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하여, 삶의 주기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유명한 『헤크만 곡선 (Heckman Curve)』입니다 (아래 그림). 헤크만 곡선은 임신기 및 아동에 대한 초기 투자가 직업 교육과 같은 성인기 투자에 비해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양질의 영유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는 정치적 견해 차이가 적은 편으로, 우리 사회가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가치있는 투자입니다. 국가는 아이들의 미래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1. 능력주의

Milanovic, Branko. "Global inequality of opportunity: How much of our income is determined by where we liv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7.2 (2015): 452-460.

Tomasetti, Cristian, Lu Li, and Bert Vogelstein. "Stem cell divisions, somatic mutations, cancer etiology, and cancer prevention." *Science* 355.6331 (2017): 1330-1334.

Zimmerman, Seth D. "Elite colleges and upward mobility to top jobs and top inc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9.1 (2019): 1-47.

Sacerdote, Bruce. "How large are the effects from changes in family environment? A study of Korean American adopte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1 (2007): 119-157.

Frank, Robert H. *Success and Luck*.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Sandel, Michael J.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Penguin UK, 2020.

2. 영유아 조기 교육

Adhvaryu, Achyuta, James Fenske, and Anant Nyshadham. "Early life circumstance and adult mental h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4 (2019): 1516-1549.

Bleakley, Hoyt. "Malaria eradication in the America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childhood exposure."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2 (2010): 1-45.

Carneiro, Pedro, and Rita Ginja. "Long-term impacts of compensatory preschool on health and behavior: Evidence from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6.4 (2014): 135-73.

Currie, Janet, and Cathy Spatz Widom.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being." *Child maltreatment* 15.2 (2010): 111-120.

Garces, Eliana, Duncan Thomas, and Janet Currie.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2002): 999-1012.

García, Jorge Luis, et al. "Quantifying the life-cycle benefits of an influential early-childhood progra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7 (2020): 2502-2541.

Garces, Eliana, Duncan Thomas, and Janet Currie.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2002): 999-1012.

Grönqvist, Hans, J. Peter Nilsson, and Per-Olof Robling. "Understanding How Low Levels of Early Lead Exposure Affect Children's Life Trajecto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9 (2020): 3376-3433.

Heckman, James, Rodrigo Pinto, and Peter Savelyev.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n influential early childhood program boosted adult outc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013): 2052-86.

Heckman, James J., Jora Stixrud, and Sergio Urzua.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3 (2006): 411-482.

Heckman, James, et al. "Analyzing social experiments as implemented: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 from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Quantitative economics* 1.1 (2010): 1-46.

Løken, Katrine V., Magne Mogstad, and Matthew Wiswall. "What linear estimators miss: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on child out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4.2 (2012): 1-35.

■ 제1세션 토론2

우리들의 불공정한 공정, 우리들의 가짜 능력주의

- 주병기 교수의 공정 및 능력주의 비판 관련 의견과
모든 국민의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사회²¹⁾를 위한 제안

박은선 (변호사, 前 고교 교사)

1. 주병기 교수의 ‘공정 및 능력주의 비판’ 에 관한 의견

가. 2021 현 대한민국의 공정 및 능력주의에 관하여

일회적 시험으로 산출된 점수들로 학생들을 줄세운 뒤 앞쪽에서부터 선발해가는 것이 가장 공정한 대학입학의 방법이고, 앞쪽에서 선발된 이들이 명문대와 좋은 일자리 등을 선점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공정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 편에서 날이 갈수록 목소리 높이는 공정 및 능력주의에 관한 이에 관한 주장들에 반대하는 주병기 교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크게 보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나, 특히 ‘교육’ 이라는 두 글자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로서, 본 토론자는 주병기 교수의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함.

나. ‘개천용’ 에 관하여

주병기 교수는, 이른바 ‘개천용기회불평등도’ 가 높은 우리 교육 및 사회 현실을 비판하며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는 ‘능력을 갖추고도 명문대 입학이 좌절되는 문제’ 에 관하여 기회균등을 강조하며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나아가 소득별/계층별 입학 전형

21) ‘교육사회’란, 최근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방송과 책으로 알리기도 한,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의 선거 구호, ‘Bildungsgesellschaft(교육·교양 사회를 만들자)’에서 차용했다. 브란트의 교육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다. 본 토론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한다.

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일단 이것은 소득수준과 능력수준이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에서 완전한 하나의 공식을 만들 수는 없는 관계인 점, 즉 다양한 예외들을 수용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역시 대학교육이 선발에 의할 수 없다는, 기본적으로 능력에 따라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그릇된 가짜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대학 입학의 문을 바라보는 한계가 있음.

마이클 샌델조차 대학의 인재선별기구, 지위배분기능에만 주목하여 ‘추첨제’로 그와 같은 기능들을 무너뜨리자는 대안을 제시할 뿐 교육 및 권리의 눈으로 국민들이 대학에 관하여 갖는 교육권과 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질 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주병기 교수 역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함.

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독일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서도 소수자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점에 관하여

주병기 교수는 참고자료 18쪽 등에서 유럽 국가들이 ‘이상적인 기회평등이 달성’되고 있다고 제시하므로, 그렇다면 우리 사회 불공정 및 왜곡된 능력주의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그와 같은 이상적 기회평등 달성의 작동원리가 무엇인지 이를 파고들어 유럽 교육 및 사회의 ‘비결’에 주목하여야 할데지만, 주병기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강조되는 소수자우대정책 등임.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소수자우대정책은 능력에 따른, 점수에 따른 대학입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약자들을 위한 약간의 틈새만을 만들어놓은 기만적 유지 장치라는 비판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식 입학사정관제 내지 학생부전형 등은 ‘점수 대신 사람을 보는 전형’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자칫 ‘점수 대신 돈/빚수으로 만들어진 전형’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 우리사회에서 관련 문제들이 발생해왔음.

라. ‘계층이동 및 계층구조의 문제’에 관하여

주병기 교수가 지적하는 개천용 관련 문제들은 사회학의 영역에서 계층이동과 계층구조의 내용들과 관련됨. 당연히 계층이동이 활발하면서도 동시에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보다 타원형 계층구조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층격차 소득격차 등의 완화에는 최저임금제 인상과 약자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정책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

예컨대 스웨덴에는 최저임금제가 없고 연대임금제가 있음. 유럽의 진정한 능력주의는, 기술경쟁력이 없어 저임금으로만 버티려는 기업들은 도산을 면치 못하게 함. 즉 스웨덴에서 임금은, 업종별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하면 그 이하의 임금 지급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하게 됨. 그 도산기업의 자본가와 노동자들을 국가에서 교육하여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안전망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경쟁력있는 기업과 죽지 않고 숨쉴 정도가 아니라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노동자들의 삶이 모두 가능해짐.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임.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위와 같은 ‘도산’이 유럽의 교육에서는 ‘낙제’, ‘유급’, ‘제적(퇴학)’으로 나타남. 모두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제공하지만 그에 상응하지 못하면 가혹하게 그를 배제시키는 시스템 속에서 정말 공부하고 싶고, 공부할 수 있고, 공부만이 길인 이들만이 고등교육으로 향하게 됨. 이와 같은 교육구조는 결국 대학 교육을 간판 때문에 가는 이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또한 유럽의 계층구조는 무조건 화이트칼라 아래에 블루칼라가 존재하지는 않는 모습인데, 그것은 독일 등의 ‘마이스터 제도’ 와도 관련이 있음. 네덜란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운동화끈매기 자격증, 자전거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성장하며 모든 분야, 사소해보이는 분야에서도 관련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익숙함. 이와 같은 시스템의 근본원리를 도입하여, 변호사 자격과 정육 자격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를 제도적 문화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임.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도 계층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데,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퍼플잡’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전환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본 토론

자는 ‘퍼플교사(모든 교사의 정규직화, 교육청 소속으로 잠시 비정규직 업무를 하는 정규직 교사가 가능한 체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실제로 교육부 내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현재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3의 길이 대안이 될 수 있음.

2. 관련한 본 토론자의 대안 - 특히 ‘대학의 문’ 과 관련하여

가.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사회’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

○ 첫째, 우리는 ‘고등교육도 권리’임을 간과했다

우리에게, 초중고 교육과 달리 대학 교육 역시 권리의 대상이란 의식이 거의 없다. 대학들이 고교졸업생들을 줄 세워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판단하고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은 국민의 ‘권리’다. 납세,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에게 대학교육 기회에 관한 권리도 당연히 존재한다. ‘누구나’ ‘일정 능력만 갖추면(= 자격만 갖추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갖췄다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에 무상으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선 위와 같은 대학교육 기회가 헌법 내지 교육법으로 단단히 보장되어 있다. 대학교육을 원하는 이들은 일단 고교졸업자격시험을 통과하여 국립대 입학 티켓을 쥔 다음 몇 가지 직업을 경험하거나 여행하며 자신을 돌아보고서 공부할 분야를 결정하고는 원하는 대학(대부분 거주지 인근 대학)의 원하는 전공 분야에서 무상으로 교통비 등의 보조금까지 받으며 공부를 시작한다. 대체 왜 이들만 대학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걸까. 우리에게도 대학교육은 권리여야 한다.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능력에 따라’는 학생들을 줄세우고 고액의 등록금을 받는 교육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는 ‘능력별

줄세우기'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그 진정한 의미는 '일정 능력만 갖추면'이 되어야 한다(뒤에서 상술).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개헌 추진 당시 교육계(+민변 교육위)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를 빼거나 이를 '각자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등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개헌 자체가 무산되며 꿈을 이루지 못했다.²²⁾ 따라서 새 정부가 다시 개헌 추진 시 위 헌법조항 자체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헌 없이도 그 의미를 헌법적+교육적으로 제대로 해석해내고, 그에 따라 위헌적인('능력에 따라'의 진의를 왜곡하는) 현행 교육법 조항 및 교육제도들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사실이다(구체적 방안은 뒤에서 상술).

○ 둘째, 교육사회 구현 없이 본질적 개혁은 불가능하다 (뭘 도입하든 왜곡된다)

교육계는 노력했다. 정말 노력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하고자 수많은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해왔다. 하지만 결론은 모두 실패. 그 좋은 개혁안들이 왜 모조리 실패한 건지 최근의 몇 장면을 살펴보자.

- 자유학년제(중1): 덴마크의 '인생학교'와 유사하게 학령기에 적어도 한 번은 쉬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실은 '수행평가만 안 보고 중간·기말고사는 치르는 학년'으로써, 결국 선발형 대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기'로 활용되고 있음.
- 중학교까지의 절대평가: 어린 시기의 과도한 경쟁을 멈추는 것이 목표였으나, 결국 선발형 대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오히려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등수를 알기 위해 학원을 더 많이 다니게 함.
- 혁신학교: 초기 몇몇 혁신학교는 인근 집값을 올릴 정도로 인기였으나, 결국 선발형 대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혁신학교 수업을 마치는 2시에 아이들은 교문을 나와 학원버스에 오르고 있고, 특히 대입이 목적인 혁신고등학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함.

22) 「2020 한국 인권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98-102p 'II. 헌법 속 능력주의와 교육개헌운동 : 박은선(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참조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20/12/2020%EC%9D%B8%EA%B6%8C%EB%B3%B4%EA%B3%A0%EC%84%9C.pdf>)

- 자사고 : 본래 자사고는 창의, 환경, 과학 등 다양한 자율적 목표를 내세운 학교들을 가능케 한다는 목표로 시작됐으나, 결국 선발형 대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자사고는 ‘국영수 과목을 대폭 확대하는 자율권 행사가 가능한 학교’ 로 변질되어 갔음.
- 입학사정관제 : 초기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입시에 반영하는, ‘점수가 아닌 사람을 보는 대입전형’ 을 목표로 했으나, 결국 선발형 대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스란히 자녀의 교육성과를 결정짓게 됐음. 예컨대 교수 부모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고 외부경시대회에서 수상하는 일들이 매우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강남에는 컨설팅업체가 등장하며 스펙이 돈으로 만들어지게 됐음.
- 학생부전형 : ‘정시보다 학종’ 이 보다 교육적이라는 견해(특히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사들의 입장)도 많으나, 학생부전형²³⁾ 중 학종은 입학사정관제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고, 학생부 전형들은 모두 결국 내신전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 내신을 위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은 수능시험보다 오히려 더 정답을 암기해서 쓰는 시험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결의 친구보다 0.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도 비교육적임(드라마 ‘오징어게임’ 에서 가장 잔인하고 슬픈 장면은 ‘공기놀이에서 짝궁 죽이기’였음을 기억하자). 더욱이 학종의 불편한 진실은 특목고와 자사고의 1등급과 일반고의 1등급이 결코 대학입시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임(2021년 목동의 한 학교에서만 신입생 14명이 단 몇 달 학교를 다녀보고 자퇴함. 검정고시를 거쳐 정시에 올인하는 편이 공정하겠다면 과거 특목고 자퇴 대란 시처럼 자퇴를 선택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음).
- 과정평가 : 수행평가와 유사하지만 보다 과정의 평가를 중시하는 평가로, 결과물보다 과

23) - 학생부전형(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나뉜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명박 정부 처음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했기에 ‘점수 외 요소들도 본다’ 는 대원칙은 남기면서도, 외부대회 수상기록, 학교 밖에서 부모 등의 도움으로 쓴 소논문 등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예고된 상태) 단순하게 바라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내신점수 + 교과목 세부특기사항인데, 이 교과목 세부특기사항(세특)이 문제다. 흔히 학부모들은 “자사고에선 교사들이 몇십장으로 세특을 써주는데 일반고에선 단 몇 줄만 써준다” 는 불만을 제기한다. 세특에 기재될 내용을 대신 만들어주는 학원들도 등장했다. 전보다 나아졌어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 학생부교과전형은, 이와 달리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만 들어간다. 이른바 내신전형이다. 그런데 전교생의 4%만이 1등급이고, 내신전형으로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적어도 3등급 안에 들어야 한다. 바로 내 옆자리 친구가 나의 경쟁자가 되며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은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 위주에 정답을 암기해 그대로 쓰는 약간의 서술형 위주로 이뤄진다.

정 그 자체를 중시하며 일회적 지필시험만으로 점수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결국 선발형 대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수많은 과목들의 수행평가 과정평가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상을 만들고 발표를 하는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발산적 사고를 동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 기말고사의 지필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내신등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능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수렴적 사고도 멈출 수가 없음. (과도한 부담, 정답고르기와 쓰기의 비교육적 시험대비 훈련이 여전히 존속. 그리고 복종형 학생들의 등장...)

- 고교학점제 : 2025년 전면시행이나 이미 시범실시되는 학교들이 있고 현재 부분실시(물리 2와 같은 진로교과 과목)되고 있음. 교사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수업을 개설해 자율성을 백분 발휘하며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국 선발형 대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수강인원이 적어 ‘1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는 과목’은 알아서 기피할 수밖에 없음. 7차교육과정의 파행처럼 고교학점제는 결국 수능시험에 유리한 과목들 중심으로 개설될 우려가 있음. 한편 고교학점제가 부분실시되는 진로교과 과목과 관련해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A,B,C등급에 각 일정비율을 권고하는데, 권고에 그치므로 90% 이상을 A등급 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30%만 A등급을 주는 학교도 있음. 이로 인해 현재에도 학생들의 불만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면실시되면 결국 대학의 선발권을 박탈하지 않는 한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본고사, 논술고사, 구술고사 등의 대체제를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임. 더욱이 주로 고3 시기에 개설된 진로교과 과목들만이 절대평가이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고1이 대입이 됐다, 고1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며 고1 시기의 과도한 내신경쟁이 펼쳐지고 있음.

예비고사·학력고사·수능·본고사·논술·입학사정관제·수능.... 그리고 이젠 고교학점제와 논술형수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개선’이 반복됐지만(해방후 14차례) 학생·학부모는 명문대를 향한 경쟁과 사교육비 지출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대학 문 앞에서의 선발’이라는 본질은 동일했기 때문. 단지 입시의 모습을 바꾸는 것으로 교육이 진정 바뀔 것이라고 믿는 시민은 이제 없다. 본질을 외면한 채 단지 입시 방법만을 바꾸는 입시개선은 교육개혁도 교육혁명도 아니다.

7차교육과정의 수요자중심교육, 혁신학교, 자유학년제, 과정평가, 자사고 도입,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전형,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도 등 학교정상화를 위한 개혁들은 일선 교사들에게 ‘개혁피로감’만 야기하고 있다. 무엇을 도입하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거나 본래 추구한

목표와 전혀 다르게 왜곡되곤 했기 때문. 역시 ‘대학문 앞에서의 선발’이라는 본질은 동일했기 때문.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미시적인 개혁들만 한다고 학교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 **미시적·단편적·시혜적 가짜교육개혁은 이제 그만! 이제 본질을 바꾸자!**
‘대학교육도 국민의 권리’ 입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 진짜 교육혁명을 시작하자!

3.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사회’, 어떻게 실현할까

하나. 철학적·헌법적 기초 “교육은 권리다”

– 우리 헌법 제31조 제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 그러나 ‘능력별 줄서기는 당연?’ ‘능력에 따라’는 ‘능력별 줄세우기 아닌 **‘일정 능력만 갖추면(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에 무상으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함**을 의미



둘. 대학교육은 “무상교육”이어야	셋. 대학입학의 문은 “자격시험”이어야
<p>“교육은 권리대 따라서 <상품>처럼 돈으로 거래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분석과 구체적 방안: 고등교육법에 대학 등록금 무상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러나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에 고교무상교육 조항 추가하고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 조항을 삭제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교육이 권리라는 시민의식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 즉, 고등교육법에 대학무상교육을 규정할 토대가 이미 존재하므로 법상 규정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임. – 사회적 분석: 낮설었던 무상급식, 기본소득이 이미 너무도 익숙해짐. 보편적복지 사회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으며, 의료뿐 아닌 교육도 공공재임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음. 김누리교수의 독일은 이미 2차대전 이후 한 대학생의 헌법소원으로 대학무상교육이 시적되었고 용돈까지 받으며 대학을 다니는데 우리는 왜 교육이 상품이어야 하느냐는 얘기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았음. – 저항과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적 저항: 사교육비 30조, 대학무상교육은 7조, 대학교육 공동구매가 보다 절약됨을 알려야 /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노후비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 	<p>“교육은 권리대 따라서 모두에게 <기회>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분석과 구체적 방안: 고등교육법 제33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교육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대학이 그 졸업자들을 ‘경쟁시켜 일부만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 (미국식 대학모델로서 대학의 선발권이 국민의 교육권보다 우선) 그러나 유럽의 교육권 보장 모습을 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교육법 L612-3의 제4조는 “모든 비칼로레아 취득자는 일반대학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독일 헌법재판소는 1972년, 2017년 헌재 결정에서 “모든 국민은, 국립대학 학습에의 균등한 참여권 및 평등하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반대학/국립대학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국민이 교육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권리(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왼쪽의 무상대학교육이 실현되는 순간 사립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도 학생 선발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한 논리를 기본으로 고등교육법 제34조 폐지하고 제33조만 남기고, 시행령으로 [고교졸업자격시험] 규정하면 됨 (의대, 로스쿨 등 정원제한학과는 별도 설명)

을 적극 홍보해야(특히 출산 연령이 갈수록 늦어져 부모가 퇴직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전 세계적으로 높은 등록금 탓에 일반하며 대학 다니느라,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일력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② 대학의 저항 : 연대 야대 야주대와 같이 등록금을 높게 받아온 대학들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임. 특히 등록금 무상화가 결국 학생선별권에 대한 빅탈로 이어질 것을 모르지 않기에 동문들을 활용한 저항이 매우 거셀 것임. 이에 대해 설득의 방법도 있었으나(이범의 경우 연고대 등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학생선별권을 가져오자고 주장) 그 한계가 분명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지지를 모아 국회를 통한 법제화로 해결할 수도 있음. 특히 이것이 시민의 권리이며 대학의 자율성, 사학의 자율성 보다 시민의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무상급식 당 사에도 '이건희 손자가 왜 무상으로 밥을 먹느냐는 보수의 논리를 '교육은 권리며 학교에서 밥 먹는 것도 교육 과정의 일부로 교육이다'는 논리로 깰 수 있었음.

- 효과

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음.

②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만큼 '사립대학의 무제한 선별권은 더 이상 NO!**

- 사회적 분석 : 대학 앞에 줄세워 대학별로 학생들을 끊어서 데려가던 선별시험으로서의 대학입시에 익숙하고 그러면서도 이를 위한 어린 시기부터의 경쟁적 학습으로 아이들이 시달리는 것을 가슴아파 하던 시민들은, 첫째 조국사태 당시, 입시 방식을 어떻게 바꾼들 대학입학의 문이 "선발"시험으로서의 입시라면 무엇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했고, 둘째 김누리 교수가 독일 등 유럽의 "90% 이상이 합격하는 졸업자격시험만 합격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다"는 대학입학문의 대원칙을 방송으로 접하며 우리도 좀 저렇게 하면 안될까 하는 꿈을 꾸게 됐음. 따라서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서의 대학입학의 문>을 제안하고 그것이 법으로 어떻게 가능해지지는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저항과 대책

① 학부모의 저항 : 빈벌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수 있음.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추진시 학부모들은 삼보일배를 하며 저항했음. 자녀들과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장기간의 유예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부득이 **2025년부터 <대학입학자격 시험회(또는 고교졸업자격시험회)>**를 시행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적어도 현 초5 이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그것이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를 전제로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그 외에 대학별 본고사 등이 결코 없도록 함으로써 현 정부가 진행하는 제도를 활용해 자격시험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함. 무엇보다 대학이 여전히 "선별권"을 가지는데 고교학점제가

	<p>사행되면, 1)대학별 고사 부활(수능과 비교되지 않는 사교육비 필요), 2)학교별 등급화(이미 입소문을 타고 고교학점제에 대해 강남 명문고로 몰리고 있음)가 이어질 것을 분명히 경고해 설득해야만 함.</p> <p>② 대학의 저항: 대학은 선별원을 행사하기 위해 적어도 면접고사는 실시하겠다는 등으로 동문들까지 최대한 가동해 강력하게 선별을 주장할 것이나, 독일의 자격시험화 관련 대학기본법 조항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고등교육법에 마련함으로써 결코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함. 한편 왼쪽의 대학무상교육은 대학의 저항을 막는 큰 힘이 될 수 있음.</p> <p>③ 능력주의자들의 저항: 대학무상교육과 달리 여기서는 단지 기득권의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님. 특히 2030의 요구, 청년정신, 시대정신이 '공정'이고 이것은 결국 점수별 출세우기가 가장 올바르다는 식의 사고와 연결되며 거센 저항이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학벌주의와 <진정한 능력주의>를 구분하자"(능력주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능력주의란, 마지못해 기회를 제공하고 패자부활이 끊임없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존엄에 기초한 능력주의라고 그 의미를 확실히 규정해주어야 함.) / "최소한 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는 것에 집중하고 시민이 된 이후에 능력 관련 경쟁을 해야 한다"(핀란드 교육청장이 국민을 설득한 연설, 주석 참조²⁴)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임. 그저 이기적인 젊은 것들을 흔드는 꾀대식 논리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그런 입장을 보이는 순간 필패함.</p> <p>여기서 <진정한 능력주의>는 다음의 '대학 과정에서의 엄격한 교육과정 운용'으로 실현되게 됨. 이 부분을 감추는 것은 옳지 않음. 반드시 이를 보여줘야 시민들이 진정으로 설득될 것임.</p>
--	--



넷.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대학교육	
<p>전공 :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학부제X, 서울대 자유전공학과!)</p> <p>원칙 : 선발 NO! 정원무제한 입학!</p> <p>① 줄세우기 않는 내신시험 : 절대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학년 과목선택제 (고교 학점이수제) - 교사의 수업권 보장 + 학생의 선택권 보장 - 교사의 평가권 보장 + 평가위원회 등의 감독 <p>② 줄세우지 않는 전체시험 : 절대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식 논술형 (IB 등 활용) >> 미국식 SAT (문제은행) <p>예외 : 의대, 미대 등은 정원제한 입학.</p> <p>1) 전제조건 : 기득권 고려 NO. 무조건 물적기반 부족시만.</p> <p>2) 선발수단 : 추첨X, 성적순(50%)+대기기간당 1점(50%) (참고: 독일은 일단 사회적배려대상자를 30% 선발한뒤 70%를... 성적순20%, 대기기간존중20%, 대학별선별60% / 독일에서 대학별선별에선 주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봄. 즉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의 열망을 봉사활동 등과 함께 봄. 우리의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입 반대)</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 : 추첨 활용</p> <p>1) 전제조건 (공동교육과정, 공동학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표시 없는 공동 졸업장 - A대학 소속으로 B대학 수강 가능 - 온라인 수업 활성화 <p>2) 추첨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초중고 배정 활용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 <p>- 다만, 독일에선 2017년에 지역별 추첨(보다 구체적으로는 왼쪽 대학별선별에서 자기 대학 소재지를 꼽은 지원자에 대한 특혜 부여)은 위헌이 되었고, 프랑스는 최근 마크롱이 지역별 추첨제를 폐지하려다가 반대에 부딪쳐 존속 중임. 프랑스가 여전히 제도를 존속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극심한 위헌적 공격은 피할 수 있음.</p>

24) 에르끼 아호 핀란드 전 국가교육청장은 “경쟁은 경쟁을 낳아 결국 유치원생까지 경쟁의 소용돌이에 밀려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켰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다. 그리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다.” 라고 함.

참고 : “추첨”에 관하여

- 최근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추첨제를 대안으로 제시함
- 심리학자 배리 슈워츠가 이미 2009년 즈음에 ‘범위형 대입 제도’를 제안한 바 있음.
 일정수준의 수학능력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대학을 배정하자는 것.
 이미 그 범위에 들면 충분히 똑똑하므로 졸업 후 삶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데
 단지 상대평가 기준에 휘둘렸을 뿐이라는 것이 이유.
- 그러나 [지역별 추첨]은 아직 프랑스에 존재하나, 정원제한학과(인기학과)에서 지원자들 전부를 놓고 무조건 추첨으로 입학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학입학의문을 운용하는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분석됨. 네덜란드를 지금까지 그래왔으나 2017년에 해당 제도를 포기함. (선발제도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위장된 역설을 통해 네덜란드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원칙상 받아들여질 만한 나름의 방식을 고민했고, 추첨제는 ‘학습자들의 필요’에 근거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그들 시스템의 논리적 결과물이었다.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점수가 높은 낮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추첨제를 활용한 것이고, 또 성적과 학업능력이 훌륭한 의사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추첨제를 활용한 것)

대학교육은 ‘입학은 쉽게 + 졸업은 어렵게!’ (단, 절대평가!! 전두환 시절의 졸업정원제 아님)

- 진정한 경쟁을 하자. 청년기 이후(대학1년부터) / 자기 자신과(절대평가) / 전공분야에서(경쟁의 유예 X) 경쟁하자!
- 엄격한 대학교육 : 교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등의 감독 내지 학생의 엄격한 평가를 활용 등이 필요
- 참고 : 프랑스 A외대는 2019년 1500명 입학시켜 해부학 등의 학점으로 2학년으로 338명 진급시킴.
 단 **절대평가!** 독일 B법대는 2020년 입학생의 20%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 단 **절대평가!**

■ 제1세션 토론3

성적으로 줄 세워진 좌표가 너는 아니란다

김춘희 (학부모)

2022년 내년엔 대선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대통령이 자기 아들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다고 선언한다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준다고 한다면 또 어떨까요?

아마도 나라가 뒤집히겠죠. 이런 권력세습은 지금의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자녀들 본인이 노력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 자칫 권력 세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힘이 손톱만큼이라도 들어갔을까 봐 나라를 들었다 놔다 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의 막대한 재산은 또 자식이 아무 노력 안하고 세습하는 것에는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권력 세습은 반대하는 민주사회이긴 하나, 재물 세습이 합법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되네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치 민주주의는 뭘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는 뭘 할 수도 있는 특권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암튼 이런 사회시스템이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내가 허락하지 않은 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안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신분차별, 계급차별들이 불과 150년 전에는 당연이 받아들여졌지요. 그때는 그래도 됐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차별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회시스템에서 딱 맞는 새로운 차별인 계급질서가 또 만들어졌죠. 언제 어디서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학교에서 지금도 이시각에도 만들어지고 있지요. 신분이 아닌 영어, 수학을 잘하는 몇 가지로 등수를 매겨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을 수십억 받아도 내가 잘해서 번 거라 정당화시키고, 공부를 못해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못 사는 게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자책하듯이 학교가 새로운 계급질서, 신분질서를 만들어 개인이 갖는 능력으로 새로운 차등을 만드는 사회를 우리는 마주하

고 있고, 이 시스템 속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육으로 세뇌되고 능력주의에 세팅되어 죽어라 노력하고 밟고 밟히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일상의 모습을 잠시 스케치해 볼까요?

.엄마가 한의원 간다고 하니, 아들 왈 “그 한의원 선생님 경희대 나왔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며 친구가 하는 말 “나이 들어 저런 일은 안 하고 살아야지~”

.결혼하고 싶다 하는 아들한테 엄마 “니가 결혼하려면 니 능력을 키워야 돼~”

.30대 주부들 “아파트에 스크린 도어가 있어야 아파트 값이 올라간데~우리아파트에도 설치합시다.”

. “너희 집은 몇 평이야?”, “너희 집은 무슨 차 타고 다녀?”

“우리 집은 재난지원금 못 받는데.”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초등생들의 대화

.친구를 기다려주고 있는 전교 1등 학생에게 “너는 공부 못하는 재하고 뭣 하러 노냐”,

“대학 안 나오면 힘든 일 해야 합니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학교 선생님들.

.성적으로 1등 하는 아이들 선발해서 서울대학교 탐방시켜주고, 유명학원 강사 초빙해서 특강 시키고, 장학금 주고 특혜 주는 지역장학재단의 낯부끄러운 행태들.

현장스케치 어떠신가요?

이 모든 대화 속에는, 능력←돈←직업←학벌←공부

능력이 있어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결국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공식, 공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공식은 수학책에 없는 새로운 공식입니다.

이런 것을 화두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시민으로서 꿈꾸는 교육을 상상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시스템의 흐름 속에서 거친 풍량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통나무 같은 우리 아이들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부모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식인 편견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우리 일상의 스케친 된 모습 중,

.친구를 기다려주고 있는 전교 1등 학생에게 “너는 공부 못하는 재하고 뭣 하러 노느냐! 기다리지 말고 교실에 먼저 들어가!”

“대학 안 나오면 힘든 일 해야 합니다.” 라며 공부를 안 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니 힘든 일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은 학교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

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능력 있는 사람’ 이다 보니 학교에서는 여기에 맞춰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성적으로 줄 세우기에 급급하고,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의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여러 개의 학원 가방을 바꿔 쥐가며 주말도 없이 무한 경쟁 속으로 밀어 넣고는 ‘다 너를 위해서다’ 라는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으며, ‘똑똑한 1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는 신자유주가 낳은 신념으로 공부상처를 새겨주며 아이들을 벼랑까지 내몰고 있는 현실!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의 행복을 미래에 저당 잡히고 놀 권리를 박탈당하며, 얼마만큼의 더 고통을 감내해야 될까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하겠다’ 며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로 안녕을 고한 아이’, ‘이제 1등했으니까 부모님 소원 이뤄 드렸으니까 이 생에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며 욕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아이, 옆집 아이보다 공부 못해 부모님을 부끄럽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삶을 마음껏 펼쳐 보지도 못하고 줄 세워진 성적으로 무능력하다 낙인찍히고 죄책감을 키우며 주눅 들어가는 이시대 수많은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 청소년 3명중 1명은 살고 싶지 않다는 충격의 설문조사. 이런 참담한 소식들이 어찌 부동산 소식에, 주가 정보에, 반려견 뉴스에 밀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뭣이 중헌지요..

몇 년 전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을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으려고 지역대학 앞에 갔을 때, 그 지방대학생들 스스로가 이미 SKY는 학벌이 좋으니 능력이 좋을 것이고 당연히 우대를 받아도 된다는 쪽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보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우리 울산등대지기 엄마들의 아픈 추억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워진 어디쯤에 자신의 좌표점이 찍히고, 고만큰이 자신의 능력인 양 세뇌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힘없던 어릴 때 묶였던 얇은 끈을 커서도 끊을 생각을 못하는 코끼리의 모습으로 대조 되는 건 무기력해진 이 코끼리의 모습이 이시대 우리 젊은이들의 자화상이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현재가 고통스러워야 하는 이 모순 자체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니 어쩔 수 없지않느냐, 행복을 잠시 저당잡아 놓으면 미래엔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느냐..라며 아이의 손을 낚아채 진흙탕 같은 현실인 모순 속으로 뛰어들어 자식에게 만큼은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에너지 넘치는 엄마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은 이유는 답은 문제 안에 있기 마련이고, ‘번뇌가 즉 보리’ 라는 말처럼, 엄마들의 과도한 잘못된 이 에너지의 방향만 튼다면 현실을 고스란히 끌어안고도 강물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참담한 교육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도 저는 가장 작은학교인 한가정의 교장선생님인 학부모.. 엄마라는 이름이 성장해서 엄마시

민으로 거듭날 때 저는 작은 교육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질거라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누구나 공감할 텐데요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말했듯이 가장 작은교육이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그 가정을 전두 지휘하는 교장선생님인 어머니 아빠의 마음부터 살펴보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부모 안의 무의식적 편견이 ‘능력주의’ 를 더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부모가 된 우리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학습된 목소리로 아이들은 ‘능력을 키워야 한다.’ 는 믿음의 큰 기둥 하나를 세우고, 카페에서 간식 챙겨 먹어가며 내 새끼 능력을 쌓아주기 위해 설 새 없이 학원 뱅뱅이 돌리고 있는 두 손 가득 아이 학원 가방 들고 있는 이 시대 학부모들이 집밖에만 나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요즘 우리 엄마들의 혼한 모습들, 두 잔의 같은 커피를 마시고도 혀의 감각은 무시한 채 비싼 커피가 더 맛있다고 현란한 근거를 대며 우매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민망한 모습들은 자본주의에 우리의 감각마저 저당 잡혀있는 우픈 모습입니다.

“너는 어려움 없이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것 같은데 왜 평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니?” (질문자의 어려움 없고, 좋은 집안이라는 기준이 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질문은 올해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현재 초보 직장인이 된 저의 큰딸이 의대를 목표로 반수하고 있던 남친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이 남친은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단정합니다. 참고로 그 부모님들의 직업은 교수님들이 시라고..

고 박경리 작가님께서서는 작품 ‘토지’ 의 등장인물 수백 명 중 주인공인 길상을 가장 실패한 인물로 꼽으시기에 놀란 적이 있는데, ‘가장 잘 만들려고 했던 애착이 펜을 쥐 손을 냉정해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손이 안 떨리고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고 하신 작가의 말 씌처럼 내 자식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애착이 아이들에겐 떨리는 욕망의 마음으로 전해져 아이들을 도리어 주눅 들게 하는 건 아닌지,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왔을 때 곁으론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론 속상 해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들켜 사랑하는 아이에게 공부 상처를 깊이 숨어준 적은 없는지, 공부하기 싫고 적성에 안 맞으면 대학 안가도 돼~ 라며 마치 깨어있는 엄마처럼 말하면서, 돌아서선 속상하고 바라는대로 안되는 자식에 대한 미움의 싹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건 아닌지.. 아이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우아한 엄마의 탈을 쓰고 대학 안 간다는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에 숨어 꿈틀거리는 차별하는 숨기고 싶은 마음이 겉으로 베어나와 아이들을 눈치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내 깊은 밑바닥 밑마음에 빠리 트고 있는 그 무의식이 뭔지 나부터 철저히 살펴서 이 모순된 의식과 무의식의 두 마음을 한마음으로 통일시켰을 때 비로소 이 에너지로 우리아이들을 대한다면, 독보적으로 행복함을 교육에서 찾는다. 덴마크의 행복 비법, 바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그들만의 비법이 대한민국도 아이들도 함께 회복시켜줘서 아이들 스스로가 남과 비교하기 않는 든든한 자신감으로 자기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능력주의를 논하는 차원은 넘어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능력주의 자기가 이룬 성과가 온전히 개인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것인데요, 양말 한 켤레를 바라보더라도 그 안에서 양말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유를 실어오는 배의 선원들의 땀방울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교육의 유토피아는 이것으로 이미 완성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진리를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가정에서의 교육유토피아를 꿈꿔 봤는데요 이번엔 학교에서의 유토피아도 꿈꿔 볼랍니다.

학교에서 진짜 가르쳐야 할 경쟁력은 암기 잘해 줄 세워진 1등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무소불위의 경쟁력인 자기 삶에 ‘자족’ 하는 법이고, 우리가 능력을 키워 결국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안락한 행복감’ 을 느끼고 싶어서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건 지금도 당장 느낄 수 있지요. 온갖 노~오력을 하지 않아도 앉은자리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면 어떨까요?

온갖 병마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 30시간 임사체험 후 병이 나은 이유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부터’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내가 부러워하는 남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정작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공교육은 어떤가요? ‘행복을 배우는 공교육’ 에서 ‘행복을 느끼는 공교육’ 으로! 이 시대 대한민국 교육은 ‘개혁’ 이 아니라 ‘혁명’ 을 해야 할 시절 인연이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연산 못한다고 수학 능력 없다 걱정하며 아이 기죽일 때가 아니라, 분리수거 하는 법을 배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언급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는 1등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곳들은 누리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만큼 철저히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저는 이 책임제도가 능력주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주

의를 비판만 하기보다는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방법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에 철저히 책임까지 포함한 것이 진로교육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공부를 잘하니 성적순으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판사, 의사가 되겠다’는 것을 넘어 ‘내가 누리는 만큼 법적으로 책임까지 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게 되고 이 고민의 끝에서 책임 있는 판사가 또 의사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즉, 판사의 책임에 내 가족과 내가 뇌물을 받는 순간 형사처분과 함께 자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정작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게 될 것입니다. 능력에 따른 보상은 확실히 해 주되,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단지 성적이 1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성에 맞지 않는 불행한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이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큰 보상에 따른 큰 책임을 저야 하니까요.

아들이 검사가 되면 아버지가 깡패가 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아들이 검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친구한테 밥도 못 얻어먹는 책임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검사 되라 하겠는지요? 의사, 검사, 판사가 되라고 하기보다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진정한 노동의 해방은 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것을 넘어 ‘노동의 놀이화’ 라는 명제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직업과, 없어도 되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없어도 되는 직업에 국회의원이 나오고 꼭 필요한 직업에 환경미화원이 나오지 않을까요?

엄마시민으로 또 학부모로서 행복해하는 우리 아이들 얼굴을 그리며 이런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꿈! 우리 엄마들은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삼삼오오 모여 ‘우리가 등대’ 라는 깃발을 꽂고 모여앉아 이런 낮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힘없는 우리 엄마들도 이런 엄청난 꿈을 꾸는데, 능력 있으신 우리 교육부 고위 공무원님들께서 낮 시간에 다른 부서 업무를 보시는 건 아닌지 가끔 궁금합니다.

‘능력주의’ 라는 이 시대의 불어오는 역풍에 맞서 우리 아이들이 행여 상처받을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바람을 버티면서 12년을 함께 걸어온 울산 등대지기 엄마들.. 어느덧 모임을 시작했던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 있고 얼굴엔 주름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뻑뻑 우기며, 모일 수 있는 정해진 공간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값싼 맥도널드 카페의 불편한 의자에 걸터앉아 아이들 얘기하며 세상 탕도 해가며 코로나 시대에도 그 수다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닥쳐오는 비바람 태풍에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내 안의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 뿐..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 제2세션 발제

능력주의 산실이 된 학교와 시험²⁵⁾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세종시로 이주하기 전, 나는 지하철을 두 번씩 갈아타며 출퇴근을 했다. 6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환승 통로를 지나야 한다. 걸어서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그 통로를 걷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대부분 빠른 걸음 혹은 뽀뽀걸음이었다. 처음엔 왜 사람들이 뛰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 번 환승해야 할 전철을 간발의 차이로 놓치고 나서, 나 역시 뛰어가는 사람 하나가 되었다. 전철 하나를 놓치면 약 5분이 지체된다. 전철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이전 전철이 출발한 뒤에 내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더 길어진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전철을 놓쳤을 때 지체되는 시간은 최대가 된다. 그렇게 환승 타이밍을 두 번 놓치면, 10분 혹은 그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 물론 환승통로에는 다음 열차 도착정보를 알려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보고 뭐고 일단 뛰고 본다. 그렇게 뛰어갔는데 시간이 한참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이 뛰는 이유는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조금 여유를 부리고 걸어가다가 이제 막 출발하는 전철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열심히 뛰었는데도 전철을 놓쳤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시에 출근과 지각이 내 발걸음 1초 차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누군들 뛰지 않을까.

우리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마음은 어쩌면 그 환승구간의 발걸음 같은 것일지 모른다. 자녀교육 장면에서는 그 간발의 차이가 다음 열차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사회 경제적

25) 이 발표문은 발표자가 2020년 김기현 박사와 함께 쓴 <시험인간>의 내용을 기초로 축약한 것임

계층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면 누가 사교육 사업자의 광고를 마음 편히 대할 수 있을까. 이미 자신의 삶이나 주변인의 계층이 그 간발의 차이로 결정되거나 뒤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부모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올바른 투자냐는 점이다.

II. 시험에 중독된 사회

1. 시험 중독의 증상

심리학자 마크 그리피스(Mark D. Griffith)는 행동중독의 6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첫째는 현저성(salience)으로,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자주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도박중독자를 예로 들자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머릿속에 늘 ‘도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은 나중에 도박을 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당장 도박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정서의 조절(mood modification)이다. 그 행동 덕분에 기분이 업되거나 다운되거나 진정되기도 하는데, 그 행동 없이는 그렇게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기분이 완전히 엉망이 된다. 세 번째는 내성(tolerance)이다. 그 행동이 익숙해지면서 다음 번에는 더 오래, 더 강하게 해야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다. 네 번째는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s)이다. 몸과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행동이 필요해진 상태를 말한다. 다섯 번째는 갈등(conflict)이다. 그 행동에 휘둘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본인의 삶 자체도 황폐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재발(relapse)이다. 한동안 그 행동을 끊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 행동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리피스는 이 특징들을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중독에 적용해서 설명했다. 흥미로운 건, 우리사회에서 시험이 이 여섯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1) 시험의 현저성

시험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대입 수능시험이 국가적 행사가 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능시험날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이 조정되며, 항공기의 이착륙 경로조차 변경된다. 심지어 대입시험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지지율이 흔들리기도 한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자격증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자격증시험

준비업체의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1급 자격증만 139개의 코스가 제시돼 있다. 그중에는 예절교육 지도사, 장애인 인식개선 지도사 같은 자격도 있다. 심리상담도 푸드아트 심리상담사나 문학심리상담사 등 세밀한 자격으로 나뉜다. 예절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이나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할 자격도 시험을 치러서 얻어야 한다. 적어도 이 사이트만 보면 한국에서는 모든 자격은 지필시험을 통해서 획득해야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2) 시험에 대한 정서적 의존

한국 사회에서 시험의 결과에 따라 일희 일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실 한국의 고부담 시험은 그 수험생의 평생, 최소한 앞으로 1년을 결정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시험에 의해서 나빠진 사회적 지위나 기분을 되돌리는 건 결국 시험 뿐이다. 지금도 고시원과 독서실에서 각종 공시 공부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현실, 내 불리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시험에 있다고 믿는다. 시험이 조절하는 건 하루하루의 정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방식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탄생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보자. 이 드라마 속 데스크게임의 특징은 혼란이 없다는 점이다. 진행자는 시험 감독관처럼 게임 속 반칙을 감시한다. 그래서 다들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마치 시험을 치르듯 게임에 임한다. 참가자들은 현실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어린 시절 즐기던 게임을 가지고 목숨 값을 건 새로운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3) 시험의 내성 증가

시험의 내성은 어떨까? 초등학교 시절의 시험과 대학입학 수능시험, 그리고 대기업 공채시험 혹은 공무원시험의 난이도 격차를 생각해보라. 초등학교 시절 간단하고 쉬운 퀴즈로 시작해 점차 시험에 길들여지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난이도와 엄청난 시간압박을 부여하는 각종 고부담 시험을 당연한 듯 치러내기에 이른다. 시험에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니고 뒤흔는가.

4) 시험의 금단증상

금단증상은 우리사회가 시험의 중단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설명한다. 사법고시를 폐지할 때 경험했던 전 국민적 반발을 돌이켜보라. 반발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크게 보자면 결국 더 이상 사법고시를 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보이는 금단증상이었다.

5) 시험으로 인한 갈등

시험으로 인한 갈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수험생을 둔 가족 내 갈등이 있다. 수험생이 재수생이 되면 갈등의 범위는 동료와 주변인들로 더욱 넓어진다. 대부분의 장기 공시생들은 거의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살아가는데, 이는 갈등을 넘어서는 관계의 파괴라 할 수 있다. 갈등은 단지 수험생과 주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험은 언제나 논쟁거리였다. 특히 시험의 방향,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극단적인 갈등과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6) 시험의존의 재발

우리가 시험, 정확히는 고부담 시험에서 벗어나보려고 노력할수록 시험의 힘이 약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왔다면, 그것이 재발이 아닐까?

시험이 여러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지는 아주 오래되었고, 시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시험제도를 고쳐보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의 힘을 더 키워주곤 했다. 몇 년 전 정치계에서 시작해 국가적 논쟁까지 불러일으켰던 대입 수시전형제도를 보자.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재능을 단순히 교과목 내신성적이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수능시험 점수로만 평가하지 말고, 학생의 삶 전반을 다면적으로 알아보고 대학입학에 반영하자는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수시전형은 공정성을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되어 폐기될 위기에 처했고, 수시가 대체하려던 고부담 시험이 더 낫다는 여론만 키워놓았다. 1970년대 처음 실시된 대학별 본고사의 운명도 비슷했다. 객관식시험 출제에서 탈피해 논술이나 풀이과정을 강조한 대학별 본고사는, 입시 위주 교육을 강화시키고 과외시장도 더 키워놓고는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이런 시험의 ‘역습’ 현상은 인력선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199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임직원이 신입사원을 추천하는 임직원추천제가 확산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직원추천제가 일부 도입된 바 있으나 이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오히려 새 정부는 이전과는 정반대로 임직원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블라인드채용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대기업별 입사시험도 1990년대 폐지되었지만, 이를 대체한다는 명목하에 도입된 인적성검사는 또 다른 입사시험이 된 지 오래다. 더욱이 입사시험 시절에는 기초과목의 지식만 공부하면 되었지만, 인적성검사가 시행되면서 시험의 영역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개인의 삶 전반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개혁의 역사는 고부담 시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담의 지필시험은 그 모든 도전을 버텨냈다.

2. 사교육과 죄수의 딜레마

1) <SKY캐슬>과 그림자 교육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 <SKY캐슬>은 우리사회의 입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다. 극적 재미를 위해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금수저, 흙수저의 수저계급론을 대입과정에 접목해 한국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특히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사실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는지가 달라졌을 뿐이다. 부모는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학생은 장기간의 수업시간이 끝난 후 수면시간 이전까지 이어지는 사교육 시간을 괴로워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통계청은 2007년부터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²⁶⁾. 2007년 당시 24만원이었던 일반고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018년 38만원으로 올랐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비교해 보면, 2007년의 사교육비는 34만원이고 2018년은 36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62.0%에서 2013년 55.3%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 2017년 60%를 넘어섰고 2018년 65.2%까지 상승했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전체 사교육비 총액이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했다는 점이다. 전체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009년 22조원에서 2014년 19조원으로 낮아졌지만 2018년 20조원으로 늘어났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체 총액이 반등한 것은 놀라운 결과다. 학령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전체 사교육비가 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사교육 열풍이 식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사교육을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 이라고 부른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내용을 모방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연구결과 중에서 주목할 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면 사교육 참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²⁷⁾.

26)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7) 신인철, 김기현 (2010). 학업성취도가 사교육 이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 127-150.

본래 사교육은 학교 수업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교육이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교육을 통해 좀더 앞서나가니, 다른 학생들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참여비율을 학교성적별로 비교해보면, 2018년 일반고의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비율은 73.2%인데 반해 하위 10%는 51.9%에 불과했다. 사교육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라는 이론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그리고 이 결과는 왜 한국의 사교육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 사교육은 배신의 게임

공교육 시스템은 원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준비상태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것이다. 이런 전제가 유지되어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고 그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도 있고, 시험결과는 오로지 그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숙제하면서 익힌 지식과 기술의 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학생이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서 그 학기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학교에 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학생은 나머지 학생들보다 시험성적에서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자기 원래 능력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의 반칙을 알아차렸다. 이 반칙에는 특별히 보복할 수단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제 모두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서 미리 한 학기 공부를 한다. 처음 배신한 학생의 잇점이 사라진다. 그 다음부터 악순환이 시작된다. 배신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센 배신을 하는 것이다. 배신이 배신을 낳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센 배신을 하는 배신의 증폭이 일어난다. 한 학기 먼저 공부가 모두의 룰이 되면 이번엔 아예 다음 1년치 공부를 미리 하기로 한다. 물론 다른 학생들도 곧 이를 따라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년치 공부를 미리 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며 공교육 체계의 전제들을 뒤흔든 결과, ‘수능영어를 중학교 3학년까지 마스터’ 시켜준다는 사교육광고가 어처구니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듯 해 보이는 지경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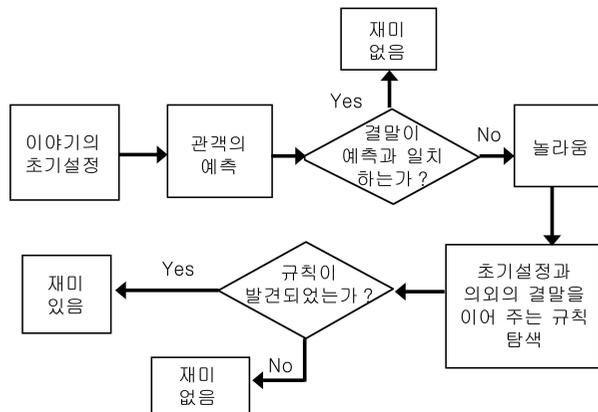
지금 현재 공교육 시스템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흉은 사교육이 아니다. 사교육을 키워주는 불신, 배신의 게임 역사다. 그 배경에는 일회성의 고부담 시험이 있다. 학부모들이 학력고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학력고사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시험 앞에서 배신의 게임에 몰입한 결과, 이제 그 단 한번의 시험 이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험 말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다.

3) 선행학습은 학습인가?

사교육, 특히 한국의 사교육은 공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선행학습이라는 점이다. 중학생을 위해 준비된 내용을 초등학생에게 미리 가르치고, 고등학생용 교과를 중학생에게 미리 가르친다. 공교육의 커리큘럼은 100년 넘은 실행결과를 통해 세심하게 설계된 난이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교과내용이 중학생용인 건, 그 내용은 중학생 연령이 되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난이도의 내용을, 사교육 시스템의 인도를 따라 수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질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내적인 정신구조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정신의 성장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심리적인 요소는 ‘놀라움’ 과 ‘재미’ 라는 감정이다. 이는 “부조화-해소 이론” (incongruity - resolution theory)²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서로 불일치한 예측과 결과가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유발하고, 이에 자극받은 뇌는 불일치한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탐색한다. 그 결과 ‘재미’ 를 경험한다. 보통 통찰학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아하! 경험” (Ah-ha experience)가 이 과정인 셈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위의 원칙을 설명해 보자.

[그림 1]



28) Suls, J. (1983). Cognitive processes in humor appreciation. Handbook of Humor Research, vol.1, 39-55.

- ①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혹은 사건)에는 앞으로 이야기의 전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 즉 초기설정이 있다.
- ② 학습자는 이 초기설정을 근거로 나름대로 지금 하는 경험의 결과를 예측한다.
- ③ 만약 경험한 것의 결말이 학습자의 예측과 일치한다면, 학습자는 이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보통 말하는 “뻘한 경험”을 하고 마는 것이다.
- ④ 그러나 경험의 결말이 학습자의 예측을 벗어난다면 학습자는 우선 ‘놀란다’.
- ⑤ 학습자는 처음의 설정에서 어떻게 그런 결말이 나오는지를 자발적으로 탐색한다.
- ⑥ 만약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찾지 못한다면, 학습은 실패한다. 그 경험은 그저 “황당한 경험”으로 남는다.
- ⑦ 만약 학습자는 초기설정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낸다면, 성공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학습자는 재미를 느낀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며 놀라고,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한다. 지식은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한 이해할 수 없던 경험을 이해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구조가 변화한다. 전에는 몰랐던 것을 배우는 과정은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를 스스로 납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인식의 틀이 확장되고 새로운 지식이 축적된다. 여기에는 몇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우선 학습자가 학습 상황을 처음 접할 때 자신만의 기대 혹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측이 틀렸음을 인식하면서 ‘놀라야’ 한다. 그런데 사교육의 핵심인 선행학습과 시험 훈련에서 이런 조건이 만들어질까? 시험을 보는 응시자의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란 결국 응시자가 준비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는 상황이거나, 혹은 응시자가 선택한 답이 정답이 아닌 상황이다. 시험 훈련을 할 때 예상 못한 결과는 놀라움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공포심이나 좌절감으로 이어진다. 공포심은 도주반응을 일으키고 좌절감은 분노를 일으킬 뿐, 학습의 다음 단계인 탐색으로 나아갈 어떤 동기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시험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지식처럼 보이는 문제풀이의 기술일 뿐이다.

4) 시험 훈련에 빠진 것

사교육의 두 번째 특징은 성과 중심이라는 점이다. 사교육의 성과는 결국 시험 점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교육은 무엇보다도 시험 훈련에 집중되어 있다. 시험 훈련이란, 어떤 시험에서 점수자의 실제 능력보다 더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험 훈련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울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비판적 사고는 문제의 정답이 과연 정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나 필요한 정신과정이다. 그런데 수능시험처럼 문제당 30초 이내에 답을 적어내야 하는 훈련과정에서 비판적 사

고는 방해가 될 뿐이다. 이는 단지 수능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혁신연구소 이해정 소장은 서울대 2,3학년 학생 중에서 2학기 이상 평점 all A+를 받은 학생 150명 중 (조사에 응한) 46명을 포함해 다수의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법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부시간 자체는 중요한 변인이 아니었다. 공부를 열심히 오래한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점이 높지 않았다. 핵심은 노트필기의 방식에 있었다. 강의내용을 노트필기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요약정리하거나 키워드 중심으로 노트한 학생들은 성적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가 말한 걸 그대로 따라 적는 형태의 노트 필기를 하는 학생” 들은 성적이 높았다. 2학기 연속 All A+를 받은 상위 1%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상 한명의 예외도 없이)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학생들이었다. 덧붙여 학점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비판적 사고력 점수는 높았다. 이 소장은 연구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너만의 어떤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고, 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교수님 생각과 다르면 버려야 하며, 교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적어야 좋은 성적을 받는 교육, 이것이 서울대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29)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성적 상위 1%의 공부법이라는 부제로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어 교육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 시스템 자체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다. 시험의 정답은 정해져 있다. 응시자가 아무리 다른 것이 정답이라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도 시험지의 정답을 바꿀 수 없다. 시험이라는 시스템에서 최적의 적응을 하는 방법은 내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정해진 답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답을 찍는 길이다. 이제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똑같이 정답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순간 정답은 권력이 된다. 문제는 현실에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보통 말하는 ‘문제해결력’ 은 시험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능력이다.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창의성이다. 시험 중심의 교육이 교육 자체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의 글을 인용해보자.

고부담시험은 ... 비단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결과가 예산이나 평판

29) 서울대 재학생 성적 상위 1%의 공부법, 가히 충격적, 국민일보, 2015.12.16.

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교사, 학교 가족 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시험의 존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합리화될 수 있겠으나, ‘고득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학습의 본질적인 측면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많은 교사와 교육자들은 공적인 시험과 국가 수준 평가의 일부로서 평가하기에 아주 적절하고 ‘시험점수’(test score)로 수량화하기에 용이한 영역의 ‘학업(academic)’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에게 시험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학교 교육의 목적과 본질을 지배하기도 한다³⁰⁾.

3. 시험과 차별의 정당화

시험 중독은 이것은 개인과 사회, 시장 모두의 문제다. 개인의 입장에서 시험은 오래되고 익숙하며 믿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험에 의존한다. 시장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완성되었고 개개인의 과거 측정내역까지 알 수 있는 시험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며, 선택이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험에 의존한다. 사회는 역사적인 배경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잠재울 수 있고,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는 계층 간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공정성을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는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제도에 만족한다. 처음 시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험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1) 정체성과 시험

시험은 개인의 잠재력을 측정하고, 특정한 교육과정이 개개인에게 미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시험은 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시험을 봐야 하는 세상,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시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세상에서 청소년기까지를 보내게 되면, 시험을 세상의 원리로 여기기 시작한다. 시험이라는 제도가 한 인간의 가치체계의 근간을 이루어 내면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30) 서예원, 이상무, 김혜지, 양희준, 이강주, 홍성환 (2017).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UNESCO 참여연구, 한국교육개발원현안보고서 OR2017-01, p.5

일단 시험을 통해서 주어진 집단정체성, ‘합격자 vs 불합격자’ 라는 정체성은 이제 연속성도 유지하려고 든다. 이는 차별의 공고화, 차별의 영속화로 이어진다. 그 결과 ‘명문대 vs 지잡대’ 의 경계선, ‘정규직 vs 비정규직’ 의 경계선이 그어지고 이를 희미하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게 만든다. 이걸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 이전에 개인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인 것이다. 시험 자체에도 집단 정체성 형성의 원칙이 작동한다. 시험이 ‘정당한 것’ 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가 ‘부당한 것’ 이 되는 것이다.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사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드러난다.

2) 시험과 차별의 정당화

사회학자 오찬호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기 때문에 입사 단계에서 특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당연한 일인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최소한의 기본은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좋은 직장에 다닐 권리를 정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차별적 사고를 통해 현실의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어떤 개그맨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공부 안하면 나중에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열악한 환경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건 그가 공부 혹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더운 곳에서 일하게 내버려두는 세상은 당연해진다. 입학시험부터 자격증시험, 입사시험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이 평생 거처온 시험의 결과는 합산되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과의 계층의 차별을 당연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격차 사이에서 벌어지는 갑질이나 부당함 역시 당연해진다. 차별받는 게 억울하면 진즉에 공부했어야 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차별을 통한 사회적 지위 격차의 정당화 과정’ 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은 단지 차별이 아니라 인종 간의 등급 차이에 대한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점수의 격차도 인간의 등급으로 전환된다.

3) 왜곡된 공정한 채용의 원칙

문제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반발한 이들은 바로 비정규직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일하던 정규직 동료들이었다. 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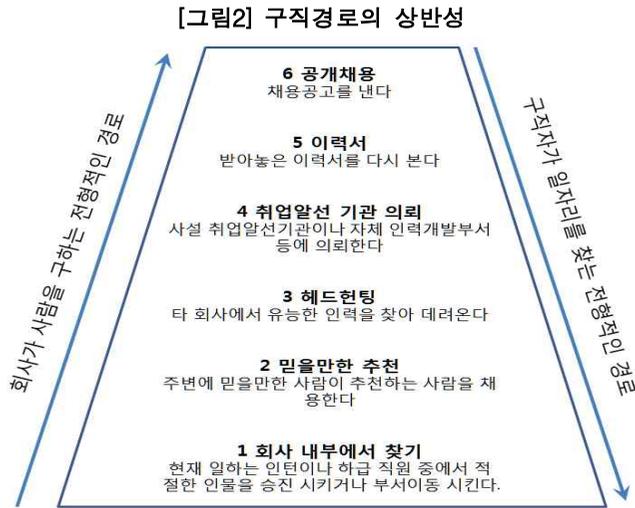
은 비정규직 동료에게 주어진 일이 조직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그럼에도 그들이 같은 직장 내에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심지어 비정규직의 능력이나 자격조건이 정규직인 자신들과 얼마나 차이가 없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정규직원들은 정부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인 비정규직을 ‘경쟁을 거부하는 무임승차자’ 혹은 ‘교직계의 정유라’ 라고 매도했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하지원 건국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정규직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정규직이라는 집단정체성을 자신의 노력이 일구어낸,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31).

이것이 당연한 원칙이나 정의일까? 공채시험을 통해서 조직에 들어서야만 정당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구직 안내책자는 리처드 넬슨 볼스(Richard Nelson Bolles)가 쓴 <당신의 파라슈트는 어떤 색깔입니까?>이다.³²⁾ 이 책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할 때 제일 먼저 인턴 같은 비정규 직원들을 후보로 삼는다. 도의적인 책임의식 때문이 아니다. 이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들이므로, 수행능력과 적성,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인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어떤 시험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정확하기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들로도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때도 답은 시험이 아니다.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제는 그나마 괜찮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경로로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업은 공채시험 같은 가장 덜 정확하고 비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31) [일자리 공정성 갈등] “취업전쟁 이겼는데” … ‘정규직 전환’ 불편한 시험만능사회, 경향신문, 2017.12.4.

32) Richard Nelson Bolles, 1996, 조병주 번역, <당신의 파라슈트는 어떤 색깔입니까?> p.25)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업 정의의 파괴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인력 채용의 경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험은 적절한 직원을 발굴하고 채용하는 방법 중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잠재적인 입사자 수십, 수백,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시험문제를 만들고 실시하고 채점해야 하는 공채시험은 그 자체로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그렇게 선발한 인재가 정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물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4) 시험과 마인드셋

현재 심리학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학자 중 한 명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의 캐롤 드웍(C. Dwek) 교수는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mindset) 개념의 창안자이기도 하다. 그녀에 따르면 마인드셋은 ‘고착 마인드셋’ 과 ‘성장 마인드셋’ 으로 나뉜다.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도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이 성장하게 이끌어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이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공유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의 성장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심리적인 기반이다. 반면에 고착 마인드셋은 실패를 기피하고 안정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를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위협이 되는 심리적인 요인이다³³⁾.

33) Dweck, C.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김준수 번역 (2017) 마인드셋: 스탠퍼드 인간성장 프로젝트, 스몰비라이프 출판사.

그렇다면 시험인간의 사고방식은 어떤 마인드셋에 더 가까울까? 노력과 가능성을 강조하는 성장 마인드셋일까, 아니면 능력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하는 고착 마인드셋일까?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잘한다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본다. 남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노력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계속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고착 마인드셋에서는 남들과의 비교가 우선이다.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내야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시험, 특히 선발도구로서의 시험은 고착 마인드셋과 일치한다. 지난번 시험에서 50점을 받았는데 이번 시험에서 70점을 받아서 자그마치 40% 성장했다고 치자.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성취이고 앞으로 계속 노력할 동기가 부여된다. 하지만 선발고사에서라면, 선발의 기준이 90점 이상일 때 이 사람은 그저 70점짜리 탈락자 중 한 명일 뿐이다. 경쟁 선발시험에서는 99점을 받았더라도, 100점을 받은 응시자들이 너무 많으면 나는 탈락자가 되고 만다. 선발시험에서는 평가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태도다. 고부담 시험에서는 그 시험 이후 응시자가 얼마나 성장할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상 고부담 선발시험은 인간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고착 마인드셋은 또한 차별과 격차의 정당화로 이어진다.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더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열등한 사람은 시험을 통해 걸러져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은 더 ‘나쁜’ 직업을 가지거나 아예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월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열등한 직위를 가진 사람을 하대하는 건 정당한 일이다. 반면에 시험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미래 성장의 가능성 같은 것은 전혀 담고 있지 않은, 단지 수치스러운 일일 뿐이다. 케를 드웁 교수의 말처럼,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불완전함이란 창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믿을 경우엔 특히 더하다³⁴⁾”.

제한된 관찮은 일자리를 향해서 모두가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 환경에서는 고착 마인드셋이 어울린다. 고착 마인드셋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개인의 수행이든 무엇이든 시험 이외의 근거로 시험에 의해 결정된 결과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된다. 즉 고착 마인드셋은 고부담 시험을 내면화한 심리체계이며 장기적으로는 갑질

34) 위의 책 p.114.

을 정당화시키는 심리적 구조라 할 수 있다. 고부담 시험은 고착 마인드셋으로 이어지며, 시험의 결과를 개인의 능력과 자격으로 아주 쉽게 환원해버린다.

5) 시험중독과 레드오션 사회

이렇게 시험과 그 결과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된 시험으로 몰려들게 만들어 제로섬 게임을 더욱 심화시킨다. 고착 마인드셋과 획일화된 고부담 시험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착 마인드셋의 세상, 인간간의 차별적 대우가 당연한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인정받는 직업’ vs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의 경계선이 명확하다. 더운 날 더운데서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은 ‘한심한 직업’이다. 공부 안 한 자들에게 마치 처벌처럼 던져지는 직업이며, 이 직업을 가지게 된 자들은 자신이 공부 안 한 대가로 여기고 감내해야 한다. 공부 잘해서 시험을 잘 본 자들만이 더운 날 시원한 곳에서, 추운 날 따스한 곳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 이걸 불의가 아니다. 공명정대한 시험을 통해서 나누어진, 사회의 정의다. 실제로는 모든 직업과 모든 진로가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지속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시험에 중독된 고착 마인드셋의 인간들에게 어떤 진로는 ‘정답’ 이고 그 외의 진로는 ‘오답’ 이 된다. 이 관점에서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혹은 그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자동차를 소유했는지, 어떤 급의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는지 등)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직업도 마치 시험을 보듯 정답을 찾아야 한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특정 진로에 편중된 과도한 경쟁률과 이에 따른 실패자를 양산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구조가 더욱 더 심화된다. 교육부의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업 1만 개 중에서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상위 10개 희망직업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선호도 상위 10개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고등학생은 5명 중 2명꼴인데, 중학생에서 그 비율은 절반이고, 초등학생 중에서는 5명 중 3명꼴로 높다. 그 상위 10개 직업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대기업이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2006년 이후 계속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호되는 몇몇 직업을 향한 경쟁률은 비현실적으로 높아졌다. 2013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17.6대 1이었다. 그게 2016년에는 자그마치 54대 1로 높아졌다. 이는 54명 중에서 53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시험에 길들여진 결과, 우리의 삶은 더욱 더 실패자에 가까워지고, 진보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하다 퇴보를 하는 아이러니에 빠져든 것이다.

Ⅲ. 마치며 : 시험에 가려진 진실들

시험은 ‘좋은 학군=좋은 학원=좋은 대학’의 공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강남 8학군의 아파트 가격을 지탱하는 건 바로 그곳에 살아야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고등학교와 학원 시스템을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는 학부모들의 믿음이다. 강남 8학군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칭하는 소위 ‘SKY’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이미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학부모들도 많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러나 학원은 그 모든 공로를 자신들의 것으로 돌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그곳에 모이고 8학군의 신화는 더욱 강화된다. ‘좋은 학군=좋은 학원=좋은 대학’의 공식으로 혜택을 보는 건 8학군 지역 부동산 소유주와 입시학원만이 아니다. 대학도 큰 수혜자다. SKY는 한국에서 명문대학의 상징이다. 모든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그곳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대단한 대학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

세계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SKY는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다. 2019년 영국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전 세계 대학 중에서 36위다. 높은 것 같지만, 11위와 12위인 싱가포르 국립대와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보다 한참 떨어진다. 서울대학교는 16위인 중국 칭화대학이나 23위인 일본의 동경대학은 물론, 25위인 홍콩 대학보다도 못한 위치다. 고려대학교는 86위로 간신히 100위 안에 들었으나 연세대학교는 여기에 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대로도 괜찮다. 이들 대학은 굳이 더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수험생들이 서로 입학하려고 경쟁한다. 혜택은 다른 대학으로도 이어진다. SKY가 워낙 손에 닿지 않는 하늘 끝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보다 교육의 질이나 환경이 못한 다른 대학들도 그만하면 괜찮은 대안이 된다. 매우 인기가 있지만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손님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발길을 돌려야 하는 맛집 근처에 다른 음식점들이 함께 장사가 잘되는 것에 비유하면 실례지만, 본질은 큰 차이 없다.

기업은 어떤가. 우리는 왜 대기업에 더 많은 특혜가 주어져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대기업 직원들이 중소기업 직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까? 대기업은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이 합격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곳이다. 경쟁률 치열한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대기업이다. 마치 입시경쟁률이 그 대학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공채시험 경쟁률은 그 기업의 위치를 모두에게 각인시킨다. 시험 자체가 특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뛰

어난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공채시험 경쟁률에서는 이런 기업 간의 능력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요컨대 학원, 사회, 대학 모두 시험중독의 공범이다. 수능 만점은 대치동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부끄럽다 못해 불쌍한 건지조차 모를 정도로 강남8학군의 신화에 도취되고, 출신 대학만을 가지고 차별당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믿게 된 건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입시학원들, 그래야 신입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부실한 대학들, 그래야 자기들의 비효율성을 숨길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병증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끼리 차별하는 건 마치 황새와 조개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어부에 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꼴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 사회가 시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상황은 계속 될 것이다.

■ 제2세션 토론1

‘큰 시험 한 판, 작은 시험 여러 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시험에 중독된 사회와, 죄수의 딜레마 속에 시민들을 가두어 버리는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잘 읽었습니다. 심리학의 논의를 빌어 반복적이고 강박적이고 좀 더 강한 강도로, 또 끊었다가도 다시 회귀하듯 나타나는 시험의 중독성에 대해 쓰인 구절을 읽을 때 마치 담배나 대마초 같은 마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과 계급적 위치의 차이가 사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을, 그리고 시험 성적을 통해 드러나는 사교육의 효과 혹은 사교육을 하지 않은 효과 때문에 시민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죄인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사실 사교육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을 키워준 불신과 배신의 역사, 즉 시험 말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시험 중독 사회가 만드는 폐해와 사교육 중독 사회가 만들어 내는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어떻게든 벗어나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시험과 사교육이 차별을 정당화 한다는 말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 외에도, 모욕감에 세상을 등진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언급했던 어느 명문대생의 ‘대나무 숲’ 포스팅도 생각이 납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즉 ‘등용문’을 뚫지 않고 온 존재들에 대한 멸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세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평가 받고 또 평가 받지 않아야 할까요? 큰 시험 한 판(수능, 고시, 전문직 시험 등)으로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시험 여러 판은 어떤가요? 지필 고사만 아니면 되는 걸까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수능 위주의 정시보다 입학사정관제부터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가 더 나은 입시 방향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미셸 푸코를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학생 개개인들에게 교사가 다양한 매력이나 개성을 존중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종’에 기반을 둔 수시가 낫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저는 ‘시험 한 판 역전’이 좋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모

범생’이 아니면 계속 어딘가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간섭’ 받는다고 느낄 학생의 관점이 그 논쟁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지 이따금 궁금해집니다. 학부모와 교사들과 대학, 그리고 사교육 업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학생의 목소리란 건 도무지 무엇이 되는 것일지요? 꼭 대안학교에 갈 만큼 강한 자의식을 가지지 않은 학생이라도 뭔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험을 통해서 ‘출세’를 하더라도 맘대로 되지 않는 일은 많습니다. 최근 뉴스 플로우를 탔던 ‘설거지’ 론 같은 것을 접하게 될 때도 “대입 점수가 오르면 반려자의 얼굴이 변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학교에서 입시지상주의를 설파했음에도, 자기 맘대로 파트너를 만날 수 없다는 소위 ‘모범생-전문직’ 출신들의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항상성이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이나 공사 입사자들이 ‘시험 없이’ 전환되려는 비정규직에게 ‘언감생심’을 언급하면서 비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공기업에 지필고사로 입시한 세대 역시 특정한 시대의 산물입니다. 공기업의 인기가 지금 처럼 올라간 것 역시 1998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의 일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없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반에서 하위 3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수시, 정시, 학종, 수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학령인구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시대에 이제 학생들은 지방거점국립대 정도는 무조건 갈 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지방사립대는 ‘붙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떨어져서’ 가는 학교가 됐습니다. 10~15% 선망직장(대기업, 면허소유 전문직, 공무원, 공사-공기업 직원)에 입직하려고 청년들이 ‘시험’을 볼 것인지 ‘AI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는 게 더 ‘공정’한지를 놓고 싸우고 있을 때, 나머지 85~90%의 청년들은 입사시험조차 없는 ‘중중소’ (중견, 중소기업)에 입사행 ‘최소임금연동제’ (천현우, 2021)에 연동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평가’와 ‘야근 수당’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능력주의’와 ‘시험’에 대한 고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험을 없애야 합니까? 아니면 더 ‘공정한 기준’을 전사회적으로 확장시켜야 합니까?

큰 시험이 주는 사회적 중압감과 중독, 만능성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효과 모두를 극복해야 할 겁니다. 작은 시험이 주는 통제감에도 주목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살피야 하겠죠. 동시에 그게 이미 구축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능력주의’와 ‘공정’에 편입되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시험이 작동하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 드립니다.

■ 제2세션 토론2

‘N수’ 권하는 사회³⁵⁾

엄수정(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능력주의 산실이 된 학교와 시험’을 주제로 한 장근영 박사님(이하 ‘발제자’)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기회에 감사드린다. 발제자는 시험에 중독된 사회 현상을 짚고, 그러한 현상을 야기하고 유지시키는 매커니즘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험 중독의 부작용, 즉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발제자는 위트와 통찰력 있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시험을 향한 한국 사회의 광적인 관심, 불안, 열망을 조명하며,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자는 시험 중독이라는 현상이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실패자에 가까워지고, 진보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하다 퇴보할 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본 토론 원고에서는 ‘대입 N수’라는 하위 현상을 통해 발제자의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능력주의가 지배담론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시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대입 N수라는 맥락 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N수생들의 삶, 능력주의 담론이 관통하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으로 인해 ‘대입 N수생’이라는 특별한 집단을 만들어 낸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수능 응시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입 N수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2020)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능 응시자 수는 2019년에 약 59만 명, 2020학년도에 약 54만 명, 2021학년도에 약 49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능 응시자에서 졸업생(검정고시 등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학년도에 22.8%, 2020학년도에 25.9%였고, 2021학년도에는 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특히 N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지역 및 경제적 배경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서울에서도 강남권에 몰리고 있다. 매일경제는 한국

35) 본 토론문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대입 N수생의 삶과 문화」(엄수정·송요성, 2021)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교육과정평가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2021학년도 수능에 접수한 N수생들의 지역별 차이를 보도하였다. 서울만 살펴보면 3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N수생 비율이 53%로 고등학교 재학생보다 졸업생 응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N수라는 기이한 현상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고 유지되는 것인가? 서울과 수도권, 강남 지역에 집중된 대입 N수 패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N수 열풍은 본 포럼이 주목하는 능력주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토론자는 최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대입 N수생의 삶과 문화’ 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입 N수를 경험한 19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능력주의 사회와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제시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며, 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 괄호 안에 가명을 넣어 화자를 표시하겠다.

마법의 주문, 대학 줄 세우기

연구에 참여한 N수생들은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 국송세단’ 으로 이어지는 서울 소재 18개 대학교의 서열을 ‘마법의 주문’ 과도 같이 외우고 있었다. 이중기는 “서연고 서성한까지는 [...] 1년을 더 하는 건 그럴 수 있고, 학벌이 중요하니까” 라고 설명했다. 높은 서열의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N수를 하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좋은 학벌에는 사회적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선민은 자신이 반수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존 대학의 ‘이름’ 이 취업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선민은 선배들의 취업 후기를 통해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사회적 ‘위치’ 를 확인하게 되었고, 학벌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

OO대학교에 와서 학벌에 대한 니즈(needs)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선배들이 기업에 입사했던 과정을 적어뒀던 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OO대라는 이유로] 서류 탈락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 사실 OO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학벌은 아니잖아요. [...] “SKY 정도 아니면, 서류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선민)

이선민의 이야기는 능력주의가 단순히 ‘환상’ 혹은 ‘허구’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을 생성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군가가 대학 ‘수준’ 때문에 서류 전형

에서 떨어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있어 능력주의 담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석되고 공유된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 이선민을 감응시켰다. 대학 간판으로 인한 선배의 좌절감은 이선민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선민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졌고, 그것은 학벌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선민은 N수를 통해 한의과대학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능력주의 담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시선’을 통해서도 재생산되고 강화되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연구 참여자들을 능력주의 담론에 길들이는 작지만 강력한 도구로 기능했다 (Foucault, 1977).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사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욕망을 읽었고, 사회가 중시여기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익혔다. 김정환은 “흔히 말하는 명문대”를 ‘좋은’ 대학이라고 보았고, “대학 레벨이 달라지면 주변에서 보는 것”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성취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감각이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좋은 삶이란 안정적인 삶

N수를 해서라도 ‘높은’ 순위의 대학에 가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그것이 가져온다고 믿는 ‘좋은 삶’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정의하는 ‘좋은 삶’의 키워드는 ‘안정’이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이재현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저는 스트레스가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IMF 시대가 오든 코로나 시대가 오든. [...]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제 삶은 언제나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재현)

1997년 IMF 위기 이후부터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는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N수생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안정적 삶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학벌 자본이었다. 이재현이 말한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삶’은 불안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욕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지향은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교사나 공무원, 전문

직에 대한 선호로 나타났다. 임용 경쟁이 치열한 사범대학 학과보다는 교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의치한’ 열풍, 즉 의대, 치대, 한의대를 향한 수험생들의 무조건적인 열망도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높은’ 학벌이 ‘좋은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은 거꾸로 ‘낮은’ 학벌이 ‘좋지 않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귀결된다. 지방 소재 대학에 입학한 연구 참여자 신영진은 본인의 학벌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았다. 그는 본인의 학력이 미래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결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능력이 없는데 굳이 제가 가족을 꾸려서 책임질 사람을 늘리는 것은 저한테도 그렇고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민폐가 아닐까 싶어서...” (신영진). 청년 실업률이 높은 현재의 불안정한 노동 시장은 안정을 추구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좋은 삶의 핵심을 안정이라고 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과 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감성공론장,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 참여자들은 능력주의 담론과 사회의 교육열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중요한 매개체로서 기능했다.

입시 사이트가 몇 개가 있어요 [...] 입시 정보 사이트이기도 하면서 고3이나 N수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거기서 생기는 문화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 학벌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죠. [...] 의치한약수라고 해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항상 최고고 그런데 안 나오면 인정 안 해 주고 ‘어디 대학교 어디 학과 대, 어디 대학교 어디 학과가 낫냐? 여기가 낫냐?’ 그러기도 하고, 문과 이과 서로 싸우기도 하고 (김재우)

온라인 공간에서 수험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질의와 토론은 학벌이 곧 능력이고, 그것은 곧 성공이라는 공식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감성공론장’으로 기능하며 학벌에 대한 욕망이 공유되고 전염되고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감성공론장은 김예란(2010)이 제안한 개념으로 “인간의 감정, 정동, 느낌, 사고, 의견이 다양한 육체적·상징적 소통 과정에서 감응, 전달, 공유되어 형성되는 사회의 마음,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p. 166).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만 오가는 공간이라기보다,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고 집단적 사고와 관점을 형성하는 공간이었다.

학원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강사를 평가하는 글에서, 그리고 대학 서열에 대한 논쟁에서 다양한 감각의 힘이 분출되었다. 사교육에 대한 강한 신뢰 혹은 불신, 사회적 인정을 향한 욕망, 경쟁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자본화된 입시 시장에 대한 좌절감과 억울함, 경멸, 집착, 자책감, 실패감 등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각들은 서로를 감응시켰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읽고, 댓글을 쓰며, 혹은 논쟁에 참여하면서 학벌에 대한 욕망을 키우기도 했고, 타인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N수생들로 하여금 사회의 욕망을 온몸으로 익히고 그러한 욕망을 확산시키는 행위자로 주체화하였다.

능력주의와 자본주의의 만남, N수 사교육 시장

사회의 광적인 교육열에 기대어 발전한 사교육 시장은 N수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1년에 30만 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부터 일타강사들이 과목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입시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학원까지 다양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선택지가 있어서 “[N수]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졌다고 분석하였다(이재현). 사교육 시장의 발달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쉽게 N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교육 시장은 N수생들로 하여금 소비자로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의 성향과 학습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더 ‘매력적인’ 선택지는 정해져 있었다. 일타강사의 인터넷 강의보다는 현장 강의를, 방임적인 학원보다는 수험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학원을, 다른 지역보다는 목동, 분당, 강남 지역의 학원을, 성적이 낮은 반보다는 높은 반을 선호했다. 학원 지역에서 멀리 사는 경우, 거주 환경에 대한 선호도 존재했다. 그것이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과 가깝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에 따른 N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사교육 시장의 발달로 선택지는 많아졌으나, 더 좋은 학원과 더 쾌적한 환경에서 N수를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커졌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수험 방식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은 대입 경쟁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집단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 시장의 발달은 N수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선택지를 위계화하였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대입을 향한 교육열을 불모로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대학 입학은 더욱 특권화 되었다.

N수생들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 사회는 N수를 권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N수생들은 능력주의 담론이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능력을 시험 성적이라는 지표로 나타낼 수 있고 서열화할 수 있다는 가정, 서열에 따라 특혜가 차등적으로 주어진다는 믿음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일상 대화를 통해, 심지어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대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N수를 선택했다고 보았으나, 그들의 선택은 온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능력주의 사회의 광적인 교육열, 교육에 대한 가족의 기대와 신념, 사회·경제적 지위, 대학 입시 체제, 교육 제도, 산업 구조, 노동 시장, 자본주의 체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힘을 발휘하는 사회 안에서 생성되었다.

둘째, 능력주의는 우리 사회의 지배담론으로 기능한다. 연구에서 능력주의는 N수생들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경험을 형성하며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능력주의 담론은 단순히 억압의 기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구축하고 욕망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했다. 그들이 어느 대학과 학과를 희망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능력주의는 연구 참여자를 넘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래서 차용 가능한 담론으로 기능한다. 능력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능력과 노력, 성공과 실패, 좋은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공정과 불공정, 평등과 불평등을 구분하는 기준을 결정한다.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와 장치, 문화가 형성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몸’을 작동시킨다.

셋째, N수생들은 지배담론의 예속적 주체이자 적극적인 행위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의 지배담론인 능력주의를 온몸의 감각으로 익혔고, 그것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이러한 이중적 움직임은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 포착된다. N수생들은 서로 입시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능력주의 담론에 영향을 받기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입 N수가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이자 그것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입 N수는 청년들이 능력주의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재단’ 하는 기간이다. 동시에 대입 N수는 발제자가 말하는 ‘시험인간’을 길러냄으로써(김기현·장근영, 2020), 이 사회가 특정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코드화된 욕망에 따른 개인의 삶은 사회적 차별을 비가시화한다. Deleuze와 Guattari(1987)는 ‘매끈한 공간(smooth space)’과 ‘홈 패인 공간(striated space)’이라는 은유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공간의 모습을 시각화한다. 매끈한 공간은 고정된 규칙이나 코드, 형식으로 통제되지 않아 사방으로 열린 공간이다. 반대로, 홈 패인 공간은 매끈한 공간에 홈을 파서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한 욕망의 흐름을 조절하여 질서 있게 만든 닫힌 공간이다. 능력, 성공, 좋은 삶 등이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사회는 홈 패인 공간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은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범과 규칙을 따라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홈 패인 공간의 ‘정상 상태’는 모든 것이 홈을 벗어나지 않고 기존 질서를 충실히 따르는 상태이다(Deleuze & Guattari, 1987).

대입 N수가 늘고 있는 현상의 배후에는 검은 속내를 가진 ‘억압자’가 존재하는 것도, 그것에 속거나 순종하는 ‘피억압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N수생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진짜’ 문제는 홈 패인 공간에서 코드화되어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우리, 즉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이다. 지금의 N수 열풍은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으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망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가고자 하는 N수생의 욕망, 더 좋은 스펙과 성적의 지원자를 뽑고자 하는 대학의 욕망, 대학 간판으로 ‘증명된’ 능력자를 선택하려는 고용인의 욕망, 사교육 시장에서 이윤을 획득하려는 기업의 욕망이 얽혀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실천들은 사회적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의 사유와 삶의 방식에 특혜와 보상을 제공하는가?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를 위한 여러 시험은 어떠한 방식의 삶을 측정하고, 그로 인해 배제되는 삶은 무엇인가? 대학, 더 나아가 소위 ‘명문대’ 입학이라는 욕망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고, 그렇지 못한 주체는 누구인가? ‘홈 패인 공간’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토론자는 학교 교육과 능력주의와 관련한 두 가지 토론 질문을 제안하며 본 원고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 능력주의 담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실천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홈 패인 공간’에서 무엇이 ‘홈’을 파는 장치로 기능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학

교의 상식적이고 관습적인 교육적 실천이 학생들을 어떤 존재로 길러내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우월감과 성취감을 주고 누구에게 열등감과 자책감을 주는지, 그것은 전체 사회 질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하는 대안담론을 학교 안에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가치, 사유와 삶의 양식,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지금의 ‘정상 상태’가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흐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현·장근영(2020). 시험인간. 생각정원.
- 김예란(2010). 감성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 사회, 18(3), 146-19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보도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보도자료.
-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Continuum.
-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Vintage Books.

■ 제2세션 토론3

「경쟁과 능력주의의 산실이 된 시험과 학교」 토론문

전경원 (경기도청 교육정책자문관)

1. 앞마당

스포츠는 ‘경쟁’을 기본 전제로 한다. 다양한 종목이 존재하듯 다양한 경쟁의 방식이 존재한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나 이외의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이 주축을 이룬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심판의 개입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기록경기 가운데 나름 점잖은 경쟁 종목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론 ‘양궁’과 ‘마라톤’ 정도가 떠오른다. 물론 이런 기록경기 종목도 타인과의 경쟁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타인과의 경쟁보단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산출되는 경기이므로 그런 인상을 주는 듯하다.

양궁은 올림픽에서 남녀 개인과 단체 모두 네 개의 세부 종목이 열린다. 2021 도쿄 올림픽에선 혼성단체까지 열리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또 2010년부터는 경기 방식도 단순 집계에서 벗어나 세트 시스템 등으로 바뀌며 긴장감과 박진감이 넘치는 스포츠로 바뀌었다. 특히 여자 단체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21년 도쿄 올림픽까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연속 제패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특출난 재능을 발휘하는 배경이 무엇일까? 혹시 역사적으로 활쏘기에 재능이 있었던 민족은 아니었을까 하는 호기심에 고문헌을 먼저 살펴보았다. 눈에 띄는 표현들이 확인된다. “동이족(東夷族)” 그리고 “고주몽(高朱蒙)”. 중국인의 동이족에 대한 인식은 다른 주변 민족에 비해 뚜렷하여 선진문헌에서부터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夷)’라는 글자의 어원에 대하여 『설문해자(說文解字)』는 대궁(大+弓), 즉 커다란 활(大+弓=夷)을 잘 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도 그 이름이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인 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동이가 한민족의 근간이 된 예맥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의 한족과 대립하면서 중국 및 북방종족들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 전통을 유지·발전시켰다는 것이다.³⁶⁾

2.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경쟁(競爭)’의 유래와 인식

2.1. 『논어(論語)』, 팔일(八佾), 7장(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경쟁하는 일이 없으나 반드시 활쏘기에선 경쟁한다. 활을 쏘려고 올라갈 때 짝이 된 이에게 읍(揖)하고 사양하며 당(堂)에 오르고, 활을 쏘고 내려왔다가 진 사람은 다시 당에 올라 별주를 마시니, 그 경쟁하는 모습이 군자답다.³⁷⁾

2.2.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0월 2일 정해 1번째 기사 14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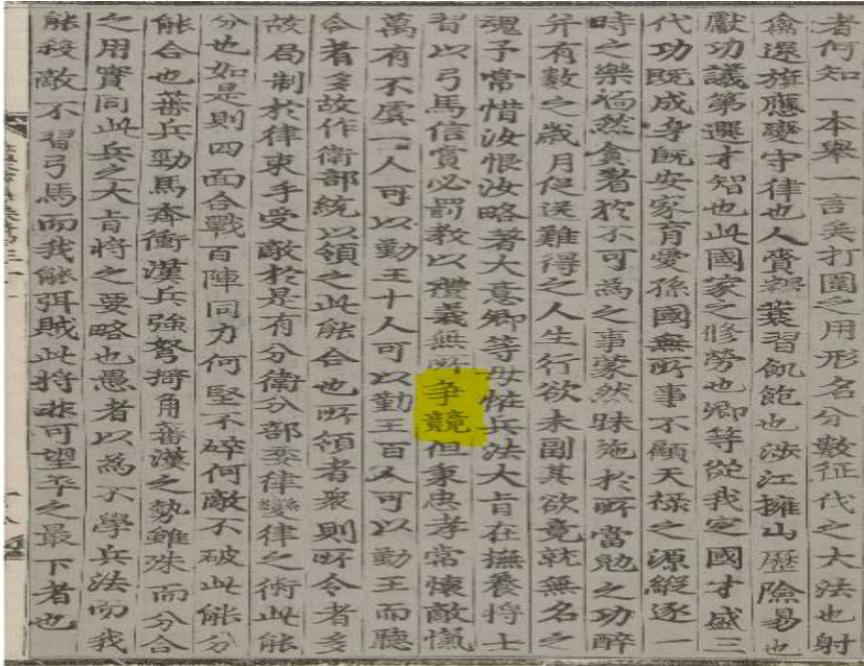
신숙주·최항이 「어제유장(御製諭將)」 3편을 주해하여 바쳤다. “대개 만물(萬物)의 삶에는 그 기습(氣習)에 따라서 성명(性命)을 바로잡는다. 물형(物形)이 닳고 마음이 같고 기운이 닳고 행동이 합치(合致)하더라도, 강하고 부드러운 데 방법이 다르고 지혜롭고 어리석은 데에 일을 견주니, 이것은 그 본업(本業)이므로 누가 그 삶을 수고롭게 하겠는가? 비록 수고롭게 하더라도 바꿀 수는 없다. 이를 정명(正命)이라 이르는 것이다. 수고로움을 닦으면 삶이 있고, 수고로움을 포기(拋棄)하면 삶이 없는 것이다. 삶이 있는데도 삶이 없는 것을 구한들 얻지 못할 것이며, 삶이 없는데도 남이 있는 것을 잡으려 하더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제(救濟)할 때 무(武)로써 평정(平定)하고 문(文)으로써 다스리는 것이 수고로움을 닦는 강령(綱令)이요, 법전(法典)을 제정하여 상(賞)을 주고 벌(罰)을 주어 명령을 시행하고 금지(禁止)시키는 것이 수고로움을 닦는 요목(要目)이다. <중간생략>

내가 항상 너희들을 애석하게 여기고 그대들을 한(恨)하면서 병법의 대의(大義)를 대략 저술(著述)하였으니, 경들은 괴이(怪異)하게 여기지 말라. 병법의 큰 뜻은 장수(將帥)와 병졸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이(東夷)’.

37) 『논어(論語)』, 팔일(八佾), 7장(章), “子曰(자왈) 君子無所爭(군자무소쟁)이나 必也射乎(필야사호)이니 揖讓而升(읍양이승)하여 下而飲(하이음)하나니 其爭也君子(기쟁야군자)니라 必也(필야)니라.”

(兵卒)을 어루만져 양성하고, 활쏘고 말타기를 익히며, 신상필벌(信賞必罰)하고, 예의(禮儀)를 가르쳐서 다투며 경쟁(競爭)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하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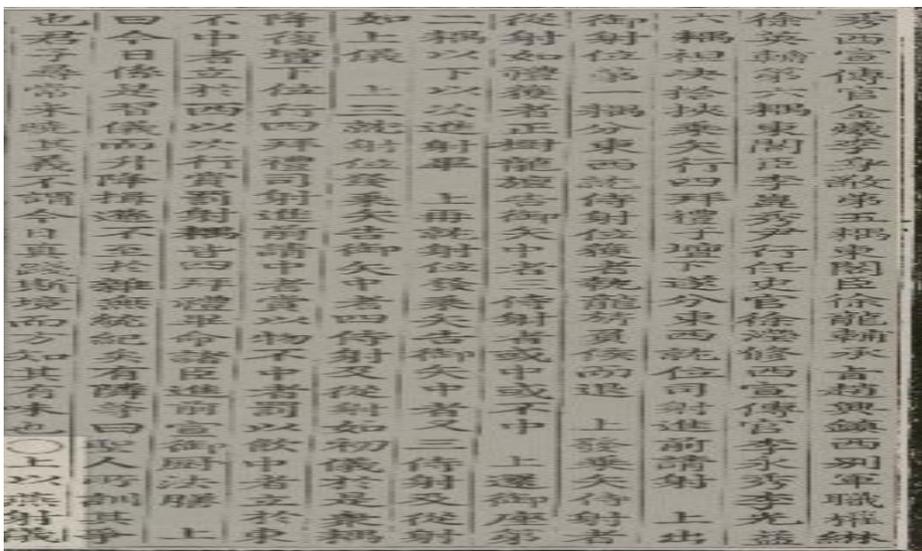
2.3.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12월 10일 정묘 1번째 기사(1783년)

춘당대에서 연사례 습의를 행하다. 춘당대(春塘臺)에서 연사례(燕射禮) 습의(習儀)를 행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성주(成周) 때의 제도에 천자(天子) 제후(諸侯)의 활쏘기가 세 가지가 있었으니, 태궁(澤宮)에서의 활쏘기를 대사(大射)라 하고 교외(郊外)에서의 활쏘기를 빈사(賓射)라 하고 연침(燕寢)에서의 활쏘기를 연사(燕射)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의 활쏘기는 모두가 덕행(德行)을 관찰하고 예양(禮讓)을 익히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국조(國朝)에서는 태궁에서와 연침에서의 것을 모두 대사(大射)라고 하였고, 또한 그 의문(儀文)에 있어서도 대부분 후세(後世)의 것을 인습(因襲)한 것이 많아, 꼭 모두 성주 때의 제도에 맞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몇 해 전에 각신(閣臣)에게 명하여 《의례(儀禮)》 및 《대례(戴禮)》를 널리 고찰해 보고 짐작해서 가감(加減)하여 한 번 강행(講行)하게 했었는데, 그 뒤에 그럭저럭하다가 다시 수거(修擧)하게 되지 못했기에 항상 마음속에 애석했었다. 내년 봄에는 다시 연사례를 차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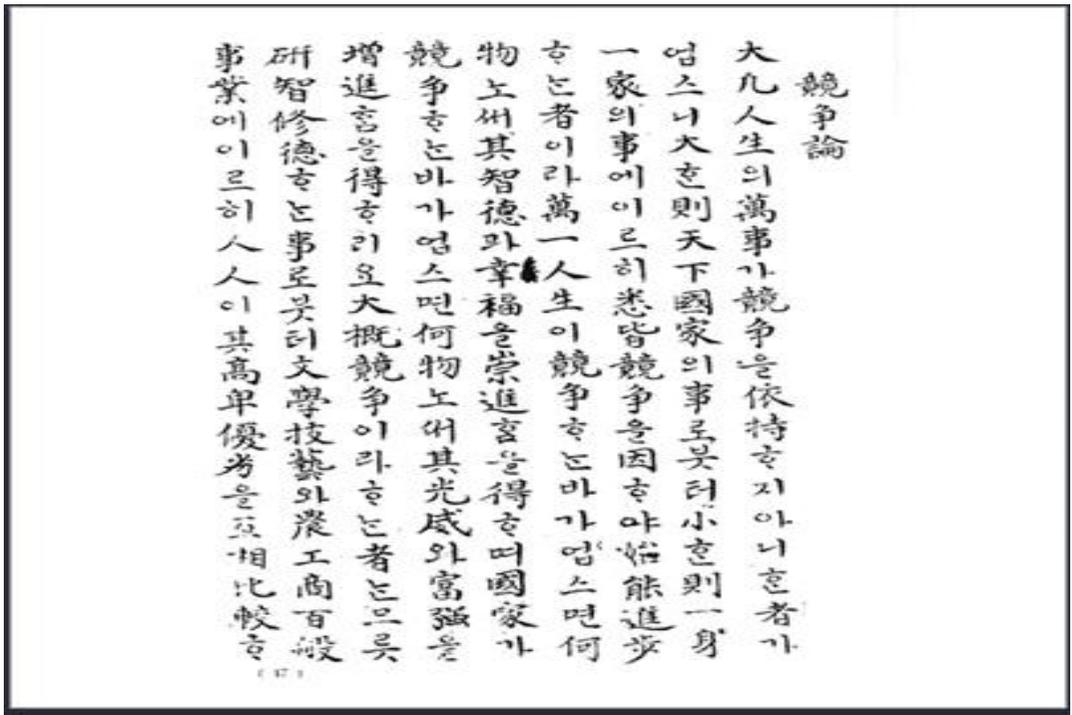
싶는데 각속(閣屬) 중에는 이 연사례를 보게 되었던 사람이 한, 두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미리 앞질러 습의(習儀)를 해 본 다음에야 일에 임하여 잘못하게 될 염려가 없게 될 것이기에 특별히 경(卿)들을 불러 이 연사례를 함께 행해 보려는 것이다.” 하고, 이어 각신(閣臣) 서호수(徐浩修)를 명하여 사사(司射)로 삼았다. 이에 사사가 부(部)를 나누어 시사(侍射)하는 제신(諸臣)들이 6우(耦)가 되었는데, <중간생략>

임금이 어좌(御座)로 돌아오자, 제2의 우 이하가 차례대로 나아가 쏘기를 끝냈다. 임금이 재차 사위(射位)로 나아가 승시(乘矢)를 쏘았는데 어시가 또한 3개가 맞았음을 고하였고, 시사(侍射) 및 종사(從射)는 첫 번의 의식대로 쏘았다. 임금이 3차로 사위에 나아가 승시를 쏘았는데 어시 4개가 맞았음을 고하였고, 시사 및 종사는 첫 번의 의식대로 쏘았다. 이에 여러 우(耦)들이 내려가 단하(壇下)의 자리로 가서 사배례(四拜禮)를 거행하고 나니, 사사(司射)가 나아가 맞춘 사람에게는 물건으로 상을 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술로 별을 주기 청하므로, 맞춘 사람은 동쪽에 서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서쪽에 서도록 하여, 차례대로 상과 별을 거행하였고, 사우(射耦)들이 일제히 사배례(四拜禮)를 끝내자, 제신(諸臣)들을 앞으로 다 가오도록 명하여 어주(御廚)의 법膳(法膳)을 내리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습의(習儀)를 해 본 것인데 승강(昇降)과 읍손(揖遜)이 난잡하거나 질서가 없게 되지 않았다.” 라고 하니, 서유린 등이 아뢰기를, “성인(聖人)의 교훈에 ‘경쟁(競爭)을 함이 군자(君子)답다.’ 라고 한 것을 심상하게 여겨 그 뜻을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실지로 그런 장면(場面)을 보면서 바야흐로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2.4. 근대 지식인 유길준이 인식했던 ‘경쟁(競爭)’ 38)

‘경쟁’ 개념에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유길준이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경쟁론(競爭論)>(1883년)을 썼다. 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무릇 인생의 만사가 경쟁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크게는 천하국가의 일로부터 작게는 일신일가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진보하는 것이다. 만일 인생이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무엇으로 그 지덕(智德)과 행복을 승진(崇進)함을 얻으며, 국가가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무엇으로 그 광위(光威)와 부강(富強)을 증진함을 얻을 수 있리오. 대개 경쟁이라 하는 것은 무릇 지혜를 연찬하고 덕을 수양하는 일로부터 문학, 기예와 농공상 모든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그 높고 낮음, 뛰어난과 열등함을 서로 비교호(이하생략)”

38) 김석근, 「유길준의 ‘경려(競勵)’를 다시 생각한다.」, 『아산칼럼』, 2015. SEP. 07. 전체 내용을 인용 하되, 원문 번역은 필자가 다시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영어 단어 competition을 ‘경쟁’이라 처음 번역한 사람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다. 당시 고위 관리들은 ‘경쟁’이란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다툼 ‘쟁(爭)’이라는 글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진보가 이뤄진다는 생각은 그 시대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이기도 했다. 다툼하면 그저 활쏘기 정도를 생각하던 유교 사회였으니까. 젊은 유길준은 당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경쟁의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을 특별히 더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경쟁이 만들어 낼 폐해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듯하다.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오늘의 현실을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경쟁이란 단어를 고집했을까.

과연 몇 년 후에는 유길준의 생각도 바뀌었다. 그는 <경쟁론> 12년 후에 출판한 『서유견문(西遊見聞)』(1895년)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미국 유학 경험과 세계일주를 통해 현실의 무한 경쟁이 빚어낼 수 있는 냉혹한 폐해와 잔악함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당시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이나 약육강식(弱肉強食) 개념이 유행하는 제국주의 시대였다. 그 가운데 처한 약하다 약한 조선을 보며 그는 여러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는 ‘경쟁’ 대신 ‘경려(競勵)’라는 독창적인 단어를 사용했다(제 4편 <人世의 競勵>). 다툼 ‘쟁(爭)’ 대신에 권장할 ‘려(勵)’를 택한 것이다. ‘겨루면서(競) 격려한다(勵)’는 정도가 되겠다. 오늘로 치면 ‘경쟁’은 제로섬 게임, ‘경려’는 윈윈게임이라 할 만하다.

‘경려’와 관련해 그는 두 측면을 지적한다. 먼저 ‘강기(綱紀: 기강)’가 있어야 한다는 것. 지켜야 할 규칙이나 윤리가 없는, 과도한 경쟁은 강자의 적나라한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행실(行實)’의 개화도 강조했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경쟁에 대해서 유길준은 이렇게 논평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보물을 던지면 무리들은 갑작스레 난동을 피우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추태를 부릴 것이다. 불쌍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니, 이것은 경려하는 도에 강기(綱紀)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풍속도 한 번 바뀌면 새로운 도(道)에 이를 수 있다.”

3. 경쟁과 능력주의의 산실이 된 시험과 학교

“저는 서울 목동에서 자랐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같은 학원에 다녔고, 똑같이 교육열이 대단했어요. 저를 포함해 중학생 아이들 700명이 등수를 다했어요. 좀 잔인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시절의 공부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과학고에 진학했고,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지요.”

“제가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해 보지 못한 이유는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과학고 출신이 아니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20대에 판사가 됐어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심외관 발령도 받았습시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으로 승자가 됐다는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다.”

“지나친 겸손인가요? 아니면 자신감 부족인가요?”

“말씀드렸듯 제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저만큼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한 친구들, 저만큼 건강하지 않았던 친구들, 저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훈련받지 못한 친구들, 저만큼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친구들, 저만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친구들,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친구들이 셀 수 없이 많았고, 그 친구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 됐습니다. 이들은 누구 하나도 남이 아닙니다. 저에겐 이렇듯 수많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세계 중요한 가치는 합리주의입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밴 정신 같아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몸에 자리 잡은 가치는 효율성, 공정성 이런 것들입니다. 할당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할당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남성은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할당제가 한시적인 법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 되었잖습니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든지...”

“자신이 얻은 기회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게 아닐까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 영역에서 약자이자 소외된 입장이라면 할당제를 통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교원에 여교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남성 할당제를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꼭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제도나 법률로 보완하며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공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함은 시험 성적, 그 결과 그대로 결정이 되어야지 다른 요소가 개입하는 순간, 공정한 잣대와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런저런 사유를 들기 시작하자면 이유 없는 죽음이 있으며, 사연 없는 무덤이 있을까요.”

“진보와 보수의 진검승부가 다가오고 있는 듯하네요. 공정한 경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³⁹⁾

4. 남겨진 문제

이젠 남겨진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해야 한다. 치열한 토론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우리 역사를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능력주의를 대표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무엇이 있었을까. 가장 대표적인 능력주의를 상징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제’ 일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과거제는 958년 고려시대 광종 9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니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인재 선발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그러한 선발 방식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대입학력고사’,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각종 ‘고시’ 등의 형태로 이어지는 흐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경쟁’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제도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로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39) 전경원, 「이준석의 ‘능력주의’와 이탄희의 ‘공정경쟁」, 『공정교육론』, 도서출판 좋은땅, 2021, 13쪽-16쪽. 2021년 6월 15일, 한겨레신문 칼럼 「왜냐면」 기고문.

보완해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하여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의미 있고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역사학자 알렉산더 우드사이드는 동아시아 3국, 즉 중국, 한국, 베트남 역사에서 시행된 과거제도를 살펴보며 이들 세 나라가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대적 합리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한국, 베트남에 성립한 왕조들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상류 사회의 세습적 권리와 관계없이, 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능력주의적인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들을 뽑았다.”⁴⁰⁾ 그 시기는 서구 사회가 세습적 신분사회에 머물러 능력주의적 인재 선발을 아직 상상도 못하던 때였고 같은 동아시아의 일본도 유사했다. 역사학자 이남희는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지역에서의 지배층은 무력을 장악한 계급이었으며 그들은 신분에 의한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봉건시대의 유럽이 그러했다. 그리고 같은 동아시아에 속하는 일본에서도 과거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봉건사회에서의 지배층은 무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무라이 계급이었다.”⁴¹⁾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배분하는 능력주의 체제는 서구 사회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야 출현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우드사이드는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서구인의 시선이 착각이자 오만일 수 있다고 말한다.⁴²⁾

인용문에 의하면, ‘능력주의’에 기반한 경쟁 시스템 선발 방식은 서양보다 동양에서 그것도 동아시아에서 먼저 시작된 인재 선발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야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배분하는 능력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주의가 정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으로 대두한다. 오히려 ‘능력주의’라는 관점 자체가 갖는 한계와 모순이 더 위험하다는 평가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혈통과 신분이 아닌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재 선발 방식이 갖는 진일보한 측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능력주의와 경쟁 시스템

40)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잃어버린 근대성들 :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위험성』, 민병희 옮김, 너머북스, 2012, 24쪽,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021.09, 28쪽 재인용.

41) 이남희, 「과거제도, 그 빛과 그늘」, 『오늘의 동양사상』 18권, 2008, 118쪽,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021.09, 28쪽 재인용.

42)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021.09, 28쪽.

템은 또 어떤 한계와 보완해야 하는 지점이 있는지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소명이다.

능력주의는 정의를 가장하기 때문에 노골적 부정의인 세습 신분제보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정치평론가 크리스토퍼 헤이즈는 “능력주의 사회는 빈부격차에 가장 둔감한 사회일 수 있다.”라며 “능력주의의 철의 법칙(The Iron Law of Meritocracy)”을 제기한다. “부자는 자기 능력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고 빈자는 자기 능력의 한계로 빈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당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공정한 경쟁’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점에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효과가 크고, 이에 따라 오히려 명시적으로 비난 받는 세습 신분제보다 큰 폐단을 낳을 수 있다.⁴³⁾

능력주의 사회가 ‘격차’에 가장 둔감한 사회라는 통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능력주의 사회는 다양한 격차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부유한 것은 오로지 내 능력 때문이다.”, “내가 가난한 것도 오로지 내 능력 때문이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 체계를 강요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소득격차와 학력 격차를 정당화한다.

43)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021.09, 15쪽~16쪽.

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지원 현황

연번	자치구명	접수인원(명)		
		재학생	졸업생(비율)	소계
1	종로구	2,608	1,510(57.89%)	4,118
2	중구	1,414	435(30.76%)	1,849
3	용산구	1,470	552(37.55%)	2,022
4	성동구	1,144	1,347(117.74%)	2,491
5	광진구	2,424	947(39.06%)	3,371
6	동대문구	2,004	1,396(69.66%)	3,400
7	중랑구	1,757	570(32.44%)	2,327
8	성북구	2,352	787(33.46%)	3,139
9	강북구	1,633	1,439(88.12%)	3,072
10	도봉구	1,840	1,522(82.71%)	3,362
11	노원구	5,197	2,327(44.77%)	7,524
12	은평구	3,305	1,175(35.55%)	4,480
13	서대문구	1,590	2,174(136.72%)	3,764
14	마포구	1,751	596(34.03%)	2,347
15	양천구	3,836	3,460(90.19%)	7,296
16	강서구	4,210	1,760(41.80%)	5,970
17	구로구	2,521	735(29.15%)	3,256
18	금천구	1,033	302(29.23%)	1,335
19	영등포구	1,785	1,782(99.83%)	3,567
20	동작구	1,526	2,252(147.57%)	3,778
21	관악구	2,424	832(34.32%)	3,256
22	서초구	3,059	2,535(82.87%)	5,594
23	강남구	5,389	7,483(138.85%)	12,872
24	송파구	4,745	3,957(83.39%)	8,702
25	강동구	3,169	1,507(47.55%)	4,676
합계				107,568

※ 2022 수능 접수처(학교, 교육지원청)별 주소지를 자치구별로 분류 작성한 것임. - 출처 : 국회 강민정 의원실

☞ 특정 지역의 졸업생 수능 응시인원 규모가 다른 지역의 졸업생 응시 비율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과연 수능 시험이 기회의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고 균등하게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가?

☞ “지난 3년간 서울대 정시 합격자 강남구 347명, 4대 광역시 합해서 325명”
(프레이션, “정시 확대, '금수저'에 유리하다“, 2019. 10. 25. 보도기사)

5. 뒷마당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성취했을 뿐 아니라, 부패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정도로 정의로운 시민들이, 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집단행동에는 잘 나서지 않을까? 대답은 간단치 않다. 수많은 요인이 난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 질문과 관련해 중요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인의 가치관’이다. 여러 자료를 통해 드러난 한국인의 가치관은 **불평등에 대한 강한 선호와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자기표현 가치**로 요약된다. 불평등 선호는 주로 형평 원리, 능력주의 원칙,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강한 지지로 표현됐고, 낮은 자기표현 가치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낮은 관용 수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성평등 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기표현 가치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콜롬비아, 멕시코보다 낮고 같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홍콩, 태국, 중국 아래에 있다.⁴⁴⁾

오늘도 교실에선 우리의 학생들이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빌미로 현재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긴 채, 혹독하고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친구의 성취에 기뻐할 수 없고, 나의 성취가 친구의 기쁨이 되질 못하는 상대평가 시스템 속에서, 제아무리 뛰어난 성취도를 보일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철학과 기조 대전환 : 경쟁 → 협력과 배려 / 특권, 서열, 배제 전면 폐지
2. 상대평가 → 절대평가 전환(내신과 수능)
3.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전면적 혁신
4. 대대적 재정투자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5.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마련 :
 - ① 평가 결과와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공개와 승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
 - ② 입시비리 조사와 검경에 수사를 의뢰, <가칭> ‘입시 공정성 관리위원회’ 등 설치
 - ③ 서류평가와 면접 장면 녹화, 녹음 등 촬영 및 자료 보관
 - ④ 입시 부정 발생 시, 검·경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함.

44)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78쪽 참고.

⑤ 피해 학생 즉각 구제하고 해당 대학 이듬해 징벌적 의미로 부정 입학 인원 10배 규모의 입학 정원 감축

“명문대 입시에서 1차 선별 후 최종 선별을 하는 과정에 제비뽑기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정 관문을 넘는 조건으로만 능력을 보고, 나머지는 운이 결정토록 하는 일은 능력주의의 폭정에 맞서는 건강함을 찾게 해줄 것이다.”(마이클 샌델)

“내가 번 것 중 아주 많은 부분이 사회에서 나온 것”(워런 버핏)

“지식의 공동축적물이야말로 모든 산업 생산의 불가결한 근원”(소스타인 베블런)

“오늘날 모든 부의 압도적이자 원천적인 지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에게 그냥 다가온 것들이다. 이들은 과거의 너그럽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불로소득이자 선물이다.”(알페로비치와 루데일리)

“공짜 점심”(모커)

“당신의 성공은 운에서 나온 것이니 부디 겸손할지어다!”(마이클 샌델)

■ 제2세션 토론4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

권하경 (고등학생)

가장 먼저 저에게 귀한 역할을 제안해주신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훌륭하신 분들과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발제문을 읽으며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으로서 많이 공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공교육을 떠나 대안교육을 선택한 저는 어쩌면 공교육 현장에 머물러있는 또래 청소년들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시험과 성적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전부가 되는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사회가 조금은 다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합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행복

몇 달 전, 제 친구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삼은 행복하면 안되는걸까? 사람들이 자꾸 고삼이면 공부하느라 힘들어야하는 거 아니냐고해.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왜 행복하냐고 물어봐. 마치 내가 뭘 잘못된 것처럼.'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는 즐거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질문대로라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삼은 배우는 과정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학교와 학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삼만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1위는 9년째 '자살'입니다. 중 고생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소년(13~18세)이 고민하는 문제 순위 중 학업은 4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즐거워야할 학생에게 학업이 우울감의 원인이라는 것은 큰 모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그토록 많은 학생들이 우울감을 겪는 이유는 수동적으로 학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립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발제문 첫 문단의 ‘사람들은 정보고 뛰고 일단 뛰고 본다’ 라는 문장처럼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걸음을 옮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대학에 가는 목적도, 대학을 가고 나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없이 옆사람이 뛰는 이유로, 누군가 뛰라고했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자신의 삶을 계획해나가는 능동적인 사람과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풍기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능동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자신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반면 수동적인 사람은 타인이 요구한 바 이외에는 생산적인 발전이 없고 정체되어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들어서면서 제게 주어진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사회에 발을 들이기 전 마지막 일 년을 지난 11년 간의 학교 생활을 정리하고 제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며 고등학교 이후의 배움터와 저의 첫 발걸음을 계획하자 다짐하였습니다. 입시라는 문턱 앞에 자꾸만 조급해질 때마다 ‘잠깐 멈춘다고 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뛰지 않고 걷는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잘못된 길로 달리다가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 하며 제 스스로를 달래곤했습니다. 그래서 ‘고삼은 행복하면 안되냐’ 는 친구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행복해도 돼. 행복한 게 당연해’ 입니다. 저 또한 아직 입시 기간에 있기에 긴장되고 불안한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큰 감정은 지금까지 잘 해온 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앞으로 제가 만들어나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마다 늘 ‘특별하다’, ‘훌륭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런 행복한 감정이 특별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감정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원래의 것을 돌려주세요

능력주의의 산실이 되어버린 현재의 학교와 시험은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래의 학교는 공동체성을 배우는 ‘작은 사회’ 이면서 교과 학습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배움터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는 성적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classmates는 friends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등급을 두고 싸우는 competitors일 뿐입니다. 1등을 차지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견제하고 친구가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려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내신 점수가 올랐다면 기뻐해야하는 모습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시험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각 교과목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학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 수업에서는 사고하는 능력을, 수학 수업에서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사회 수업에서는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과학 수업에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질문하는 능력을, 영어는 타 문화권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음악 수업에서는 목소리와 다양한 악기들을 이용하여 공감하는 능력을, 미술 수업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체육 수업에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워야합니다. 또한 시험은 판단과 비교의 도구가 아닙니다. 시험은 스스로의 실력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발견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크고 작은 시험과 수능을 위해 딱 두 가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암기력’, 또 다른 하나는 ‘빠른 문제풀이력’입니다. 수능을 이미 치루셨던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능 공부가 그리고 시험 공부가 스스로를 어떻게 성장시켰나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감히 예상하건데 대부분의 대답이 ‘별 도움 되지 않았다’ 일 것 입니다. 서로를 견제하기에만 급급한 무가치한 학습 문화와 시스템은 이제 사라져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경쟁자가 아닌 함께 공부할 친구를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닌 배움의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차별하는 교사가 아닌 삶을 함께 고민해줄 스승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는 사회가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회를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우분투’ 이야기를 끝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반 투어에서 유래된 인사말로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던 한 인류학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 밑에 놓여있는 바구니에는 아

프리카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과일이 들어있단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할텐데 게임의 룰은 단 한가지다. 저 나무까지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바구니에 든 과일을 모두 먹을 수 있다.’ 누가 일등으로 나무에 도착했을까요? 키가 큰 아이? 달리기 연습을 많이 했던 아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아이? 모두 아닙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본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1등으로 간 사람은 바구니에 든 과일 전체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린거니?’ 그러자 아이들이 답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저만 기분 좋을 수 있는거죠?’

저는 아이의 이 마지막 질문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친구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학교는 그런 학생들의 용기에 박수쳐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학생이 학생다워지고, 학교가 학교가 학교다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과 문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게임에 발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제3세션 발제

능력주의를 넘어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을 상상한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I. 들어가며

최근 능력주의는 ‘불평등’, ‘공정’, ‘시험’이라는 화두와 함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을 단기간에 숙련하기 위해 시험을 통해 능력의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은 유효했다. 국토 대비 풍부한 인적자원과 산업 구조가 맞물려 돌아갔던 시기에는 오히려 능력주의가 탐닉해야 할 신화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1% 미만의 초저출산으로 맞이한 인구절벽, 4차산업과 저성장이 병렬적 걸음을 하는 현재와 미래 사회에 능력주의는 더이상 지속 가능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앞서 1·2 세션에서 충분히 살핀 것처럼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의 능력이 오롯이 개인의 것으로 치부할 수 없고 조력자와 배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서열에 의한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인식과 실증⁴⁵⁾이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력, 학력, 거주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학력·학벌, 직업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노오력’을 해도 타고난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소위

45) 통계청은 2007년부터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교육 의식조사’를 병행했다. 이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2014년까지 유지되다가 2015년부터 중단되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교육의식조사에서 일관되게 사교육 지출의 가장 큰 이유는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같은 인식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를 2019년 발표했다.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라는 보고서는 대학서열이 졸업자들의 근로생애 전반에 걸쳐 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는데 요약하면 노동시장 진입단계부터 퇴직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천 용’ 멸종 사회,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⁴⁶⁾, 교육 양극화와 불평등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같은 현상을 ‘교육불평등 대물림’이라고 명명하고 ‘교육불평등 리포트’라는 이름의 연속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왔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일에 천착해왔다. 본 발제는 그 여정을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능력주의가 교육제도와 결합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는 현상을 짚막하게나마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원칙을 붙들어야 할지를 성찰한 후에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고민한 대안을 소개하려고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대안은 교육 영역의 안팎을 넘나들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과 교육 환경의 대변혁을 통해 국민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II. 능력주의와 교육제도가 양산한 교육불평등

대한민국에서 능력주의는 선발을 통과한 소수가 많은 것을 가져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소위 SKY 대학으로 대변되는 학벌사회에 진입한 자가 누리는 혜택은 과도하다.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도달하는 기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일종의 특권 트랙이 교육제도 내에 존재한다. 소위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사립초-국제중-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특권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 유아 시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냉전 체제의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치르는 현실⁴⁷⁾이다. 그리고 이 트랙에 진입하고 트랙 내에 존재하는 허들을 넘을 때마다 부모의 경제력과 아동의 학습 노동이 수반된다.

사회 전체를 조망해 볼 때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양새가 된다. 성인이 되어도 취업을 위한 스펙 경쟁이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도 성인 사교육을 비롯해 부모의 배경이 작용하고 결국 취업 이후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양태를 최근 교육과 경제 영역의 연구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애 주기별로 나타나는 입시경쟁, 사교육 고통, 교육불평등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한다.

46) 「PISA 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본 교육 형평성 변화」, KRVIET Issue Brief, 2020.5.11.

47) 「“한국 입시경쟁, 냉전시대 끝없는 ‘군비 경쟁’ 같아”」, 동아일보, 2019.2.10.

1. 영어도 모자라 수학·과학·코딩·놀이 유치원?

고통의 현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참상이 따로 없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공교육의 출발선 이전부터 붕괴된다. 유아 시기부터 시작되는 조기교육 때문이다. 교육열과 경제력으로 무장한 가정은 유아시기부터 영어는 물론이고 ‘한글·수학·과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시작한다.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2021년 1월 31일 기준)를 토대로 반일제 이상 유아 학원을 조사⁴⁸⁾해 보니 유아를 대상으로 ‘한글·영어·수학·과학’ 등의 조기교육을 시키는 곳이 서울시만 해도 대략 500곳이나 되었다. 유아대상 수학학원 중 입학테스트를 치르는 곳이 다수 있는데 사칙연산은 물론이고 초2 과정인 시계 보기까지 문제로 등장한다. 이뿐 아니라 수학일기와 수학독후감 쓰기, 각종 지필평가를 시행해 유아를 학습노동에 노출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들 학원의 비용도 엄청나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월 평균 109.6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4년제 대학등록금의 약 2배이다. 교습시간도 평균 4시간 56분(296분)으로 중학생의 학교 수업시간(중1 4시간 57분)과 비슷하다. 유아가 중학생에 버금가는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꼴이다. 유아대상 사교육 상품이 다변화되어 기존에는 소위 영어 유치원으로 대변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조기교육 문제를 대변했다면 이제는 ‘수학/과학 유치원, 놀이 유치원, 코딩 유치원’ 으로 둔갑한 학원에서 유아의 건전한 신체와 정서 발달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학원비 vs 4년제 대학등록금 비교 (2021.1.31.기준)



48) 「2020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분석 보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8.19.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강생의 공교육 진입은 사립초등학교로 이어진다. 사교육걱정이 학교 알리미를 통해 서울 사립초의 학부모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서울 38개 사립초 2020회계연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983만원이었다. 결국 유치원 대신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에 2년, 사립초 6년 도합 8년간 1.5억원에 추가적인 사교육비를 지출한 배경 속의 학생과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만 받은 학생과는 커다란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표1] 사립초 학생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금 현황 비교(2016-2020)

	금 액 (원)					증감('19-'18)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사립초(서울)	9,225,524	9,632,373	10,162,728	10,286,790	9,831,491	▽455,299
대학평균등록금	6,626,300	6,650,500	6,673,500	6,698,200	6,717,800	▲19,600

자료: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2016-20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2. 영재학교,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 중학교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 현상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중학교 출신 지역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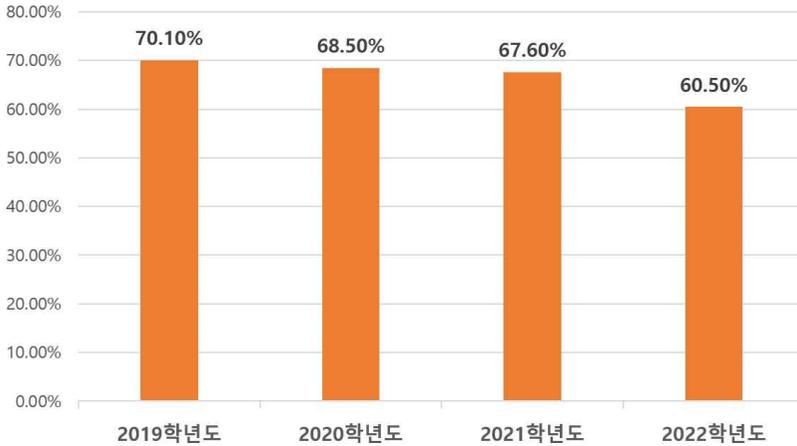
1) 영재학교 신입생 서울·경기 독식 현상

전국의 영재학교는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총 8개교가 거점 지역별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1개교씩 있던 것을 지역 영재 육성이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전국에 8개교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의 소재 지역의 인재가 많이 선발되어야 할텐데 매년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 출신⁴⁹⁾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특정지역 편중현상을 막겠다고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10명 중 6명이 서울·경기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⁵⁰⁾하다.

49) 「전국 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강득구 국회의원, 2021.3.24.

50) 「전국 영재학교 2022학년도 합격예정자 출신중 분석 보도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강득구 국회의원, 2021.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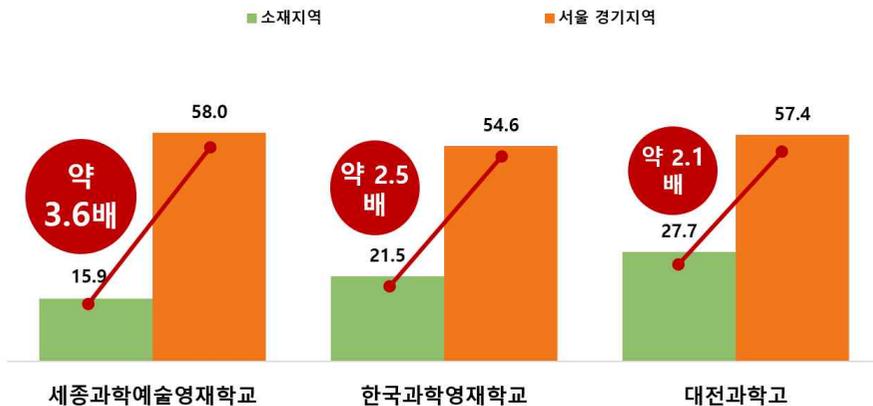
연도별 영재학교 입학생의 서울·경기 지역 출신 비율 평균



※ 자료: 강득구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2021,2022)
신경민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9)

영재학교가 각 지역에 위치한 것은 지역 인재를 영재로 육성한다는 목표가 분명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패는 정책목표를 무색하게 한다. 세종과학예술휘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5.9%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8.0%로 3.6배 가량 많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전 과학고도 각각 소재 지역인 부산과 대전 출신 합격자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5배, 2.1배 가량 많았다.

각 영재학교 소재 지역출신 VS 서울·경기 지역 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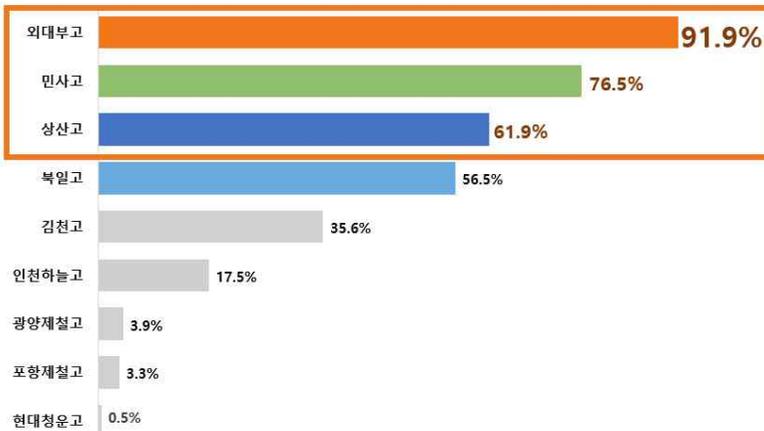
※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1)

더욱 심각한 것은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학교가 위치한 시·구를 분석한 결과이다.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수는 329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507명의 64.9%, 영재학교 전체 합격예정자 838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67명, 22.6%), 양천구(48명, 16.2%), 송파구(29명, 9.8%), 서초구(28명, 9.4%), 노원구(27명, 9.1%)’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총 199명)의 67.0%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성남시(29명, 22.3%), 고양시(27명, 20.8%), 용인시(27명, 20.8%), 수원시(24명, 18.5%), 안양시(23명 17.7%)’ 로 경기 출신 입학생(총 130명)의 61.9%가 이 5개 지역 출신이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영재학교 입학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증거이다.

3. 전국 단위 자사고 신입생의 서울·경기 쏠림 현상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출신 시·구가 확인 안 되는 해외, 검정고시 출신 제외)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출신⁵¹⁾이었다. 3개교의 총 입학생 878명 중 673명, 76.7%에 해당하는 학생이 서울과 경기의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대부고 91.9%(359명 중 330명), 민사고 76.5%(149명 중 114명), 상산고 61.9%(370명 중 229명)순으로 입학생의 서울·경기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 서울·경기 출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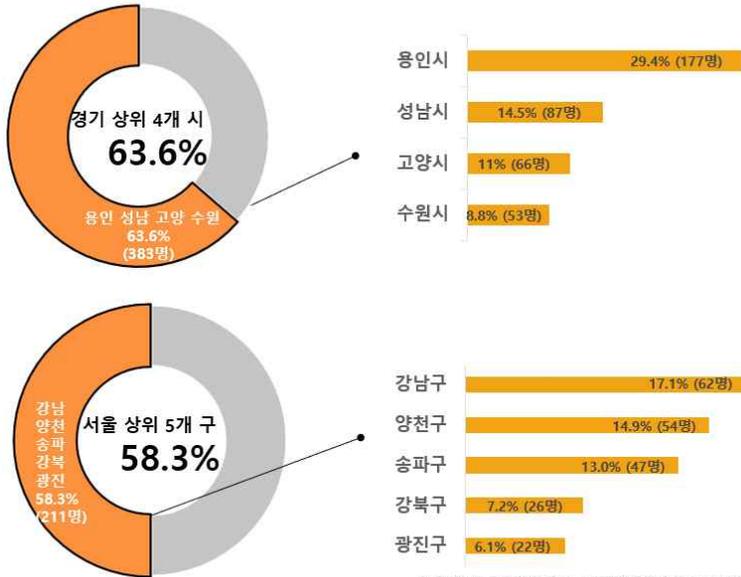


자료: 강동구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1)

51)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 중학교 분석 보도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강동구 국회의원, 2021.10.25.

서울과 경기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입학생이 10명 중 6명 꼴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수, 상위 4개 지역은 용인시(177명, 29.4%), 성남시(87명, 14.5%), 고양시(66명, 11.0%), 수원시(53명, 8.8%)로 모두 사교육과열지구로 알려진 곳이다. 경기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 602명 중 63.6%에 해당하는 383명이 앞의 4개 지역 출신이다. 서울 상위 5개 지역은 강남구(62명, 17.1%), 양천구(54명, 14.9%), 송파구(47명, 13.0%), 강북구(26명, 7.2%), 광진구(22명, 6.1%)로 서울의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와 국제중이 위치한 곳이다. 앞의 5개 지역에서 서울 전체 합격생 362명의 58.3%에 해당하는 211명이 전국단위 자사고에 합격했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 26명 중 약 90%에 해당하는 23명이 영훈국제중 출신이었으며, 광진구도 22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17명이 대원국제중 출신이었다.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아 단계에도 조기 영어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경기 단위 지역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최다 배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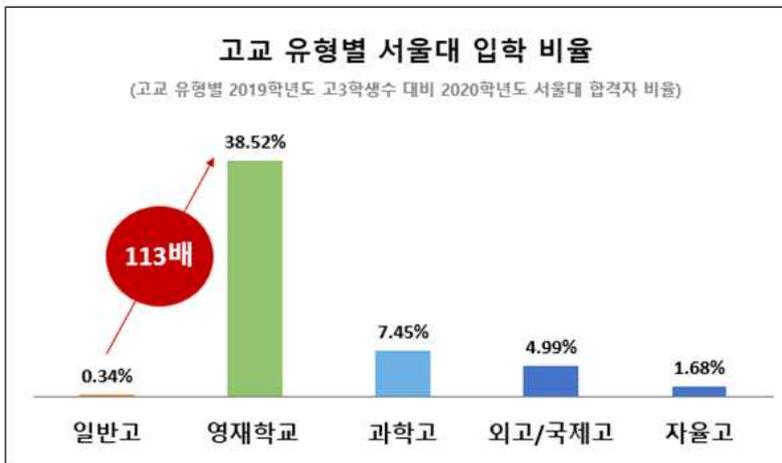


자료: 강득구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1)

4. 특권 고교의 서울대 독식 현상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라 특권 고교 입학의 기회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은 대입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알리미’와 ‘학교알리미’의 고교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교유형별로 2020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현황을 분석⁵²⁾했다. ‘대학알리미’에 나와있는 서울대학교의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과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파악한 고교유형별 학생 수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서울대학교 입학 비율의 격차를 확인했다. 그 결과 영재학교는 학생수 대비 38.52%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0.34%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해 그 격차가 무려 113배에 이르렀다. 과학고는 일반고 대비 22배, 외고는 15배 가량 높았다.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절반가량이나 된다.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이다. 즉 부모의 지역적, 경제적 배경이 특권 고교 합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배경이 영재학교 입학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의 3분의 1이상(35.6%)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특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격차가 열

52)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신입생 분석 보도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10.29.)

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62.6%로 저소득층 비율(18.5%)의 약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석 결과 전반에서 고소득층의 대학 재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특권 트랙을 거칠 경우 공교육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입학 후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로 추가로 지출한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생이 사교육기관을 통해 고교 수학은 물론이고 대학 정수론과 조합론을 선행학습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불평등이 대물림 되는 사회적 차원은 물론이고 교육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5. 직업세계로 이어지는 교육불평등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대물림된다 하더라도 직업 세계의 안정성, 즉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의 불평등은 극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불평등은 직업세계에서 극복 가능한가? 결과부터 말하자면 극복 불가능하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물론이고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학벌은 어떤가? 대한민국 사회는 학벌, 즉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는 물론이고 일자리의 질도 차이가 크다. 대학서열이 졸업자의 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논문⁵³⁾은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퇴직단계까지 대학서열에 의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연령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커지는데 정점에 해당하는 40-44세의 경우 5분위 대학 졸업자는 1분위 대학 졸업자 보다 46.5%의 임금을 더 받는다. 서열 높은 대학의 졸업자들의 대규모 사업장 종사, 정규직 여부, 상용직 여부 등의 비율이 높아 일자리의 질도 높다고 말한다. 즉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의 기회와 결과가 불평등한 상황은 직업 세계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배경은 직업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몇 사례를 통해 추적해보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20대 교육위)이 ‘2012~2019 국가장학금 신청 현

53)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 이지영·고영선, 한국노동연구원, 2019.

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가량(48%)은 가구소득이 9·10분위에(월소득인정액 1384만원·1384만원 이상)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1학기 연도별·학교유형별·소득분위별 학생 분포 현황>

연도별	학교유형별	기초·차상위	1~3분위	9·10분위
2018	전체 학생 비율	6.61%	26.48%	25.25%
	SKY	5.73%	20.66%	40.79%
	전국 의대	3.53%	15.56%	50.15%
	서울 주요대	5.98%	22.26%	35.96%
	지방국립대	5.41%	23.79%	31.11%
2019	전체 학생 비율	6.92%	25.56%	27.23%
	SKY	5.95%	18.60%	43.47%
	전국 의대	2.94%	13.65%	52.99%
	서울 주요대	6.03%	20.79%	37.65%
	지방국립대	5.47%	22.08%	3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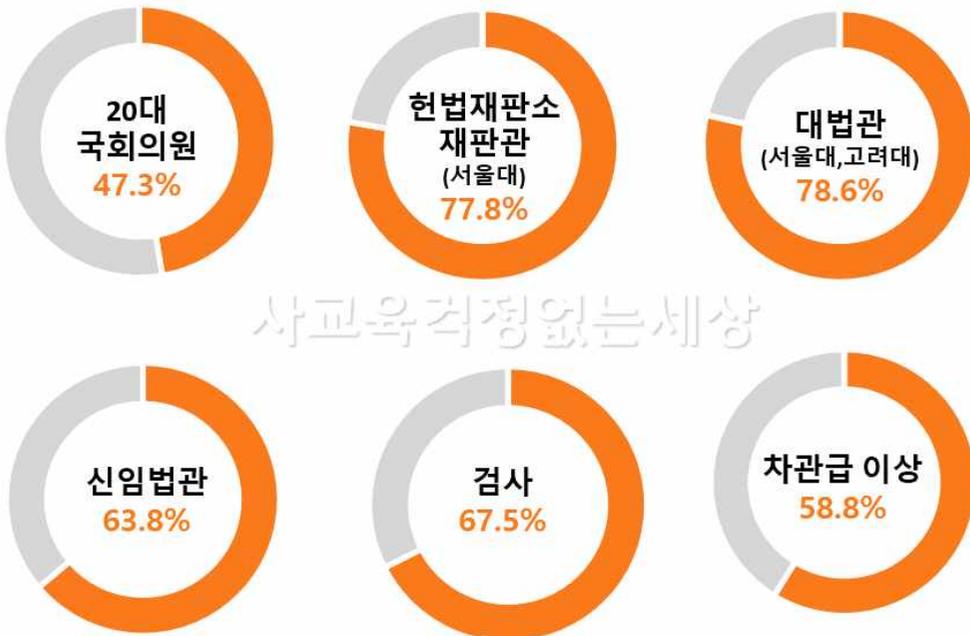
SKY 대학 재학생의 40% 이상도 소득분위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었다. 고소득층 이면서 SKY 대학 출신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프리미엄은 막강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취업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이다. 2016년에 기사화된 한양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같은 해 2016년에 있었던 하나은행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 SKY 대학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례, 서울대병원·연세대·고려대가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나눠 가중치를 부여해 직원을 채용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교육걱정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의 핵심인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신 대학 비율을 서울대·고려대·연세대(소위 SKY대학으로 통칭) 중심으로 분석⁵⁴⁾했다. △입법부는 2016년에 당선된 20대 국회의원, △사법부는 현재 헌법재판관, 대법관, 2019년 일반

54) 「특정대학의 국가 권력 독식 분석 보도자료」, 2019.11.4.

법조경력자 신규임용 법관(판사),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의 차관급 인사,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SKY대학 출신자의 비율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 대학 출신자들은 국가 요직의 약 50~70%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에서의 서울대 비율은 압도적이었다.

<고위 공직자 SKY 대학 출신자 비율>



종합하자면 부모의 배경은 유아 시기부터 존재하는 교육제도 내의 특권 트랙을 타고 교육 불평등을 양산하고 종착지인 직업세계에 안착해 소득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어 불공정한 사회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현 정부는 물론이고 21대 국회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명을 앓고 있다는 볼 수 있다.

Ⅲ. 우리 사회는 어떤 원칙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앞에서 살핀 교육불평등이라는 현실의 틈바구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욕망이 얽혀 있다. 대안을 얘기할 때 많은 이들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타협을 하려면 원칙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인구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우리 사회에 구성원이 될 한 아이도 잃지 말아야 하는 숙명적 과제 앞에서 이해관계와 욕망보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봉착했다.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나아가야 할 네 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낙오와 탈락을 낳는 경쟁교육에서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되는 교육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성장시키는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기회·과정·결과의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학력이나 학벌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Ⅳ. 대안

1.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시급한 것은 교육불평등이 부모의 배경을 통해 대물림 되는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위도 없다. 개인이 경험에 의지하거나 단편적 데이터, 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정도이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및 기업 등 고소득층의 출신학교 상황, 학교별 재학생의 성적과 가정소득차 및 사교육비 투자,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형태 등 특권 대물림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국가 수준에서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그 대책을 발표해온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교육불평등 실태와 상황을 조사해 어

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낼지를 고민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지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조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정책협의회’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 기관이 조사한 결과, 매년 부유한 지역의 학생은 극빈지역 또래보다 고등교육의 기회 2.4배, 최상위권 대학교 입학 가능성은 5.7배가 높다고 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평등 비율을 2024~2025년까지 5배로 낮추고, 이후 2038~2039년까지 동일 비율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이와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종합적 교육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격차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위의 내용을 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2. 대학서열 해소 3단계 로드맵

경쟁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학서열을 해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서열 해소와 동시에 대학 교육의 질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최근 ‘대학서열 해소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참여 대학에게는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입학 성적순 서열화를 해소하고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 대학 범위는 1단계에서 국공립대가 중심이 되되 사립대의 일부를 포함하여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시작하여, 2단계에서 80개 대학, 3단계에서 160개 이상의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차 대부분의 사립대까지 참여토록 설계했다.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립대는 부실, 비리 대학이 아니면서 재정 투명성 등 공공성을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학네트워크 입시는 1단계에서 대학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2단계에서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으로, 3단계에서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학위, 학점교류,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재정 지원은 실질적 반값 또는 무상등록금과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및 대학 경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학생들은 부담없이 대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은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입시, 전폭적인 재정지원, 학점 교류, 교육 자원 공유를 통해 교육효과 극대화, 대학서열해소

	1단계(2025년)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입시	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해 성적 기준 설정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 요구	고교졸업·대학 수학 최소 자격 요구
네트워크 범위	국공립대+사립대 40개 대학	국공립대+사립대 80개 대학	국공립대+사립대 160개 대학 이상
재정지원 교육질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 교육자원 공유 • 학문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OECD 수준의 교원 확보) • 반값 또는 무상 등록금, 대학 경상비 지원 	
예상 인원	수험생 39만명 정원 10만명(25.6%)	40만명 15만명(37.5%)	36만명 25만명(69.4%)

- 이미지 출처: 「대학네트워크 공동입시로...“15년 뒤 수험생 70% 서열 없는 우수 대학에”」, 한겨레, 2020.12.17.

3. 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

현재의 평가는 결국 고교내신과 수능 성적이라는 상대적 서열 체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2016년부터 중·고교의 평가가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로 전환되었지만 고교는 성취도와 함께 석차 등급을 병기하고 있어서 여전히 성적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사항’ 란은 매우 불친절하다. 교과별 점수만 기록되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고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평가했는지도 불명확하다.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식도 문제이다. 일제식 평가와 가르친 자가 평가한다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소위 중간·기말고사 체제로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성장시키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자기성장 평가제’를 제안한다. 자기성장 평가는 친구와의 비교가 아닌,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장한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성취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진단하고 단계마다 적절한 피드백을 교사가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 전과목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 변별과 선발 중심의 상대평가를 넘어 학생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년별 획일적 일제평가 방식을 넘어서 수업한 교사가 직접 평가하고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별 평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선다형 평가가 대부분인 현행 방식에서 다양한 해답을 찾는 서·논술형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기성장 평가제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성적표로 평가에 대한 기록을 개선해야 한다. 교과별 점수만 기록된 성적표가 아닌,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성적표를 도입하여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대한 유익한 평가 과정과 결과가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이 쌍방향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평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가정-학교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4. 채용과 노동 영역

1)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국민들 90%가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말한다. 통계청은 매년 우리 국민들의 사교육 지출의 핵심 이유가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라고 발표해왔다. 로스쿨 입시와 기업, 금융기관, 사립대학의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으로 점수를 조작해 SKY 등 특정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사 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도 주요 국정과제로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률을 20대 국회는 통과시키지 못했다.

다행히도 지난 9월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 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속한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입시), 고용(채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다.

발의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대받는 특정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사교육 고통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도입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재 육성 정책은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벌이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와 과정,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 대우

가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위한 각종 정책이 계획성 있게 기획·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 내에 지역인재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지방대육성법은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조항이라 실효성이 없다. 이에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50%를 의무화하고 지역 내 300인이상 기업이 지역인재 50% 선발 시 채용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법의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지역인재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인재를 위한 할당정책의 기반에는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기업의 성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를 전폭 지원하고 육성하여 지역 맞춤형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있는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인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를 돕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임금불평등 해소

전술한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학벌·학력으로 인한 임금 불평등이 심각하다.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며 계층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교육조차 계층재생산 및 임금불평등의 수단이 되고 있다. 출신학교 외에도 고용형태, 성별, 원하청 관계, 기업규모별, 직업별 임금격차 또한 심각하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임금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는 제한적인 것에서 기인한다고 「2020 OECD 한국경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서민과 저소득층이다⁵⁵⁾.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임금격차 및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적 양극화 및 갈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의욕을 꺾는 등 경제 발전에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임금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치는 길이다.

55) 「“코로나로 GDP 67조 날아가고, 일자리 67만개 사라질 위기”」, 한겨레, 2020.8.25.

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성별, 학별·학력, 원하청 관계, 기업규모별, 직업별 임금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업임금보고서 제출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현재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분포공시제의 실질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고용형태, 성별, 학별, 원하청, 기업규모별 불합리한 임금격차 및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이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속도 또한 높여야 한다.

③ 국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정임금관리기구 신설

임금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임금격차 및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해 결국에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정임금관리기구(가칭)’ 신설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임금격차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를 큰 틀로 하고 △동일노동 내 임금격차 발생시 조정, △불합리한 임금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 △임금체계 대안 모색,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V. 나오며

한 해에 대학 등록금의 두 배를 지출하고 유아까지 학습노동에 시달리면서 그것이 스트레스인지도 표현하지 못하는 침묵의 아비규환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을 양산하고 있으니 더욱 참담하다. 이러한 현실은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오늘 제시한 대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제시한 대안이 실행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이것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전하는 호소이기도 하다. 물론 후보가 공약으로 받고 공약을 받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원칙과 방향에 따라 바꾸자고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림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단서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 제3세션 토론1

‘능력주의를 넘어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을 상상한다’에 대한 토론문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

1.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불평등의 대물림’ 문제를 능력주의와 교육제도를 연결하며 풀어낸 구본창 선생님의 인상적인 발표문을 잘 읽었다. 그동안 큰틀에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우리 사회 교육불평등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보며 문제의 심각함을 새삼스럽게 확인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나아가야 한다면 제시한 네 가지 원칙에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누가 무슨 명분으로 반대할 수 있을까?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의 제안에서부터 임금불평등 해소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대안 논의도 공감하며 읽었다.

나 역시 비슷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온 입장이지만 철학자로서 아무래도 좀 더 원론적인 논의에 치우쳐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사실 이번에 나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책을 한 권 쓰기도 했는데(『공정의 배신』, 피어나, 근간),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구선생님의 논의를 진작 알았더라면 좀 더 실천적으로 손에 잡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이 책에서 내가 했던 논의들 중에서 지금 논의 맥락과 관련된 부분을 살짝 소개하면서 토론에 붙여도 괜찮을 듯 하다.

2. 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관련된 모든 소동과 병리의 배경에는 승자독식의 원리 또는 승자와 패자 사이에 주어지는 지나치게 큰 보상의 격차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는 데 대안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졸자와 비대졸자, 명문대 졸업생과 지잡대 출신, 자격증 소지자와 무자격자 등의 사이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격차의 강이 있는 한, 사람들은 경쟁과 그 규칙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승자가 되려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때문에 온갖 종류의 능력주의적 병리들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출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 병리는 기본적으로 능력주의적 분배 원리와 관련된 일종의 출세열이자 성공열이다. 간단히 말해, 상위권 대학을 나와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적 분배 질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모든 문제의 진원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병리를 해결하자면서 이 욕망을 그대로 두고 입시제도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손보려 하는 따위의 접근은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수준에만 머문다면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명문대를 향한 경쟁은 완화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 경쟁이 더 공정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수입 격차를 줄여야 하고, 비대졸자들도 적정 임금을 얻도록 해야 하며, 지방대 출신들도 차별 없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제대로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어 육체노동을 하더라도 화이트칼라 계층에 못지않게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물질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범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변화 위에서만 우리 교육은 입시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전이라도 승자독식의 원리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도들은 능력주의와 완전하게 결별하지 못하더라도 그 극복을 위한 출발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다양한 수준에서 ‘차별 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확대하여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사회적 성공을 위한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런 일은 비대졸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는 조치들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른바 명문대들이 상당한 비율로 ‘지역’은 물론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부터 ‘지역 인재 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거나 그 밖의 교육비도 일정하게 지원하는 정책 같은 걸 도입하여 대학 서열을 해체하려는 시도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샌델이 미국적 맥락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대학 입학에 대한 추천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여 도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학자 박남기도 유사한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이런 제도를 ‘범위형 대입제도’라고 부르는데, 대학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입학생을 정하자는

게 기본 발상이다. 우선, 대학들은 모집 단위별로 수능과 내신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후 지원한 모든 학생을 합격시킨다. 다음으로, 간단한 면접 등으로 성적으로만 걸러낼 수 없는 부적격자를 찾아내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정한다.

물론 이런 제안은 지금의 대학 서열 체제를 제대로 흔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 우리나라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위에서 제시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대학 수학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 게 비합리적이려면, 일정한 기준으로 지원자 중 정원의 3배수 정도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선발한 뒤 그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합격자들을 정하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배정 역시 주거 지역이나 희망 전공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는 사립대학이 많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립대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제도 설계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확립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단지 이런 제안의 핵심 취지는 명문대 입학에 아주 강하게 온 또는 우연적 요소와 연동시킴으로써 명문대 졸업에 따른 특권의식의 근거를 없애 대학 서열화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주 미미한 성적 차이를 커다란 보상의 격차로 연결하는 불합리성을 없앴으로써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자는 데 있음만 분명히 해 두자.

3. 나의 논의는 구선생님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결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및 직업 세계의 보상의 격차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고, 대학 네트워크 자체보다는 시험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국립대 중심의 대학 네트워크가 만들어져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명문 사립대 중심의 서열 체제는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 여하튼 이런 문제와 관련된 좀 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적 숙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이런 토론이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 제3세션 토론2

왜곡된 능력주의를 넘어 진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 문제에 맞서 고군분투해 오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 토론을 시작하고 싶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 어떤 단체보다 앞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입시로 인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달려가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사고, 특목고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영재학교로부터 해서 출신대학-채용차별-임금차별까지 이어지는 교육불평등 고리의 시작이었다.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의 입학 가능성이 달라지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출신대학이 달라지고,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채용과 임금이 달라지는 이 시대 불평등의 핵심 고리에 대해 맹렬하게 문제제기하며 싸워왔던 단체가 바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었다.

오늘 토론회가 발제자의 말대로 ‘교육불평등 대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일에 천착해 왔던 과정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사회는 분명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사립초-국제중-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특권 트랙이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이 트랙에 올려 태우기 위해 ‘사교육 고통’을 감수하고도 ‘입시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군비경쟁’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쪽이 더 센 사교육을 선택하면 다른 한 쪽은 그보다 더 센 사교육을 선택하면서 끝없는 경쟁체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의 생명은 희미해지고 있다. 토론자는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원인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 역사로부터 잘못된 ‘능력’의 개념을 계승하여 만들어 낸 왜곡된 ‘능력주의’를 지목한다.

1. 왜곡된 능력주의

1) 다양성을 상실한 능력주의

사람의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평가방식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능력주의는 분명 개인의 능력이 아닌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던 신분제 사회를 극복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였다. 역사 속에서 근대화를 시작하는 시기에는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강조했고,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제도가 만들어졌다. 시험을 보기 위해 지식을 쌓고, 쌓은 지식을 시험 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시험제도이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도 변변치 않았고, 사람의 능력에 대해 제한적인 인식을 가졌던 시대에서는 그 시험제도를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받아들이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시험제도는 긴 시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변질되었다.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와 같다. 21세기를 훌쩍 지나 AI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기 일보직전인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시대를 착오해도 너무 과하게 착오하고 있다. 사람의 능력을 지식을 쌓고 인출하는 능력으로만 가둬놓은 한계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주의는 왜곡되어도 너무도 많이 왜곡되었다. AI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추월하는 그 순간⁵⁶⁾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모두 AI에게 넘겨줄 것인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능력에 따른 차별이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기에 사람의 능력은 너무 다양하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각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가질 수 있게 된다. 능력주의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해도, 능력주의가 가진 타당성은 사람의 능력이 한 가지 방식으로 평가받

56) 인공지능 과학자 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서기 2040년 경에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뛰어나게 되는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각기 다른 평가 방식을 만들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다양성을 상실한 생태계는 멸종한다.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상실한 능력주의 사회의 수명 역시 짧을 수밖에 없다.

2) 정의를 상실한 능력주의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천부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이익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보다 큰 천부적 능력이나 공적을 사회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존 롤스,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에서 천부적으로 얻은 재능의 혜택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천부적 재능은 talent로 불리며, 은사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은사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고린도전서 12:7). 롤스의 관점에서나 기독교의 관점에서나 능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 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때 의미미해진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수호신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한국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관점이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연히 내게 찾아온 능력을 다른 사람들, 특히 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천부적 능력과 조건은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다.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은 그 시험에 맞게 재능을 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공부를 잘 하면 자녀도 공부를 잘 할 가능성이 높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라 언어적 지능, 논리적 지능 등이 높은 사람이 시험에 유리하다. 부모님이 이와 같은 지능이 높을 때,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누리는 공부에 유리한 환경 역시 좋은 부모를 만난 혜택일 뿐, 자신이 만든 환경이 아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허용하고 권장하던 20세기를 지나온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 상당수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사회적 혜택, 교육적 혜택을 단지 이들의 능력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에 있다. 시험점수로 만들어진 서열에 따라 그 열매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어떤 입시제도도 이미 모든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시험 점수에 기반한 선발 시스템 강화 주장은 그대로 기득권의 주장에 불과하다. 롤스의 표현 그대로 ‘아무도 자신의 보다 큰 천부적 능력이나 공적을 사회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롤스는 말한다.

“그래서 이 원칙(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즉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마땅히 보다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 사상은 평등에로의 방향을 향해서 우연적 여건의 편향을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2. 대학 입학은 기회인가? 보상인가?

사회의 극소수만이 대학 입학의 기회를 가질 때가 있었다. 학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했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교육으로서 초중고 교육을 받았어야만 했다. 경제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자 했다. 그러나 대학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대학 정원은 충분하지 못했다. 결국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했고, 시험 점수 외에는 이들을 떨어뜨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제 대학 정원보다 적은 학생 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위 대학 간 서열 때문에 서로 가고자 하는 대학이 겹쳐서 여전히 누군가를 떨어뜨려야만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제도를 대학 간의 교육 수준을 맞출 생각은 하지 않고 대학의 소위 ‘네임 밸류’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고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어른들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그나마 몇 명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채 발견하기도 전에, 꽃을 피우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식물처럼 말라가고 있다.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 ‘입시경쟁’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모든 아이들이 수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많은 아이들이 마치 모두가 수학자가 되더라도 할 것처럼 수학공부에 매달린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고 또 푼다. 남들 못 푸는 킬러문항을 풀어나기 위해 어린 시기부터 학원에 가야하고, 기출문제 풀이, 예상문제 풀이에 매달리고 있다. 이를 위한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은 간과하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무용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경험도 무용해진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아가는 소중한 경험들이지만, 입시경쟁 체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입시 경쟁을 통과한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 대학에서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그래도 알아내지 못한 이들은 20대 전체를, 그 때마저도 알아채지 못한 이들은 잘 살다가 불혹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어쩔 줄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 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은 대학에 가기도 전에 낙오되어 자존감도, 효능감도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며, 아이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도, 교사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입시경쟁의 대가로 지불되는 기회비용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시 경쟁을 헤쳐 온 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본전을 되찾기라도 하는 듯, 그 혜택을 사유화한다. 대학도, 출신대학이 주는 직업적, 경제적 보상도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혜택이 내 것이 되기까지 치뤄야 했던 고통이 너무도 크게 느껴져서, 사회가 지불해야 했던 비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보다 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사회에 우리는 어떤 희망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회의가 생긴다. 이 역시 입시 경쟁의 대가로 지불되는 기회비용이다.

백 번 양보해서 능력에 따른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배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능력을 찾고 발휘할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은 그야말로 기회다. 지금까지의 대학교육은 보상시스템이었다. 초중고 교육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것 안하고 참아가면서 오로지 높은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해 온 인생에게 주는 보상이 그가 원하는 대학의 입학 자격이었다. 그러

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보상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이 너무 많다. 개인도 사회도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이제, 대학 교육은 기회로서 주어져야 한다. 더 심화된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같은 수준의 대학 공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기회로서의 대학교육을 위한 방안

발제자가 제안한 대학서열 해소 3단계 로드맵은 대학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간의 서열을 없애서, 자연스럽게 입학 성적에 따른 서열을 해체한다. 실현만 된다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또한 이는 과거 대학서열해소 논의에서 주장되던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안보다 한 걸음 진전된 방안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을 공동 선발하는 주장이 아니라 우선 대학 간의 교육 환경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교육평론가 이범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대학 서열은 1인당 지원되는 교육비의 서열과 같은 궤를 갖고 있다. 서울대가 1년에 학생 1인에게 투입하는 교육비는 무려 4,800만원, 연세대와 고려대는 2,700만원 대라고 한다. 4년제 대학에서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800만원인 곳도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누구라도 서울대, 연고대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아무리 출신 대학이 주는 음서를 없앤다고 해도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대학 간 서열을 해소하려는 정책은 대학 간의 교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대학 간의 서열을 해소한 뒤에야 비로소 기회로서의 대학 교육을, 고등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각 대학마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과에 집중할 수도 있게 된다.

유럽의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입시 제도도 기회로서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송도에 들어와 있는 유럽의 대학 중 벨기에에 소재한 겐트대학이 있다. 영국의 세계대학평가에서 종합 130위에 랭크되어 있고, 특히 수의학, 농생명과학 12위,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각각 11위, 12위, 34위에 랭크되고 있다. 참고로 서울대학은 2020년에 37위에 랭크됐다. 겐트대학의 입시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입학 시험을 집에서 컴퓨터로 응시하게 한다. 옆에서 누가 가르쳐 줄 가능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다. 왜 그럴까? 우리 대학에 들어오고 싶으면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이다. 그러나 졸업은 만만치 않다. 졸업을 위한 학습과정이 보통 어렵고 힘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 당시의 성적은 크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입시 관계자의 말이다.

독일은 대학입학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고, 경쟁이 있는 곳은 2-3년만 기다리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같은 취지를 갖고 있다. 특히 독일의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비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로 간주되고 있다. 대학 교육은 누구에게나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학 입학에서 추첨을 활용하는 국가도 있다. 대학 입학을 보상이 아닌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방식이다.

4. 기회로서의 대학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

- 성인학습자(만학도) 전형 확대

아무때나 공부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만학도)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기회로서의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성인학습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만학도이다. 만학도 전형은 나이가 꽤 든 사람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정원을 할당해서 기회를 주는 제도로써 현재 국내 여러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입학 전형이다. 보통 27세 이상~30세 이상의 직장인이라는 지원자격 제한을 걸고 있고, 숫자도 입학 정원에서 정원의외로 2~3% 정도를 허용하고 있다. 만일,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성인학습자 전형을 정원 내에서 최소 20%이상 운영한다면 어떨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났다면 누구나 성인학습자 전형을 쓸 수 있게 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굳이 바로 대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어느 대학이라도 20% 정도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3년을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

1) 필요성

성인학습자 전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미래 사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 둘째, 평생학습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관습을 탈피해서 대학 진학의 시기를 자신의 삶의 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교육이 분리되어야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대입과 고교 교육이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는 어떤 대입제도의 변화도 왜곡될 수밖에 없고, 대입에 종속된 고교교육의 파행도 해결할 수 없다.
- 넷째, 연간 출생아 숫자가 30만이 안되는 상황에서, 30만이 넘는 4년제 대학의 학생 수를 확보하려면, 대학 교육을 모든 국민에게 학습의 기회로 보장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대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2) 성인학습자 전형 운영 방법

어떻게 성인학습자 전형을 운영할 것인가?

우선,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3년이 지난 사람 누구나에 해당한다. 단,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지 최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지원할 수 없게 한다.(1학년에 그만두면 3년 경과 후, 2학년에 그만두면 2년 경과후, 3학년에 그만두면 1년 경과 후, 4학년에 그만두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전형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고교 시기의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만일 고교 성적을 반영하게 되면 성인학습자 전형 실시를 통해 노리는 고교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게 되고, 수능 성적을 반영하게 되면 3년 내내 수능만 준비할 수도 있다. 3년의 시간 동안 학생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었는지를 자기 소개서나 면접을 통해 파악하고, 논술 등을 통해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전형 비율은 대학이 변화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한다. 2025년 정도에 모든 대학에서 입학 정원의 3%를 정원외로 선발하게 한 뒤 2~3%씩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단, 3%를 넘는 비율은 반드시 정원 내에서 확보하게 해서 대학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막는다. 이렇게 되면 26년 5% → 27년 7%

→ 28년 10% → 29년 13% → 30년 15% → 31년 17% → 32년 20%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20%가 넘는 정원도 대학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성인학습자 전형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

성인학습자 전형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첫째, 고질적인 대학 입시 경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리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입시경쟁으로 파행되어 왔다. 해외에서 아무리 좋은 입시 방법을 도입한다 해도 치열한 입시경쟁 구조 속에서 제도의 왜곡, 사교육 폭증으로 원래 취지를 상실하고 만다.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교육이 분리될 수 있다면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교육학적 타당성만을 고려하면서 교육제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둘째,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졸업 직후에 바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학생들은 대입에 대한 고려없이 흥미와 관심에 따른 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여유를 갖고 다양한 도전과 실패 속에 청소년기를 살 수 있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다양한 삶의 전환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 사람마다 자신을 이해하면서 소질과 적성을 찾고 꿈을 찾는 시기는 다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행, 인턴십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군에 다녀올 수도 있다. 이 시간 동안 자신과 꿈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면서 인생의 방향과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성인학습자 전형을 위한 지원정책

성인학습자 전형을 실시하려면, 사회적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대학서열해소 로드맵의 제안과 같이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되고, 성인학습자 전형 역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둘째, 성인학습자 전형이 확대되려면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대학 생활 중에 생활비를 지원해서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직장을 다니다가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위해 다시 대학에 지원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학습을 위한 휴·복직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고교 졸업후 다양한 전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여행학교, 창업학교, 기술학교, 농업학교, 수산업학교, 임업학교, 건축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청년 복지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도 교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한다.

5. 나가며

사람이 가진 능력은 다양하다. 전통적 시험에서 강조되던 능력은 사람이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능력은 너무도 다양하다. 특히, 자연을 보면서 경탄할 수 있는 능력, 몸을 사용하는 능력, 손을 쓰는 능력,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공동체에 대한 기여 의지와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능력에 따른 보상과 사회적 지위의 배분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수용한다 해도, 사람이 가진 능력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능력 계발의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자신 혼자 만들어 낸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쓰임새와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능력임을 인식하게 해서, 능력에 대한 보상을 다시 그 누군가에게로 자발적인 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될 때,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의 길이 보일 것이다.

빛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빛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함을 가진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마음이 생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앞 선 세대가 아이들에게 주는 도움이고 빛이다. 얻을 보상을 위해 혼자서 죽도록 노력하고 스무 살에 잠깐 빛을 본 뒤 이후에는 자기 세계에 갇힌 암흑만 보게 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 속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주고, 그 능력으로 자신과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앞 선 세대의 의무라 할 것이다.

■ 제3세션 토론3

‘공정’ 이 아닌 ‘정의’ 로, 능력주의 넘어 경쟁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이서연(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활동가)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인가

청년들은 공정성에 민감하다, 공정한 경쟁을 중시한다, 라는 진단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혹자는 이들을 일컬어 ‘공정세대’ 라 지칭하기도 한다. 실제로 2020년 통계청, 서울연구원, 한국일보의 설문, 올해 국민일보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 는 인식이 청년들의 중론인 듯 보인다.⁵⁷⁾

또 청년들은 자기계발 중독이라고 할 만큼 다방면으로 자신을 가꾼다. 학점 관리,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등 스펙 쌓기 외에도 재테크, 투자에도 열심이다. 뿐만 아니라 ‘미라클 모닝’ 으로 자신의 루틴을 개조하고, 외모 관리, 취미 활동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조차 경쟁과 스펙의 차원에서 임한다.⁵⁸⁾ 이를 말미암아, 청년세대는 얼마간 경쟁 지향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⁵⁹⁾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절차적 공정성’ 을 보장하여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운동장을 만들자는 논의로 호를 공산이 크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운동장은 그대로 둔 채 운동장을 감시하는 일에 그칠 것이다.

57)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려는 듯 요즘 정치인과 대선후보들은 하나 같이 ‘공정’ 을 강조한다. 인식 조사 출처는 순서대로 통계청(2020),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서울연구원(2020),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 조사》;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MZ세대 3명 중 2명이 부정적”, <한국일보>, 2020년 1월4일; “‘공정? 미래? 헬조선엔 없어요’ 경쟁에 탈탈 털린 Z세대”, <국민일보>, 2021년 6월 24일.

58) 윤민재(2020), <한국사회의 경쟁과 자기계발, 그리고 자아테크놀로지: 청년세대 문제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2), 1258쪽.

59) 사실 경쟁 추구 경향은 오히려 기성세대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준석 바람’ 이끈 ‘이남자 현상’ 은 과대표장됐다”, <한국일보>, 2021년 6월 14일.)

경쟁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푸코의 ‘자아테크놀로지’ 개념⁶⁰⁾을 재해석해 현대사회의 자기계발을 분석한 여러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자아테크놀로지’를 온전한 주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한다.⁶¹⁾ 개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사실 사회구조적 영향 아래 놓여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삶의 질과 자기계발을 분석한 한 연구⁶²⁾에서는 성별, 대학 순위에 따른 자기계발 투자 시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여성일수록, 흔히 대학 순위가 낮다고 여겨질수록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원분배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동기에 기반하여 획일화된 생애과정을 강요당하고 있다.”⁶³⁾ 이렇게 한국사회 경쟁 질서를 내면화한 청년들은 시험이 아닌 ‘공정’을 상상하지 못한다. 질문이 곧 ‘딴짓’이 되어버리는 경쟁체제, 권리를 누리기 전 먼저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시간들, 가만히 있어도 뒤쳐진다는 두려움이 일부 청년들을 자기계발과 공정성에 대한 집착으로 내모는 것 아닐까.

운동장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기계발에 몰두하며 공정을 얘기하는 청년이 절대다수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만이 늘 더 크게 들린다. 사실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자체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 ‘4년제 대학, 서울·수도권 거주, 중산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 이 청년들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을까.

무수히 많은 연구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학벌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

60) “푸코의 자기테크놀로지 개념은 “행동의 지휘(conduct of conduct)”를 의미한다. 즉 개별인간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행동’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지휘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를 ‘스스로에 대한 통제(self-government)’라고 설명한다.” (Foucault(1991) “Governmentality.” In L. H. Martin, H. Gutman and P. Hutton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arvester Wheatsheaf; 오찬호(2011), <대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 시간강사, 타임오프제, 교내 환경미화원 문제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4, 242쪽에서 재인용).

61) 오찬호(2011), 위의 글; 김건순·김남진·오세일(2017), <한국 대학생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사회과학 연구》, 24(2), 259-294쪽; 윤민재(2020) 앞의 글 등.

62) 김건순·김남진·오세일(2017), 위의 글, 282쪽.

63) 박효민(2019),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39쪽.

을 증명한다. 차별적으로 만들어진 학력·학벌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청년기 기회불평등을 분석한 한 연구⁶⁴⁾에서는 청년세대 내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가족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계층화된 낙관주의’라 표현한다. 성별, 학력뿐만 아니라 가족 배경이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기회 모두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타고난 계’ 없는 청년들이 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다. 플랫폼 노동, 알바노동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는 비정형 노동에 저학력·빈곤 청년들이 종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능력주의의 아주 피상적인 부분인 협의의 공정, 즉 절차의 공정성 보장 논의에 치중하고 있다. ‘공정’하고 불평등한 능력주의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이념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그 사회 어디에도 사회적 소수자의 얼굴을 한 사람은 없다.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한편으로는 이른바 ‘요즘 것들’ 담론이 상존하는데, 이처럼 청년들의 이기주의와 보수화를 우려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대개 이런 논의는 특정 집단과 특정 세대를 혼계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청년세대는 성별을 떠나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높은 기회비용을 치르면서도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노동의 수렁을 견뎌야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계급적 현존을 고찰하는 것이 우선이다.⁶⁵⁾

사실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분배를 선호하는 현상은 세대를 넘어 한국인 공통의 성향⁶⁶⁾으로,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다. 능력주의에 천착하는 사회비평가 박권일은 능력주의를 ‘이상적 능력주의’와 ‘현실적 능력주의’로 구분하며 한국의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지대 추구(rent seeking)’을 위시한 능력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⁶⁷⁾

64) 김영미(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48쪽.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조차 가족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65) 허성학(2020), <‘20대 남자 현상’이 던지는 질문 -청년세대의 계급적 조건을 담론화하지 못하는 정치성 정치에 대하여->, 《진보평론》, 85, 267쪽.

66) 한국리서치(2018),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 조사 보고서》, “한국인의 능력주의 성향은 계급이나 정치의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일반적이다. 능력, 노력에 따라 보상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답변...(은)세대, 소득, 학력, 정치성향 등 거의 모든 범주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박권일(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세계》, 12쪽.)

67) 한국의 능력주의는 실력과 기여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부모의 지위나 부의 수준,

세습된 자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노동 소득을 뛰어 넘은 지 한참 오래다. ‘노오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협소해 진 까닭에 설핏 공정해 보이는 서열 매기기 시험만이 몇 없는 동아줄로 남았다. ‘헬조선’, ‘수저론’을 지나 ‘벼락거지’라는 자조로 청년들의 무망감(hopelessness)이 커지고 있다. 세대와 성별을 떠나 공정을 부르짖는 외침에는 레이스에서 탈락하고 싶지 않다는 불안이 있을 것이다.

‘이상적 능력주의’가 불완전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무결함, 능력주의가 보장하는 공정성 때문이 아니다.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더 확보하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우리는 능력주의가 대두되는 현상 그 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능력주의를 수단 삼는 세습-경쟁체제를 바꿔야

근 몇 년간 뜨거웠던 공정성 담론 속에서 수시 전형 폐지와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사법고시 등 각종 고시 부활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재등장했다.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는 낡은 생각이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의 서열이 매겨지는 현상이 과연 공정한가? “한국의 ‘결정적 시험’은 강력한 지대 효과를 창출한다. 즉, 어떤 생산적 기여 없이도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합격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진다. 그것이 ‘시험-지대(exam-rent)’이다.”⁶⁸⁾ ‘결정적 시험’의 대표적 사례로는 대입 시험, 즉 수능이 있다. 한국에서는 과거처럼 신분 자체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학력·학벌을 통해 계급을 대물림 한다. 그러므로 현 대입 시험은 사교육 광풍의 종착지이기도 하다. 출신학교에 갖든 물신성은 한국의 교육을 계급 세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세습-경쟁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 교육의 근원지인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안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시행이다. 실제로 출신학교가 채용 현장에서 쓰이는 모습을 보면, 출신학교 등급, 졸업 연도 등이 차별적으로 평가된다. 고용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입시로 인해 차별 행위가 완화⁶⁹⁾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민간 기업에서는 학력·학벌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관

학벌 특혜 등 “위장된 신분제”가 작동하는 능력주의다. 이에 반해 ‘이상적 능력주의’는 신분제적 요소가 제거되고 온전한 능력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능력주의다. 박권일(2020), <능력주의 해부를 위한 네 가지 질문>, 《능력주의와 불평등》, 교육공동체 벗, 160-162쪽.

68) 박권일(2021), 앞의 글, 21쪽.

69) “블라인드 채용, 학벌·성별 차별 줄였다”, <한겨레>, 2021년 9월 9일.

행이 남아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2016년 이후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던 사이 불법·탈법적 학력차별이 깊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났다. 올해는 28곳의 사립대학에서 지원자에게 학력 배점과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해 차별적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⁷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피해자의 권리와 차별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한하여 벌칙 규정도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업의 사적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하지만, 출신학교 차별은 자유가 아니다. 외려 방종에 가깝다. 법의 공백으로 인해 출신학교 차별 피해 당사자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기업 내부의 업무 배치나 승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발생하면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 제기가 있어도 증거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법적인 강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입시와 채용 전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없어질 것이며 피해자는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가 더 이상 ‘지대(rent)’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므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위한 잔인한 경쟁 또한 사라질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교육이 본래의 목적이 되찾아 경쟁 아닌 연립하는 교육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이 아닌 ‘정의’

최근 고등교육의 기회마저 가정 형편에 따라 나뉘는 현상이 눈에 띈다.⁷¹⁾ 학력·학벌 간 임금격차에 더해 세대 내 학력 격차마저 크게 벌어질 상황이 우려된다. 그동안 공정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k자 양극화’가 심해지는 실정이다. 양극화 해소, 평등사회를 말하며 오직 공정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공정이 아니라 ‘정의’가 불평등 해소의 선결 조건이다.

우리는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져있다. 능력주의의 ‘공정’은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 안온한 자리를 유지한다. 당장 분배정의 얘기만 꺼내도 사상을 의심받는 경직된 사회에서

70) “사립대학 76%, 직원 채용시 학력 제한…블라인드 채용 시행해야”, <KBS NEWS>, 2021년 6월 1일.

71) “부도 경제력에 좌우되는 ‘대학생’ 될 기회…신입생 ‘K자 양극화’ 심화”, <경향신문>, 2021년 10월 10일.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상상력의 부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더 나은 대안을 상상해야 한다. 그 대안은 불평등을 외면하는 형식적인 공정이 아닌 ‘정의’ 다.

청년 비정규직 임금이 청년 정규직 임금의 61% 수준이다.⁷²⁾ 잇단 산재 사망사고로 이름 없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무엇이 진짜 불공정인가. 고시생 시절 생라면을 씹어 먹은 적이 있다며 가난의 경험을 떠드는 이가 있다. 반면, 학교는 꿈도 못 꾸고 라면은 상식화됐지만 ‘말할 수 없는’ 서발턴(Subaltern)들이 있다. 이들의 경험은 왜 더 자주 얘기되지 않는가.

기회는 이미 불평등하다. 기회 자체가 결코 모두에게 평등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정과 결과의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차별의 근원을 묻는 질문들,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정의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서연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활동가)

72) 통계청(2019), 《고용형태실태조사》

■ 중합토론

■ 종합토론

